

LAW SCHOOL ADMISSION · ESSAY

LEET 논술 실전 완성

조건으로 읽고, 유형으로 쓴다

2018~2027학년도 기출 기반 · 자습용 · 2026년 9월 판

차례

일러두기	5
제0부 시험 이해	7
제0장 LEET 논술의 구조	8
0-1 시험의 형식	9
0-2 2009~2027 출제 형식의 변화	9
0-3 10개년 20문항 지도	10
0-4 자가 진단	10
제1부 기본기	12
제1장 조건 해부	13
1-1 조건이 곧 채점표다	14
1-2 조건의 여섯 종류	14
1-3 핵심어가 요구를 바꾼다	15
1-4 조건을 단락에 배정하기	15
1-5 드릴	16
1-6 드릴 정답과 해설	18
제2장 자료·의견 분류	19
2-1 자료는 네 종류다	20
2-2 대립쌍을 먼저 찾는다	20
2-3 단서와 전제를 읽는다	20
2-4 추론형 자료 — 2027학년도 1번	21
2-5 활용 개수 전략	21
2-6 드릴	22
2-7 드릴 정답과 해설	23
제3장 사례 분석과 비교	24
3-1 사례에서 쟁점을 뽑는다	25
3-2 비교의 네 축	25
3-3 그 차이가 판단을 바꾸는가	25
3-4 유사점·차이점 단락 쓰기	26
3-5 드릴	27
3-6 드릴 정답과 해설	28
제4장 논증과 반박	29
4-1 주장·근거·숨은 전제	30
4-2 반박의 네 기법	30
4-3 양보 후 반박	30
4-4 약한 반박과 강한 반박	31
4-5 드릴	32
4-6 드릴 정답과 해설	33
제5장 한계 인정과 보완	34
5-1 왜 자기 입장의 한계를 쓰는가	35
5-2 한계를 찾는 세 방향	35
5-3 보완과 절충의 경계	35
5-4 문장 틀	36
5-5 드릴	37
5-6 드릴 정답과 해설	38
제6장 900~1200자 답안의 구조와 문장	39

6-1 유형별 표준 틀	40
6-2 첫 단락이 답안의 절반이다	40
6-3 자료 인용을 문장에 녹이기	40
6-4 문장 규칙	40
6-5 원고지와 분량 관리	41
6-6 55분 시간표와 퇴고	41
6-7 드릴	42
6-8 드릴 정답과 해설	43

제2부 유형별 실전 44

제7장 A형 — 정책·입법안 선택형 45

7-1 A형은 어떤 문제인가	46
7-2 A형을 푸는 여섯 단계	47
7-3 대표 문항 풀해설	49
대표 문항 1 2026학년도 1번 — 성형수술 입법안	49
대표 문항 2 2025학년도 1번 — 비영리법인 설립	53
7-4 연습 문항	57
연습 1 2018학년도 1번 — 의료 빅데이터	58
연습 2 2018학년도 2번 — 세대 간 갈등	61
연습 3 2020학년도 2번 —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65
연습 4 2021학년도 1번 — 과거청산 입법안	68
연습 5 2022학년도 1번 — 데이터 독점 정책	71
연습 6 2023학년도 1번 — 가상화폐 '리오' 규제	74
연습 7 2026학년도 2번 — 청소년 생성형 AI 규제	77
7-5 A형 점검표	80
7-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81
연습 1 2018-1 의료 빅데이터	81
연습 2 2018-2 세대 간 갈등	82
연습 3 2020-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83
연습 4 2021-1 과거청산 입법안	84
연습 5 2022-1 데이터 독점 정책	85
연습 6 2023-1 가상화폐 '리오' 규제	86
연습 7 2026-2 청소년 생성형 AI 규제	87

제8장 B형 — 두 사례 비교형 88

8-1 B형은 어떤 문제인가	89
8-2 B형을 푸는 여섯 단계	89
8-3 대표 문항 풀해설	90
대표 문항 1 2023학년도 2번 — 가스기지와 중계탑	90
대표 문항 2 2024학년도 2번 — 봉쇄와 사이버 보안	94
8-4 연습 문항	98
연습 1 2019학년도 1번 — 구조 의무	99
연습 2 2022학년도 2번 — 수문장과 배심원	102
8-5 B형 점검표	105
8-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106
연습 1 2019-1 구조 의무	106
연습 2 2022-2 수문장과 배심원	107

제9장 C형 — 관점 택1·반박형 108

9-1 C형은 어떤 문제인가	109
9-2 C형을 푸는 여섯 단계	109
9-3 대표 문항 풀해설	110
대표 문항 1 2021학년도 2번 — 타인사칭 재판	110
대표 문항 2 2024학년도 1번 — 벽화 철거	114
9-4 연습 문항	118

연습 1 2020학년도 1번 — 형법 해석	119
연습 2 2025학년도 2번 — 출생 보조금	122
9-5 C형 점검표	125
9-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126
연습 1 2020-1 형법 해석	126
연습 2 2025-2 출생 보조금	127
제3부 배경 개념 도구상자	128
제10장 법의 해석과 재판	129
10-1 법의 목적 사이의 긴장	130
10-2 재판과 사실인정	131
제11장 권리와 그 한계	132
11-1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133
11-2 의무와 관계	134
제12장 자유 · 해악 · 후견	135
12-1 국가는 언제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가	136
12-2 위험과 예방	137
제13장 규제와 신기술	138
13-1 규제의 형식과 주체	139
13-2 누가 결정하는가	140
13-3 데이터와 기술의 책임	140
제14장 공정 · 분배 · 조세	142
14-1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걷는가	143
14-2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	144
제15장 민주주의와 대표	146
15-1 누가 통치하는가	147
15-2 정당한 절차와 과거의 청산	148
제4부 실전 모의고사	149
제16장 실전 모의고사	150
16-1 모의고사 사용법	151
모의고사 1회 · 1번 공공장소 얼굴인식 조례안	152
모의고사 1회 · 2번 약속의 변경 — 세금 감면과 장학금	154
모의고사 2회 · 1번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156
모의고사 2회 · 2번 지역 청년 유출 대책	158
모의고사 3회 · 1번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160
모의고사 3회 · 2번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	162
최종회 · 1번 2027학년도 1번 — 점포세 과세 방식	164
최종회 · 2번 2027학년도 2번 — 국가평의회 구성	166
16-6 해설과 예시답안	168
1회 1번 공공장소 얼굴인식 조례안	168
1회 2번 약속의 변경	169
2회 1번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170
2회 2번 지역 청년 유출 대책	171
3회 1번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172
3회 2번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	173
최종회 1번 2027학년도 1번 — 점포세 과세 방식	174
최종회 2번 2027학년도 2번 — 국가평의회 구성	175
부록 참조 자료	176
부록 A 2018~2027학년도 문항 일람	177
부록 B 문항별 조건 체크리스트	178

부록 C 답안 평가 기준	180
부록 D 원고지 양식	181
부록 E 자주 하는 실수 20	184

일러두기

이 책은 2018~2027학년도 LEET 논술 기출 20문항을 바탕으로 만든 자습용 교재다. 기출을 연도순으로 풀지 않고 **능력 → 유형 → 실전** 순서로 다시 묶었다. 같은 기출을 1부에서는 부분 훈련 재료로, 2부나 4부에서는 완전한 문항으로 두 번 만나게 된다.

■ 이 책의 구성

부	내용	용도
0부 시험 이해	시험 형식, 출제 변화, 10개년 지도, 자가 진단	먼저 읽기
1부 기본기	조건 해부 · 자료 분류 · 사례 비교 · 논증과 반박 · 한계와 보완 · 답안 구조 (1~6장)	드릴로 훈련
2부 유형별 실전	A형 정책·입법안 선택형 · B형 두 사례 비교형 · C형 관점 택1형 (7~9장)	풀해설 → 연습
3부 배경 개념	법 해석과 재판 · 권리 · 자유와 후견 · 규제 · 분배와 조세 · 민주주의 (10~15장)	참조·병행
4부 실전 모의고사	신작 3회 + 2027학년도 최종회 (16장)	시간 재고 실전
부록	문항 일람 · 조건 체크리스트 · 평가 기준 · 원고지 · 자주 하는 실수 20	수시 참조

■ 학습 계획

주	8주 과정	12주 과정
1	0장 자가 진단 · 1~2장	0장 자가 진단 · 1장
2	3~4장	2장 · 10~11장 병행
3	5~6장 · 10~12장 병행	3장 · 12장 병행
4	7장 A형 (대표 + 연습 1~3)	4장 · 13장 병행
5	7장 연습 4~7 · 13~15장 병행	5~6장 · 14~15장 병행
6	8장 B형	7장 대표 + 연습 1~3
7	9장 C형	7장 연습 4~7
8	16장 모의고사 1~3회, 최종회	8장 B형
9	—	9장 C형
10	—	16장 1~2회 · 오답 다시 쓰기
11	—	16장 3회 · 부록 E 점검
12	—	16장 최종회(2027) · 전체 복습

■ 이렇게 공부한다

1. 드릴과 연습 문항은 **반드시 손으로 쓴 뒤** 정답과 해설을 본다.
2. 연습 문항과 모의고사는 문항당 55분을 켜다. 설계 17분, 작성 33분, 검토 5분이다.
3. 다 쓴 답안은 부록 C의 평가 기준으로 스스로 채점하고, 가장 낮은 영역의 1부 장으로 돌아간다.
4. 3부는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 2부에서 막히는 개념이 있을 때 해당 장을 찾아 읽는다.

■ 표기와 기준

- 글자 수는 원고지 기준으로 **공백을 포함**해 센다. 예시답안 머리에 적힌 글자 수도 같은 기준이며, 모든 예시 답안은 조건의 분량 범위 안에 있다.
- 기출 원문은 시행 당시 문제지를 옮겨 적었다. 줄바꿈과 일부 문장부호는 지면에 맞게 조정했다.
- 2018학년도 문항은 배점과 분량이 현재 형식과 다르다. 원래 조건을 그대로 두었다.

- 예시답안은 정답이 아니라 **가능한 좋은 답안의 한 예**다. 대표 문항에는 서로 다른 입장의 예시답안 두 편을 실었다.
- 4부의 모의고사 1~3회는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 만든 문항이다. 사례의 국가·인물·수치는 모두 가상이다.

제0부

시험 이해

LEET 논술이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묻는지 확인한다. 2009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의 변화를 훑고, 최근 10년 20문항의 지도를 그린 뒤, 첫 답안을 써서 현재 실력을 진단한다.

제0장

LEET 논술의 구조

0부 시험 이해 | 연결 기출: 2009~2027학년도 전체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0-1 시험의 형식	9
0-2 2009~2027 출제 형식의 변화	9
0-3 10개년 20문항 지도	10
0-4 자가 진단	10

0-1 시험의 형식

LEET 논술은 법학적성시험의 제3교시로 치러진다. 최근 형식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시간	110분
문항	2문항, 각 50점
분량	문항별 900~1200자
답안지	원고지 형식. 수정할 때에는 원고지 사용법을 따른다(2009학년도 예비시험 유의사항).
감점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매년 문제지 확인 사항)
반영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체 기준으로 평가해 전형에 반영한다.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지원 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한다.

두 문항이 같은 배점이므로 한 문항에 시간을 몰아 쓰면 안 된다. 이 책은 문항당 55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설계 17분, 작성 33분, 검토 5분이다.

LEET 논술이 재는 것

문제지에는 법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실정법적 판단은 제외할 것”(2019), “소급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 것”(2021)처럼 법 지식을 쓰지 못하게 막는다. LEET 논술이 재는 것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규범적 판단을 세우고, 조건에 맞추어 설득하는 능력**이다.

0-2 2009~2027 출제 형식의 변화

시기	구성	성격
2009~2011	3문항 또는 2문항. 요약·비교 20~40점 + 논술 50~60점	인문 논술. 고전 사상과 철학 제시문을 요약·비교하고 견해를 쓴다.
2012~2018	2문항. 1번 900~1200자(40점), 2번 1300~1600자(60점)	과도기. 1번은 연설문·토론 발언·변론문·반박문 등 형식이 다양하고, 2번은 사례 해결에 제시문 평가를 더한다.
2019~2027	2문항 × 50점, 모두 900~1200자	〈사례〉 + 〈관점·의견·자료〉 + 〈조건〉 틀로 고정된다.

2019학년도 이후 9년 동안 형식이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조건의 세밀함이다. 자료 활용 개수의 하한(3개 → 4개 → 5개 이상), 배제 조건(절충론·시기상조론), 자기 입장의 한계와 보완(2027) 같은 조건이 차례로 더해졌다.

0-3 10개년 20문항 지도

2018~2027학년도 20문항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 책의 2부는 이 세 유형을 한 장씩 다룬다.

학년도	1번	2번
2027	A형 · 점포세 과세 방식	C형 · 국가평의회 구성
2026	A형 · 성형수술 입법안	A형 · 청소년 생성형 AI 규제
2025	A형 · 비영리법인 설립	C형 · 출생 보조금
2024	C형 · 벽화 철거	B형 · 봉쇄와 사이버 보안
2023	A형 · 가상화폐 ‘리오’ 규제	B형 · 가스기지와 중계탑 철거
2022	A형 · 데이터 독점 정책	B형 · 수문장과 배심원
2021	A형 · 과거청산 입법안	C형 · 타인사칭 재판
2020	C형 · 형법 해석	A형 ·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2019	B형 · 구조 의무	(자료 미확보)
2018	A형 · 의료 빅데이터	A형 · 세대 간 갈등

유형	핵심 과제	문항 수	이 책
A형	정책·입법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를 평가	10	7장
B형	두 사례의 유사점·차이점 → 판단 평가	4	8장
C형	관점 하나를 골라 강화하고 나머지를 반박	5	9장

■ 반복되는 주제

- **신기술과 규제** — 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독점, 가상화폐, 사이버 보안, 생성형 AI (13장)
- **법의 해석과 재판** — 형법 해석, 타인사칭 재판, 수문장과 배심원 (10장)
- **권리와 그 한계** — 구조 의무, 소유권과 권리남용, 벽화 철거 (11장)
- **자유와 후견** — 성형수술, 청소년 AI 규제, 봉쇄 조치 (12장)
- **공정·분배·조세** — 세대 갈등, 출생 보조금, 점포세 (14장)
- **민주주의와 대표** — 과거청산, 국가평의회 (15장)

0-4 자가 진단

본문을 읽기 전에 한 문항을 먼저 써 본다. 지금 실력을 알아야 무엇을 먼저 고칠지 정할 수 있다.

실전 팁

1. 7장의 대표 문항 2(2025학년도 1번, 비영리법인)를 펴서 원문만 읽는다. 해설은 보지 않는다.
2. 55분을 재고 답안을 쓴다. 이 장 끝의 작성란이나 부록 D의 원고지 양식을 쓴다.
3. 부록 C의 평가 기준으로 스스로 채점한다. 영역별 점수를 아래 표에 적는다.
4.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1부의 장부터 공부한다.

평가 영역(부록 C)	내 점수	점수가 낮으면 먼저 볼 장
조건 충족 (30)		1장 조건 해부
논증의 타당성 (25)		4장 논증과 반박, 3장 사례 분석
자료 활용 (20)		2장 자료·의견 분류
반박·평가·보완 (15)		4장, 5장
구성·표현·분량 (10)		6장 답안의 구조와 문장

한 줄 약 40자 · 자가 진단 · 2025학년도 1번 · 900~1200자

제1부

기본기

조건을 읽고, 자료를 다루고, 사례를 비교하고, 논증하고 반박하는 능력을 하나씩 떼어 훈련한다. 각 장은 기출의 한 장면으로 시작해 원리를 정리하고, 드릴 세 세트에 손에 익힌다. 드릴의 정답은 각 장 끝에 있다.

제1장

조건 해부

1부 기본기 | 연결 기출: 2018~2027학년도 20문항의 〈조건〉 전체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1 조건이 곧 채점표다	14
1-2 조건의 여섯 종류	14
1-3 핵심어가 요구를 바꾼다	15
1-4 조건을 단락에 배정하기	15
1-5 드릴	16
1-6 드릴 정답과 해설	18

1-1 조건이 곧 채점표다

2027학년도 2번의 조건은 네 개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요구를 세어 보면 일곱 개가 넘는다.

〈조건 — 2027학년도 2번〉

- (1) P국의 시민으로서 정치인 A, B, C의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지하고, 다른 두 견해를 반박할 것
- (2)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지지와 반박의 이유를 제시할 것
- (3) 자신이 지지한 견해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단, 극복 방안으로 자신이 반박한 견해를 활용하지는 말 것
- (4) 정치인 A, B, C의 견해는 견해A, 견해B, 견해C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번호	조건 요구	출처
1	세 견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1)
2	선택한 견해를 지지한다	(1)
3	나머지 두 견해를 각각 반박한다	(1)
4	의견을 4개 이상 쓴다	(2)
5	의견을 지지의 이유와 반박의 이유 양쪽에 쓴다	(2)
6	지지한 견해의 한계를 밝힌다	(3)
7	그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다	(3)
8	극복 방안에 반박한 견해를 쓰지 않는다	(3) 단서
9	견해A·의견① 형식으로 표기한다	(4)

채점자는 이 요구들이 답안에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논리가 훌륭해도 요구 하나가 빠지면 그 몫의 점수는 없다. 그래서 조건 해부는 **동사 단위로 조건을** 일에서 시작한다.

1-2 조건의 여섯 종류

20문항의 조건은 거의 다음 여섯 종류의 조합이다.

종류	요구	기출 문구의 예
선택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1개의 입법안을 선택하고”(2026-1),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2021-2)
반박·평가	고르지 않은 것을 다룬다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2020-1), “다른 2개의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2026-1)
활용 개수	자료를 일정 개수 이상 쓴다	“자료를 모두 논거로 활용할 것”(2018-1), “5개 이상의 〈여론〉을”(2023-1)
표기	자료·관점의 출처를 정해진 형식으로 적는다	“의견①, 의견②와 같은 방식으로”(2026-1), “㉠, ㉡와 같은 방식으로”(2020-1)
배제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한다	“실정법적 판단은 제외할 것”(2019), “시기상조론이나 절충론은 배제할 것”(2026-1)
추가 과제	형식·순서·부가 요소를 정한다	“각 〈사례〉의 문제점을 요약하고”(2025-1), “주장을 먼저 요약할 것”(2024-1), “의견서를 작성할 것”(2021-1)

1-3 핵심어가 요구를 바꾼다

조건 문장에서 한 단어가 요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핵심어는 볼 때마다 표시해 둔다.

핵심어	요구하는 것	기출
각, 각각	대상마다 따로 처리한다. 둘을 묶어 한 문장으로 끝내면 안 된다	2025-1, 2022-2
모두, 전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불리한 자료도 써야 한다	2018-1, 2021-2
N개 이상	하한이다. 하한보다 1~2개 더 쓰는 것이 안전하다	2022-1, 2023-1
우선, 가장 먼저	시급성이나 우선순위의 기준을 밝혀야 한다	2026-1
반박 / 평가	반박은 부정, 평가는 장점을 인정한 뒤 한계를 짚는 것	2021-2 / 2026-1
일관되게	하나의 원칙을 모든 사례에 똑같이 적용한다	2020-2
먼저, 순서에 따라	답안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2024-1, 2019-1
새로운 논거	제시문에 없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2024-1, 2025-2
단, ~하지 말 것	허용 범위의 경계. 위반하면 감점 폭이 크다	2027-2, 2026-1

자주 하는 실수

‘반박’과 ‘평가’를 같은 것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2026-1은 다른 두 안을 **평가**하라고 했다. 평가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낮다”처럼 장점과 한계를 함께 말하는 것이다. 무조건 틀렸다고 쓰면 평가가 아니라 반박이 된다.

1-4 조건을 단락에 배정하기

쪼개 요구마다 답안의 어느 단락에서 처리할지 정한다. 2024학년도 2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조건	쪼개 요구	단락	분량
1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	①	약 250자
2	의견을 활용해 〈사례 1〉 논평	②	약 200자
2	의견을 활용해 〈사례 2〉 논평	③④	약 450자
2	자신의 견해	⑤	약 150자
3·4	의견 4개 이상, 의견① 형식	②~⑤ 전체	—

이 배정표가 있으면 쓰는 도중에 “지금 어느 요구를 처리하고 있는가”를 잃지 않는다. 검토할 때는 배정표를 보며 요구마다 답안의 해당 문장에 표시해 본다.

1-5 드릴

드릴 1 조건을 동사 단위로 쪼개기

다음 조건을 읽고 쪼개는 요구를 모두 적으시오. 괄호 안의 수는 쪼갤 수 있는 요구의 개수다.

(가) 2022학년도 2번 (5)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시오. (2) 〈사례 1〉의 수문장 및 〈사례 2〉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이때 (1)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관점〉을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시오. (3) 관점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나) 2025학년도 2번 (5)

“1. 〈사례〉의 갑과 을의 발표 중 지지하는 견해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할 것 2. 〈의견〉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선택한 견해를 강화하고, 지지하지 않는 견해를 반박할 것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다) 2021학년도 1번 (5)

“1. 입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할 것 2.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제시할 것 3. 입법안을 활용할 때는 가①, 나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4. 소급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 것”

드릴 2 요구를 단락에 배정하기

2026학년도 2번의 조건을 쪼개고, 900~1200자 답안의 단락에 배정하시오.

“(1) 〈의견〉을 활용하여 K국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박하시오. (2) 정책A와 정책B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시오.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⑧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시오.”

조건	조건 요구	단락	분량

드릴 3 조건 위반 찾기

다음은 실제 기출에 대한 답안의 일부다. 각 문장이 어느 조건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쓰시오.

- (2026학년도 1번) “2안을 우선 제정하되, 3안의 취지를 살려 미성년자 성형은 부모 동의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1학년도 1번) “입법안은 독재 정권 시기의 행위를 새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소급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 (2020학년도 2번) “〈사례 1〉의 야생동물은 포지티브 규제, 〈사례 2〉의 주차 공유는 네거티브 규제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 (2024학년도 1번, 병 선택) 답안의 첫 문장: “을의 입장은 소유권을 절대화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2018학년도 1번) 자료 ①~⑥ 가운데 ①②③⑤⑥만 쓴 답안

1-6 드릴 정답과 해설

드릴 1 정답과 해설

(가) ① 두 사례의 유사점을 밝힌다 ② 차이점을 밝힌다 ③ 수문장의 판단을 평가한다 ④ 배심원들의 판단을 평가한다 ⑤ 평가의 근거로 (1)의 유사점·차이점과 관점을 **함께** 쓰고, ㉠ 형식으로 표기한다. — 평가의 근거에 유사점·차이점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나) ① 갑과 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② 선택한 이유를 기술한다 ③ 의견 또는 새로운 논거로 선택한 견해를 강화한다 ④ 지지하지 않는 견해를 반박한다 ⑤ 의견① 형식으로 표기한다. — ‘활용하거나 새로운 논거를’이므로 의견만 써도 되지만, 새로운 논거를 하나 더하면 강화가 분명해진다.

(다) ① 의견서 형식으로 쓴다 ② 입법안을 평가한다 ③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제시한다 ④ 가① 형식으로 표기한다 ⑤ 소급입법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 ‘의견서’는 수신자를 향한 공적 문서라는 형식을 요구한다.

드릴 2 정답과 해설

조건	조건 요구	단락	분량
(1)	K국의 결정에 대한 입장(지지 또는 반박)	①	약 150자
(2)	정책A의 장점과 단점	②	약 200자
(2)	정책B의 장점과 단점, A와의 비교	②③	약 250자
(1)	의견을 활용한 지지·반박의 근거 — 정책의 내용과 결정 과정	④⑤	약 400자
(3)	의견① 형식 표기	전체	—

주의: 지지·반박의 대상은 정책B 자체가 아니라 **여론에 반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한 K국의 결정**이다. 결정 과정(여론, 전문가 자문)도 평가 대상이 된다.

드릴 3 정답과 해설

- 조건 (2) “절충론 배제” 위반. 선택하지 않은 3안의 원리를 끌어와 합쳤다.
- 조건 4 “소급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 것” 위반.
- 조건 1 “두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 위반.
- 조건 1가 “병의 주장을 먼저 요약할 것” 위반. 요약 없이 반박부터 시작했다.
- 조건 2 “자료를 모두 논거로 활용할 것” 위반. 불리해 보이는 자료 ④를 뺐다. 7장 연습 1의 해설처럼 ④도 재해석해 쓸 수 있다.

제2장

자료·의견 분류

1부 기본기 | 연결 기출: 2023-1, 2024-2, 2025-1, 2026-1, 2027-1, 2027-2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2-1 자료는 네 종류다	20
2-2 대립쌍을 먼저 찾는다	20
2-3 단서와 전제를 읽는다	20
2-4 추론형 자료 — 2027학년도 1번	21
2-5 활용 개수 전략	21
2-6 드릴	22
2-7 드릴 정답과 해설	23

2-1 자료는 네 종류다

최근 기출은 의견·자료·여론을 7~10개씩 준다. 모두 쓸 수도 없고, 모두 쓸 필요도 없다. 먼저 각 자료가 어느 편에 서는지 표시한다. 표시는 네 가지로 충분하다.

표시	뜻	답안에서 할 일
지지	내 입장의 근거가 된다	주장 문장 바로 뒤에 넣는다
반박	내 입장을 공격한다	먼저 인정하고 되받아친다. 최소 하나는 다룬다
양쪽	해석에 따라 어느 편에도 쓰인다	내 쪽으로 해석해 끌어온다 — 고득점 포인트
함정	사례와 느슨하게만 연결된다	억지로 쓰지 않는다. 쓰려면 연결 논리를 만든다

■ '양쪽' 자료의 예

- **2026-1 의견③**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어떤 행동도 개인의 자유” — 규제 반대처럼 보이지만, 타인에게 해를 주는 수술만 막는 2안에는 지지 근거가 된다.
- **2025-1 논거⑤** “범인 뒤에 숨은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 1안에서는 사전 감독의 필요성, 2안에서는 사후 책임 추궁으로 충분하다는 근거가 된다.
- **2027-1 의견⑤** “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 매출추산법의 현장 조사를 지지하는 근거로도, 탁상 결정을 경계하는 일반론으로도 읽힌다.

■ '함정' 자료의 예

- **2026-1 의견⑨** “외모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쳐 성형에 돈을 많이 쓴다” — 세 입법안 어느 것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3안에서 “부모도 같은 외모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동의 요건이 무력하다”는 연결 논리를 만들면 살아난다.
- **2027-2 의견⑩** “왕정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면 혼란이 크다. 우선 입헌군주제로” — 대다수 시민이 왕정 폐지에 공감하고 세 정치인 모두 국가평의회에 동의한 상황이다. 세 견해 가운데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쓰면 사례의 전제를 벗어난다.

2-2 대립쌍을 먼저 찾는다

출제자는 자료를 짝지어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반대되는 자료 두 개를 먼저 찾으면 쟁점이 보이고, 한쪽을 쓰고 다른 쪽을 반박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기출	한쪽	다른 쪽	드러나는 쟁점
2027-2	①선출된 통치자는 눈치를 본다	⑧선택받으려는 사람만 책임 있게 통치한다	선거의 책임성
2027-2	④통치에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⑥통치 능력은 참여 경험에서 길러진다	능력의 원천
2027-1	③여론 반영은 포퓰리즘	⑨여론을 적극 반영해 거부감을 줄여야	여론의 역할
2024-2	①안전은 다른 권리의 전제	②자유가 생명·안전보다 우선	안전 대 자유
2023-1	③'리오'는 자산이다	⑨'리오'는 화폐다	과세 대상의 성격
2022-1	③시장은 장기적으로 합리적	⑧감정이 시장을 광기로 몬다	시장의 합리성

2-3 단서와 전제를 읽는다

자료 문장에는 “~하지 않는 한”, “~라면”, “부득이한 경우라면” 같은 단서가 자주 붙는다. 단서는 자료의 적용 범위를 정한다. 단서를 읽으면 반대편 자료를 내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

기출	자료의 단서	끌어오는 방법
2026-1 ③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2안이 막는 수술은 타인에게 해를 준다 → 자유의 원칙 안에서 금지 가능
2019 을	“동등하거나 우월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면 예외”	A의 학회 참석은 생명보다 우월한 가치인가 → 예외 해당 여부로 판단 분기
2023-2 ③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을 뿐”	“오직”이라는 한정 → 자기 땅을 되찾으려는 목적이 섞였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2026-2 ⑥	“현실적인 해악이 발생하기도 전에”	딥페이크 생성 등 해악이 이미 나타났다 → 이 의견은 사전 금지 전체가 아니라 해악과 무관한 부분의 금지만 막는다

2-4 추론형 자료 — 2027학년도 1번

2027-1은 각 과세 방식을 누가 선호했는지만 알려 주고, 장단점은 스스로 추정하게 했다. 이런 자료는 세 단계로 읽는다.

1. **누가** 선호했는가 — 선호 집단을 나열한다.
2. **왜** 그들에게 유리한가 — 그 집단의 처지(점포 크기, 매출, 권한)를 과세 방식의 계산법과 대조한다.
3. **무엇을** 뜻하는가 — 그 유리함을 방식의 장점이거나 단점으로 일반화한다.

선호 집단	왜 유리한가	드러나는 장단점
현장직 공무원 → 매출추산법	조사일 선택과 매출 추산의 권한을 준다	단점: 재량과 부정의 위험(의견①)
대형·신축 점포 임대인 → 매출추산법	점포 가격·면적이 크므로 가격·면적 기준 과세가 불리하다	장점: 자산이 아닌 수익에 과세
지방 점포 임차인 → 매출추산법	매출이 적어 매출 기준 과세가 유리하다	장점: 수익이 적으면 세금도 적다(의견⑦)
관리직 공무원 → 경기전망법	세율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간편한 행정	장점: 행정 비용이 낮고 명확하다(의견⑥⑩)
소형·낙후 점포 임대인 → 경기전망법	점포 가격·면적이 작아 세금이 적다	장점: 명확·예측 가능 / 단점: 수익과 무관
수도권 점포 임차인 → 경기전망법	매출이 높아도 세금은 가격·면적으로만 정해진다	단점: 수익이 많아도 세금이 늘지 않아 불공평

2-5 활용 개수 전략

- 하한이 있으면 **하한 + 1~2개**를 목표로 한다. 채점자가 표기 하나를 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하한이 없으면 **4~6개**가 무난하다. 너무 많이 쓰면 자료 요약이 논증을 밀어낸다.
- 자료는 주장 문장 안에서 쓴다. “의견②는 ~라고 한다”로 시작하는 문장은 요약이다.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의견②)”처럼 내 주장 뒤에 붙인다.
- 반박할 자료도 활용 개수에 들어간다. 불리한 자료를 인정하고 되받아치는 문장은 활용이자 반박이다.

2-6 드릴

드릴 1 2027학년도 2번 의견 태깅

2027-2의 의견 ①~⑩을 견해A(선거), 견해B(검증 선발), 견해C(비례 추천)에 대해 태깅하시오. 지지는 ○, 반박은 ×, 양쪽은 △, 함정은 ◇로 표시한다. (원문은 16장 최종회에 있다.)

의견	요지	견해A	견해B	견해C
①	시민 눈치 보는 통치자는 미래를 못 본다			
②	다양한 경험·배경 → 치우치지 않는 정책			
③	소수에게만 맡기는 건 자기 지배에 맞지 않다			
④	냉철한 이성 필요, 다수의 열정도 위험			
⑤	통치 기회가 동등해야 시민이 주체			
⑥	통치 능력은 참여 경험에서 길러진다			
⑦	이상보다 삶을 윤곽하게 하는 제도			
⑧	선택받으려는 사람이 책임 있게 통치			
⑨	공익에 헌신할 사람 중에서 찾아야			
⑩	왕정 즉시 폐지는 혼란, 우선 입헌군주제			

드릴 2 대립쌍 찾기

2023학년도 1번의 여론 ①~⑩(7장 연습 6)에서 서로 대립하는 쌍을 세 개 찾고, 각 쌍이 드러내는 쟁점을 한 줄로 쓰시오.

드릴 3 단서로 뒤집기

다음 자료를 괄호 안의 입장에 **유리하게** 쓰는 문장을 하나씩 만드시오.

1. 2024-2 의견② “자유는 생명이나 재산, 안전보다 우선한다.” (〈사례 1〉의 봉쇄 조치는 정당하다)

2. 2025-2 의견⑤ “결혼과 출생에 경제적인 고려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을: 보조금은 부담하다)

3. 2027-2 의견⑧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책임 있게 통치한다.” (견해C)

2-7 드릴 정답과 해설

드릴 1 정답과 해설

의견	A	B	C	해설
①	×	○	△	선거의 단기주의 비판. B·C 모두 반박 근거로 쓸 수 있다
②		×	○	C의 핵심 근거. B의 ‘많이 배운 사람들’ 문제와 연결
③	×	×	×	대표제 자체에 대한 비판. C는 “추첨은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어 자기 지배에 가장 가깝다”로 방어
④	×	○	×	B의 핵심 근거. ‘다수의 열정’은 A도 겨냥한다
⑤	△	×	○	C의 핵심. A는 “피선거권은 모두에게 있다”로 끌어올 수 있다
⑥		×	○	B의 ‘검증된 식견’을 반박
⑦	△	△	△	결과 중심 기준. 어느 견해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논증을 붙이면 쓸 수 있다
⑧	○	×	×	A의 핵심. C를 택하면 ‘한계’로 인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⑨	△	○	△	공익 헌신 — B에 가깝지만 누가 헌신할 사람인지를 가리는 방법에 따라 A·C도 쓸 수 있다
⑩	◇	◇	◇	사례의 전제(왕정 폐지 공감)를 벗어난다

드릴 2 정답과 해설

- ① ↔ ⑧ : ‘리오’를 더 얻으려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가, 당국이 개입할 것인가 — 개입의 정당성
- ③ ↔ ⑨ : ‘리오’는 자산인가 화폐인가 — 과세 대상의 성격
- ④⑦ ↔ ⑥⑩ : 과세가 정당한가 — 과세의 근거와 대상

(그 밖에 ② ↔ ①도 가능하다. 쟁점을 정확히 쓰면 정답이다.)

드릴 3 정답과 해설

1. “자유가 안전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의견②)을 받아들여더라도, 그 자유는 살아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 치명적 감염병 앞에서 일시적으로 외출을 제한한 것은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조치였다.”
2. “아이를 갖는 데 경제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면(의견⑤), 보조금 몇 푼으로 그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생명의 문제를 가격의 문제로 만드는 일이다.”
3. “선택받으려는 욕망이 책임감을 낳는다는 의견⑧은 오히려 선거의 위험을 보여 준다. 그 욕망은 쉽게 인기 영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책임은 선거가 아니라 공개와 기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3장

사례 분석과 비교

1부 기본기 | 연결 기출: 2019-1, 2020-1, 2022-2, 2023-2, 2024-2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3-1 사례에서 쟁점을 뽑는다	25
3-2 비교의 네 축	25
3-3 그 차이가 판단을 바꾸는가	25
3-4 유사점·차이점 단락 쓰기	26
3-5 드릴	27
3-6 드릴 정답과 해설	28

3-1 사례에서 쟁점을 뽑는다

사례는 이야기로 주어지지만, 답안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쟁점**이다. 쟁점은 사례 속에서 두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을 판단을 묻는 질문의 형태로 적은 것이다.

기출	사실	부딪히는 가치	쟁점(질문 형태)
2023-2	흙 있는 절차로 세운 공익시설, 소유자의 철거 요구	소유권 ↔ 공익	절차상 흙이 있는 공익시설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2022-2	법을 문구대로 따른 수문장, 사실을 낮추어 인정한 배심원	법적 안정성 ↔ 구체적 타당성	법을 문구대로 적용한 결과가 불합리할 때 집행자는 문구를 벗어날 수 있는가?
2019-1	의식을 잃은 사람을 두고 떠난 승객과 대리 기사	행동의 자유 ↔ 생명 보호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가? 관계의 차이는 판단을 바꾸는가?
2020-1	명문 규정 없는 행위를 해석으로 처벌	예측 가능성 ↔ 처벌의 필요	법이 예상하지 못한 행위를 해석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실전 팁

쟁점을 한 문장의 질문으로 적어 두면 첫 단락의 “공통 논점”(2023-2 조건 (2))이나 “쟁점을 발견하고”(2020-1 조건 2)에 그대로 쓸 수 있다.

3-2 비교의 네 축

두 사례를 비교할 때 막연히 “같은 점, 다른 점”을 찾으려 하면 사소한 차이에 매달리게 된다. 다음 네 축으로 표를 만들면 판단에 영향을 주는 차이를 빠뜨리지 않는다.

축	묻는 것	2019-1에 적용하면
① 사실관계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두고 떠났다. A는 도로에, C는 주차장에 두었다
② 행위자의 지위·관계	누가, 어떤 관계에서 행동했는가	A는 서비스를 받던 승객(의사), C는 D의 귀가를 맡은 대리 기사
③ 형량되는 이익	어떤 이익과 어떤 이익이 부딪히는가	A: 학회 참석 ↔ B의 생명 / C: 다음 호출 ↔ D의 생명
④ 결과·긴급성·예측 가능성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급박했는가	도로는 곧 발견될 것이라 기대할 만하다. 주차장 차 안은 발견되기 어렵다

3-3 그 차이가 판단을 바꾸는가

차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B형 문항은 결국 **두 사례에 대한 판단이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러려면 찾아낸 차이가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 가려야 한다.

의미 있는 차이를 가리는 질문

“이 차이가 없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까?”

예를 들어 2019-1에서 A가 의사라는 사실은 구조 **능력**의 차이다. C가 대리 기사라는 사실은 보호를 맡은 **역할**의 차이다. 갑의 관점(“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비난할 수 없다”)에서는 역할의 차이가 판단을 바꾸지만, 능력의 차이는 바꾸지 못한다. 을의 관점에서는 두 차이 모두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기출	차이	판단에 영향?	이유
2023-2	B는 시세 2배 매수 제안을 거절했다	있음	철거 요구의 목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관점③)
2023-2	B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다	있음	철거로 B가 되찾는 이용 가치가 작다
2023-2	C는 중계탑이 있는 줄 알고 샀다	다툼 있음	승인으로 볼지, 불법 상태의 인수로 볼지에 따라 갈린다
2023-2	A는 가스회사, D는 통신회사다	없음	회사의 업종은 판단과 무관하다
2024-2	〈사례 1〉은 보상금을 지급했다	있음	제한의 비례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바꾼다
2024-2	〈사례 1〉은 일시적, 〈사례 2〉는 상시 규제	있음	제한의 기간은 침해의 크기를 바꾼다

3-4 유사점·차이점 단락 쓰기

B형의 첫 단락은 유사점과 차이점이다. 200~280자 안에서 다음 틀을 쓴다.

문장 틀

“두 사례는 (**공통 구조**)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의미 있는 차이 1**), (**의미 있는 차이 2**)라는 점에서 다르다.”
차이가 셋 이상이면 “첫째, ~. 둘째, ~.”로 나눈다. 차이점은 뒤에서 판단의 근거로 다시 쓸 것만 적는다.

자주 하는 실수

- 사례를 다시 이야기하듯 요약한다. 유사점·차이점은 **비교**이지 **요약**이 아니다.
- 사소한 차이(나라 이름, 등장인물 수)를 적는다.
- 첫 단락에서 찾은 차이를 뒤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 조건이 “(1)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활용하여”라고 요구하는 경우(2022-2)에는 감점 요인이 된다.

3-5 드릴

드릴 1 네 축으로 비교표 만들기

2020학년도 1번(9장 연습 1)의 <사례 1> 과 <사례 2> 를 네 축으로 비교하시오.

축	<사례 1> 甲의 화약 밀조	<사례 2> 乙의 카드 내기
① 사실관계		
② 판단 주체와 근거		
③ 형량되는 이익		
④ 결과·예측 가능성		

드릴 2 의미 있는 차이 가리기

2022학년도 2번(8장 연습 2)의 두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이를 아래에 나열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차이에 ○, 주지 않는 차이에 ×를 표시하고 이유를 한 줄로 쓰시오.

1. <사례 1> 은 도적의 시대, <사례 2> 는 상공업 시대다. () _____
2. 수문장은 법을 따랐고, 배심원은 사실을 낮추어 인정했다. () _____
3. <사례 1> 의 위험은 눈앞에 있고, <사례 2> 의 문제는 형벌의 과도함이다. () _____
4. <사례 1> 의 판단자는 한 명, <사례 2> 는 여러 명이다. () _____
5. <사례 2> 의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자원을 얻어 왔다. () _____

드릴 3 유사점·차이점 단락 쓰기

2023학년도 2번(8장 대표 1)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250자 안팎으로 쓰시오.

3-6 드릴 정답과 해설

드릴 1 정답과 해설

축	〈사례 1〉	〈사례 2〉
① 사실관계	처벌 조문이 없는 행위를 다른 죄(동전·달력 위조)의 유추로 처벌	처벌 조문(화살 던지기 내기)이 있으나 문언 밖의 행위(카드 내기)로 넓혀 처벌
② 판단 주체와 근거	법원이 ‘국가의 전권에 도전’이라는 성격의 유사성으로 판단	종교법 위원회가 제정 당시 기록으로 입법 목적을 찾아 판단
③ 형량되는 이익	화약 밀조의 위험(공공 안전) ↔ 처벌 조문이 없는 행위의 불처벌	금전적 손실로부터의 보호 ↔ 문언을 믿은 乙의 예측
④ 결과·예측 가능성	甲은 자기 행위가 위조죄로 처벌될 줄 예상하기 어렵다	카드 내기가 금지된다는 것은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도박으로 인식될 여지는 있다

해설: 두 사례 모두 “문언에 없는 행위를 해석으로 처벌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례 1〉은 **조문이 아예 없는** 경우이고 〈사례 2〉는 **조문의 범위를 넓힌** 경우다. 이 차이는 ㉔(입법자 의도)의 관점을 적용할 때 결정적이다. 〈사례 1〉에는 발견할 입법자의 의도가 없다.

드릴 2 정답과 해설

1. × — 시대 배경은 판단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2. ○ — 평가 대상 행위 자체가 다르다. 문구를 따른 것과 사실을 왜곡한 것은 ㉔의 요건 판단에서 다르게 다루어진다.
3. ○ — 긴급성은 ㉔의 두 번째 요건(“긴급한 필요”)과 직결된다.
4. × — 판단자 수는 평가 기준과 무관하다. (배심제 자체의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다.)
5. ○ — 관습적 이용은 형벌이 “현저한 부정의”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드릴 3 정답과 해설

모범 단락(약 250자): “두 사례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 보상 절차의 흠을 안은 채 사인의 토지에 설치되었고,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자 회사가 공익과 비용을 이유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사례 1〉은 법정 절차를 밟았으나 지급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고 회사가 시세 2배 매수를 제안했으며 철거 시 10만 가구가 피해를 입는다. 반면 〈사례 2〉는 처음부터 사용권 취득도 보상도 없었고, C는 새 떼와 소음이라는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

제4장

논증과 반박

1부 기본기 | 연결 기출: 2020-1, 2021-2, 2024-1, 2025-2, 2027-2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4-1 주장·근거·숨은 전제	30
4-2 반박의 네 기법	30
4-3 양보 후 반박	30
4-4 약한 반박과 강한 반박	31
4-5 드릴	32
4-6 드릴 정답과 해설	33

4-1 주장·근거·숨은 전제

모든 논증은 **주장**과 **근거**, 그리고 둘을 잇는 **숨은 전제**로 이루어진다. 반박의 대부분은 이 숨은 전제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한다.

기출	주장	근거	숨은 전제
2025-2 을	출생 보조금은 부당하다	산아 제한 벌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돈으로 출산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방향(장려·억제)과 상관없이 같은 침해다
2027-2 A	평의회는 선거로 구성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통치는 정당하지 않다	통치의 정당성은 피치자의 동의에서만 나오고, 동의는 선거로만 표현된다
2027-2 B	검증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선출된 사람이 역량을 갖췄다는 보장이 없다	통치 역량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2021-2 Z	개연적 증거로 유죄 판단해야 한다	중한 범죄다	중한 범죄일수록 처벌하지 못하는 손해가 오판의 손해보다 크다

숨은 전제를 찾으면 반박할 곳이 보인다. 을의 숨은 전제는 “벌금과 보조금이 같다”는 것인데, 벌금은 선택지를 줄이고 보조금은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둘은 다르다. Z의 숨은 전제는 오판의 손해를 가볍게 보는데, 중한 범죄일수록 무고한 사람이 받는 처벌도 무겁다.

4-2 반박의 네 기법

기법	겨누는 곳	기출 답안 속 예
① 전제 공격	숨은 전제가 거짓이거나 이 사례에 맞지 않음을 보인다	“벌금은 선택을 처벌해 선택지를 줄이고, 보조금은 장벽을 낮춰 선택지를 넓힌다.” (2025-2, 을 반박)
② 적용 결과(귀류)	그 논리를 끝까지 따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나옴을 보인다	“‘국가의 전권에 도전’이 처벌 기준이라면 국가가 관장하는 거의 모든 일이 처벌 대상이 된다.” (2020-1, 유추 반박)
③ 내적 모순	상대의 주장이 자기 근거와 충돌함을 보인다	“법인이 사람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라면, 그 자유를 남용해 타인의 선의를 착취하는 것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 (2025-1, 2안 반박)
④ 목적-수단 불일치	목적은 인정하되 수단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보인다	“배설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고 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감시할 수 없는 총량 제한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2023-1)

4-3 양보 후 반박

좋은 반박은 상대를 먼저 인정한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반박이 공정해 보이고, 반박의 범위도 정확해진다.

세 단계 문장 틀

인정 — “~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 “~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한정 — “그러나 그것은 ~인 경우에 해당한다.” / “문제는 ~이다.”

반박 — “이 사례에서는 ~이므로,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시(2024-2, 봉쇄 조치를 사이버 보안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며): “사이버 공격이 독감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의견③)은 타당하다. 그러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같은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사례 1>의 제한은 위기가 끝나면 풀렸고 손실도 보상되었지만, <사례 2>의 제한은 기한이 없고 보상도 없다.”

4-4 약한 반박과 강한 반박

약한 반박	강한 반박	기법
“견해B는 비민주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증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평의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만의 기구가 된다. 통치 능력은 참여 경험에서 길러지는 덕성이지 시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의견⑥).”	①
“재판관 X의 관점은 옳지 않다.”	“유무죄는 값이 실제로 누구인가라는 사실의 문제다. 다수결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다.”	①
“포지티브 규제는 너무 엄격하다.”	“포지티브 규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해한 행위까지 막는다. <사례 2>의 주차 공유가 수년간 묶인 것이 그 결과다.”	②
“2안은 현실성이 없다.”	“현금 지원은 지급이 끝나면 효과도 끝나고, 수당을 받으려 주소만 옮기는 사람이 생긴다(의견④). 목적은 정착인데 수단은 일시적 이주를 부른다.”	④

약한 반박에는 공통점이 있다. **평가어(옳지 않다, 비민주적, 비현실적)로 끝나고 이유가 없다.** 강한 반박은 평가어 대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사례와 자료로 보여 준다.

4-5 드릴

드릴 1 숨은 전제 찾기

다음 주장의 숨은 전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1. 2024-1 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예술가는 작품의 운명을 소유자에게 맡긴 것이다.”

2. 2027-2 C: “국가평의회가 시민 모두를 대표한다면 사회를 거울처럼 비춰야 한다.”

3. 2026-2 K국: “전문가 자문 결과에 근거했으므로 반대 여론에도 정책B를 시행한다.”

4. 2020-1 ㉡: “사람들은 통상 사전적 의미로 법을 이해하므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

드릴 2 기법을 골라 한 문장으로 반박하기

괄호 안의 기법으로 반박 문장을 쓰시오.

1. “중한 범죄는 개연적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② 적용 결과)

2. “인터넷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어떤 보안 의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① 전제 공격)

3. “성형수술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① 전제 공격, 미성년자에 한정)

4.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면 데이터 불평등이 해소된다.” (④ 목적-수단 불일치)

드릴 3 약한 반박 고쳐 쓰기

다음 약한 반박을 인정-한정-반박의 세 단계로 고쳐 쓰시오(각 150자 안팎).

1. (2023-2) “B의 철거 요구는 이기적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1. (2021-1) “입법안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잘못되었다.”

4-6 드릴 정답과 해설

드릴 1 정답과 해설

1.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이익은 모두 재산적인 것이어서, 대가를 받으면 함께 넘어간다. (→ 병은 인격적 이익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2. 대표의 정당성은 구성원이 사회의 인구 구성과 닮았다는 데서 나온다. (→ A는 동의에서, B는 역량에서 나온다고 본다.)
3.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적 근거로 충분하며, 규제 대상자의 수용 여부는 부차적이다. (→ 의견⑧로 반박할 수 있다.)
4. 법의 수범자가 이해하는 의미가 곧 법의 의미이며, 그 이해는 일정하다.

드릴 2 정답과 해설

1. “개연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의심만 있어도 누구든 타인사칭범이 될 수 있다. 중한 범죄일수록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이 받는 처벌도 무겁다.”
2.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사실이 보안 의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취약한 기기가 회사 전체의 데이터 유출로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최소한의 보안이 오히려 모두의 자유를 지키는 조건이다.”
3. “자기 책임 원칙은 결정의 결과를 충분히 헤아릴 판단 능력을 전제로 한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미성년자에게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4. “데이터 시장은 이미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가격과 조건을 정하는 구조다. 거래를 늘리면 데이터가 가진 쪽으로 더 모여, 불평등 해소라는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드릴 3 정답과 해설

1. “B의 요구는 소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인정). 그러나 철거로 B가 되찾는 이익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제한된 이용 가치에 그치고, 시세 2배의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있다(한정). 반면 철거로 10만 가구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므로, 철거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반박).”
2. “과거 청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회정부의 판단은 이해할 만하다(인정). 문제는 직위와 금액이라는 형식 기준을 부패의 증거로 삼은 데 있다(한정). 같은 장관이라도 성실히 일한 사람과 탄압에 가담한 사람이 한데 묶이므로, 기준을 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반박).”

제5장

한계 인정과 보완

1부 기본기 | 연결 기출: 2026-1, 2027-2 · 모의고사 2회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5-1 왜 자기 입장의 한계를 쓰는가	35
5-2 한계를 찾는 세 방향	35
5-3 보완과 절충의 경계	35
5-4 문장 틀	36
5-5 드릴	37
5-6 드릴 정답과 해설	38

5-1 왜 자기 입장의 한계를 쓰는가

2027학년도 2번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지한 견해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 조건이 없는 문항에서도 자기 입장의 약점을 다루는 단락은 답안의 설득력을 높인다. 채점자는 약점을 모르는 답안보다 **약점을 알고도 그 입장을 택한 답안**을 더 신뢰한다.

한계를 쓰는 단락은 세 가지 일을 한다.

1. 내 입장에 불리한 자료나 사실을 정면으로 다룬다.
2. 그 약점이 입장을 버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3. 선택한 입장의 틀 안에서 약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5-2 한계를 찾는 세 방향

방향	물어볼 것	예
부작용	이 입장을 실행하면 어떤 해로운 결과가 따라오는가	견해C(추첨): 선택받으려는 동기가 없어 책임감이 약할 수 있다(2027-2 의견⑧)
우회·악용	누가 이 제도를 빠져나가거나 악용할 수 있는가	정주 수당: 수당만 받고 주소를 옮기는 사람(모의 2회 2번 의견④)
사각지대	이 입장이 다루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제조사 책임: 소유자가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도 불이익이 없다(모의 2회 1번)

5-3 보완과 절충의 경계

2026-1은 “절충론을 배제할 것”, 2027-2는 “극복 방안으로 자신이 반박한 견해를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두 조건은 같은 경계를 가리킨다.

보완과 절충

보완은 선택한 입장의 **원리를 유지한 채 수단을 조정**하는 것이다.

절충은 **선택하지 않은 입장의 원리를 끌어와 섞는** 것이다.

판별 질문: “이 방안은 내가 반박한 견해의 핵심 원리를 빌려 오는가?”

2027-2에서 견해C를 택한 뒤의 극복 방안	판정	이유
선정된 시민에게 학습 기간을 주고 공개 청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보완	추첨이라는 원리는 그대로다
발언과 표결을 기록·공개하고 임기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완	선거 없이 책임성을 높인다
임기를 짧게 하고 일부씩 교체한다	보완	추첨의 순환성을 강화한다
추첨 후보군을 일정 학력 이상으로 제한한다	절충	견해B의 ‘검증된 식견’ 원리를 빌려 온다
추첨된 사람 중 시민 투표로 최종 선출한다	절충	견해A의 ‘선출’ 원리를 빌려 온다

자주 하는 실수

“두 안의 장점을 살려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은 조건 위반이 아니더라도 A형·C형 답안의 힘을 뺀다.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선택을 흐리는 결론은 “선택하지 못했다”로 읽힌다.

5-4 문장 틀

한계-보완 단락(150~250자)

“물론 ~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 1)**. 또한 **(한계 2)**.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안 1)**. **(방안 2)**. 이렇게 하면 ~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 문장 “원칙을 지키면서”가 중요하다. 보완이 선택한 입장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채점자에게 확인시켜 준다.

5-5 드릴

드릴 1 보완인가 절충인가

다음은 괄호 안의 입장을 택한 답안의 극복 방안이다. 보완이면 ○, 절충이면 ×를 표시하시오.

1. (2026-1, 2안) “생체 정보 변경 금지와 함께, 미성년자 성형은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다.” ()
2. (2026-1, 3안) “미용 목적 여부는 의료진 두 명 이상의 소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둔다.” ()
3. (모의 2회 1번, 관점A) “안전 관련 업데이트는 정차 중 자동 설치되도록 기술 기준을 정한다.” ()
4. (모의 2회 1번, 관점A) “제조사가 책임지되, 보상은 차량 보유자 전체가 낸 기금으로 먼저 한다.” ()
5. (2027-2, 견해A) “선거 후보에게 정책 토론회 참석을 의무화해 식견을 드러내게 한다.” ()
6. (2027-2, 견해A) “선출된 평의원은 일정 시험을 통과해야 취임할 수 있다.” ()

드릴 2 한계-보완 단락 쓰기

2027학년도 2번에서 견해B를 지지한다고 할 때, 견해B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200자 안팎으로 쓰시오. 극복 방안에 견해A·C를 활용하지 말 것.

5-6 드릴 정답과 해설

드릴 1 정답과 해설

1. × — 3안(미성년자 보호)의 영역을 끌어왔다. 게다가 부모 동의제는 3안의 핵심(동의 여부를 묻지 않음)과도 다르다.
2. ○ — 3안의 원리(미용 목적 금지)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3. ○ — 제조사 책임 원리를 유지한 채 사각지대를 줄였다.
4. × — 관점C(보유자 공동 기금)의 원리를 빌려 왔다.
5. ○ — 선거 원리 안에서 유권자의 판단 자료를 늘렸다.
6. × — 견해B(객관적 검증)의 원리를 빌려 왔다.

드릴 2 정답과 해설

예시: “물론 견해B에도 한계가 있다. 검증 기준을 정하는 사람의 관점이 선발 결과를 좌우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특정 계층으로 쏠릴 수 있다. 또 선발된 사람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증 기준과 채점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필기시험만이 아니라 공공 업무 경력과 숙의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또 평의원의 결정 이유를 문서로 공개하게 하면, 식견에 의한 통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독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공개·기록은 선거나 추천의 원리가 아니므로 허용된다.)

제6장

900~1200자 답안의 구조와 문장

1부 기본기 | 연결 기출: 2019~2027학년도 전체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6-1 유형별 표준 틀	40
6-2 첫 단락이 답안의 절반이다	40
6-3 자료 인용을 문장에 녹이기	40
6-4 문장 규칙	40
6-5 원고지와 분량 관리	41
6-6 55분 시간표와 퇴고	41
6-7 드릴	42
6-8 드릴 정답과 해설	43

6-1 유형별 표준 틀

1100자를 목표로 쓴다. 900자는 하한이고 1200자는 상한이다. 유형마다 단락 배분이 조금씩 다르다.

단락	A형 정책·입법안 선택	B형 두 사례 비교	C형 관점 택1
①	입장 + 판단 기준 (150~250)	유사점·차이점 (200~280)	입장 + 선택 이유 (150~200) (요약 조건이 있으면 요약 먼저)
②	지지 근거 1 (200~250)	공통 논점 + 판단 기준 (100~150)	사례를 선택한 관점으로 해석 (250~300)
③	지지 근거 2 또는 반대 자료 처리 (200~250)	사례 1 평가 (250~300)	다른 관점 1 반박 (200)
④	다른 선택지 평가 (250~300)	사례 2 평가 (250~300)	다른 관점 2 반박 (200)
⑤	결론 (+ 보완) (80~120)	결론 (80~120)	결론 또는 한계·보완 (100~200)

6-2 첫 단락이 답안의 절반이다

채점자는 첫 단락에서 답안의 방향을 파악한다. 첫 단락에는 **입장과 판단 기준**이 함께 있어야 한다.

나쁜 첫 문장	좋은 첫 문장
“오늘날 성형수술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국이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할 법은 2안이다. 입법의 우선순위는 금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피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되돌리기 어렵게 돌아가는지로 정해야 한다.”
“이 문제에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모든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관 Y의 관점을 지지한다.”
“두 사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두 사례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 철차상 흠을 안은 채 사인의 토지 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같다.”

배경 설명이나 일반론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900~1200자에는 서론을 쓸 자리가 없다.

6-3 자료 인용을 문장에 녹이기

요약형 (나쁨)	논증형 (좋음)
의견②는 은행의 본인 확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2안과 관련이 있다.	전면적인 외모 변경을 허용하면 그 피해는 명의를 도용당한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의견②).
논거⑤에 따르면 배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법인의 형식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한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다(논거⑤).
관점③과 관점①이 있는데 둘 다 B에게 불리하다.	흠을 바로잡을 수단이 있는데도 철거만 고집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목적이 손해를 주는 데 치우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관점③).

규칙은 하나다. **자료 번호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괄호 속 출처로 쓴다.** 문장의 주어는 내 주장이다.

6-4 문장 규칙

- 한 문장에 한 주장만 담는다. 50자 안팎, 길어도 70자를 넘기지 않는다.
- 주어와 서술어를 맞춘다. 긴 문장에서 주어가 사라지기 쉽다.
- 논리 접속어를 정확히 쓴다: 첫째·둘째(나열), 그러나(대립), 따라서·그러므로(결론), 물론(양보), 또한(추가).
- 다음 표현은 쓰지 않는다.

피할 표현	이유
“~라고 생각한다”, “~인 것 같다”의 반복	확신 없는 인상을 준다. 입장 선언에서 한 번이면 충분하다
“매우”, “절대”, “반드시”의 남발	과장은 논증을 약하게 만든다
“누구나 알다시피”, “당연히”	근거 없이 동의를 강요한다
법률 용어·조문 인용	실정법 판단을 배제하는 문향이 많다. 일상어로 원리를 설명한다

6-5 원고지와 분량 관리

답안지는 원고지 형식이다. 2009학년도 예비시험 유의사항은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야 하며,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답안의 특정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문장 부호와 교정 부호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단락의 첫 칸은 비운다.
- 문장 부호도 한 칸을 차지한다. 마침표·쉼표 뒤에는 칸을 비우지 않는다.
- 원문자(㉠, ㉡)는 한 칸에 쓴다.
- 수정은 교정 부호로 한다. 수정액과 밑줄은 쓸 수 없다.
- 답안지 형식과 유의사항은 해마다 시험 공고로 반드시 확인한다.

분량은 **줄 수**로 관리한다. 원고지 한 줄의 칸 수는 답안지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공고된 양식으로 한 번 확인해 둔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쓴다. 부록 D의 원고지는 한 줄 20칸이라 1100자가 약 55줄이고, 각 장의 패선 작성란은 한 줄에 약 40자가 들어가 1100자가 약 28줄이다. 개요에 단락별 줄 수를 적어 두고, 단락이 끝날 때마다 계획과 비교한다.

6-6 55분 시간표와 퇴고

구간	시간	할 일
0~3분	3분	조건 해부 — 동사 단위로 쪼개고 단락에 배정
3~12분	9분	사례·자료 읽기, 선택지 비교, 자료 태깅
12~17분	5분	입장 결정, 개요(단락별 핵심 문장·자료 번호·줄 수)
17~50분	33분	작성
50~55분	5분	퇴고

퇴고 5분의 순서

1. 조건 배정표를 보며 요구마다 답안의 해당 문장을 확인한다.
2. 자료 표기 형식과 활용 개수를 센다.
3. 배제 조건에 걸리는 단어(절충, 소급, 시기상조 등)가 없는지 본다.
4. 분량이 범위 안인지 줄 수로 확인한다.
5. 남은 시간에 오자와 주어-서술어 호응을 고친다.

6-7 드릴

드릴 1 첫 단락 고쳐 쓰기

다음 첫 단락을 입장과 판단 기준이 드러나도록 150자 안팎으로 고쳐 쓰시오.

(2025-2) “저출생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갑과 을의 견해도 각각 일리가 있다. 이하에서는 두 견해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드릴 2 요약형 인용을 논증형으로

다음 문장을 논증형 인용으로 고쳐 쓰시오.

1. (2024-2) “의견⑦은 경제적 약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례 2〉와 관련된다.”

2. (2022-1) “자료⑥에 따르면 혁신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A국 정책이 좋다.”

드릴 3 퇴고하기

다음 단락에서 문장 규칙에 어긋나는 곳을 모두 찾아 고치시오.

“당연히 누구나 알다시피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의견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매출추산법은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6-8 드릴 정답과 해설

드릴 1 정답과 해설

“나는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갑의 견해를 지지한다. 합계출생률이 0.72명까지 떨어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출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낮추는 것은 선택의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을을 택해도 된다. 입장과 기준이 첫 단락에 있으면 된다.)

드릴 2 정답과 해설

1. “재정 지원 없이 보안 기기를 갖추도록 강제하면 경제적 약자가 인터넷에서 밀려난다(의견⑦).”
2. “독점으로 신생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⑥). A국의 강제 매수는 독점된 데이터를 신생 기업에 제공해 진입 장벽을 직접 낮춘다.”

드릴 3 정답과 해설

고칠 곳: “당연히 누구나 알다시피”(근거 없는 동의 강요), “매우”, “절대”(과장), “생각하는데”, “생각한다”(반복), 한 문장에 주장 셋, 자료 번호를 문장 속 내용으로 설명.

고친 예: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의견①). 매출추산법은 조사일 선택과 매출 추산을 모두 현장 공무원의 재량에 맡긴다. 따라서 이 방식을 채택하려면 재량을 통제할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제2부

유형별 실전

최근 10년 20문항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책·입법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B형은 두 사례를 비교해 판단을 평가하며, C형은 관점 하나를 골라 강화하고 나머지를 반박한다. 각 장은 유형의 특징과 푸는 순서, 대표 문항 풀해설, 연습 문항, 점검표와 해설로 이루어진다.

제7장

A형 — 정책·입법안 선택형

2부 유형별 실전 | 연결 기출: 2018-1, 2018-2, 2020-2, 2021-1, 2022-1, 2023-1, 2025-1, 2026-1, 2026-2, 2027-1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7-1 A형은 어떤 문제인가	46
7-2 A형을 푸는 여섯 단계	47
7-3 대표 문항 풀해설	49
대표 문항 1 2026학년도 1번 — 성형수술 입법안	49
대표 문항 2 2025학년도 1번 — 비영리법인 설립	53
7-4 연습 문항	57
연습 1 2018학년도 1번 — 의료 빅데이터	58
연습 2 2018학년도 2번 — 세대 간 갈등	61
연습 3 2020학년도 2번 —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65
연습 4 2021학년도 1번 — 과거청산 입법안	68
연습 5 2022학년도 1번 — 데이터 독점 정책	71
연습 6 2023학년도 1번 — 가상화폐 '리오' 규제	74
연습 7 2026학년도 2번 — 청소년 생성형 AI 규제	77
7-5 A형 점검표	80
7-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81
연습 1 2018-1 의료 빅데이터	81
연습 2 2018-2 세대 간 갈등	82
연습 3 2020-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83
연습 4 2021-1 과거청산 입법안	84
연습 5 2022-1 데이터 독점 정책	85
연습 6 2023-1 가상화폐 '리오' 규제	86
연습 7 2026-2 청소년 생성형 AI 규제	87

7-1 A형은 어떤 문제인가

A형은 〈사례〉에 제시된 정책이나 입법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정부의 결정을 지지 또는 반박하게 하는 문제다. 2018~2027학년도 20문항 가운데 10문항이 이 유형이다. LEET 논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겉모습은 매년 다르다. 의료 빅데이터, 가상화폐, 성형수술, 생성형 인공지능처럼 소재가 바뀐다. 그러나 요구하는 일은 거의 같다. **선택지들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비교하고, 자료를 근거로 자기 선택을 옹호하며, 나머지 선택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10개년 A형 일람

학년도	소재	선택지	자료	최소 활용	특수 조건
2027-1	점포세 과세 방식	2개	의견 10	4개 이상	여론조사에서 장단점 추론(16장 수록)
2026-2	청소년 생성형 AI 금지	지지/반박	의견 8	—	정책A·B 장단점 비교
2026-1	성형수술 입법안	3개	의견 10	—	시기상조론·절충론 배제, 나머지 2안 평가
2025-1	비영리법인 설립	2개	논거 5	—	사례별 문제점 요약
2023-1	가상화폐 ‘리오’ 규제	견해	여론 10	5개 이상	—
2022-1	데이터 독점 정책	2개	자료 8	3개 이상	—
2021-1	과거청산 입법안	의견서	관점 3	—	수정안 제시, 소급입법 판단 배제
2020-2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2개	지침 7	—	두 사례에 일관 적용
2018-2	세대 간 갈등	방안	제시문 3	전부 평가	1300~1600자, 60점
2018-1	의료 빅데이터	2개	자료 6	전부	선택하지 않은 입장 반박

■ 출제 흐름에서 읽어야 할 것

1. **자료가 늘고, 최소 활용 개수가 명시된다.** 2018년에는 자료 6개를 “모두” 쓰라고 했지만, 2023년 이후에는 8~10개 가운데 일정 개수 이상을 고르게 한다. 고르는 능력, 즉 **쓸 자료와 버릴 자료를 가르는 능력**이 평가된다.
2. **선택지가 둘에서 셋으로 늘었다.** 2026-1은 입법안 3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둘을 평가하게 했다. 반박 대상이 둘이면 반박에 쓸 분량이 부족해지므로 개요 단계의 분량 배정이 더 중요해졌다.
3. **‘빠져나갈 길’을 막는 조건이 생겼다.** 시기상조론·절충론 배제(2026-1)처럼, 선택을 회피하는 답안을 조건으로 차단한다.
4. **자료에서 추론하게 한다.** 2027-1은 누가 어떤 방식을 선호했는지만 알려 주고, 거기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추정하게 했다.

A형의 본질

A형 답안의 점수는 **어느 쪽을 골랐는가**가 아니라 **왜 그쪽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여 주었는가**에서 갈린다. 출제자는 선택지마다 지지 자료와 반박 자료를 고르게 배치한다. 어느 쪽을 골라도 쓸 수 있게 만든 문제다. 그러므로 정답 입장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을 고른다.

7-2 A형을 푸는 여섯 단계

시험 시간은 110분, 문항은 두 개다. 한 문항에 55분을 쓴다고 보고, 쓰기 전에 17분을 설계에 투자한다. 설계 없이 바로 쓰기 시작하면 반박 단락에 이르러 분량이 모자라거나 조건 하나를 빠뜨리게 된다.

단계	할 일	시간	산출물
1	조건 해부	3분	조건 번호마다 “무엇을 · 어느 단락에서” 한 줄
2	선택지 비교	4분	선택지 × 판단 기준 표(장점·단점 한 칸씩)
3	자료 태깅	5분	자료마다 지지 / 반박 / 양쪽 / 함정 표시
4	입장 결정과 개요	5분	단락별 핵심 문장 + 쓸 자료 번호 + 글자 수
5	작성	33분	900~1200자 답안
6	검토	5분	조건 체크리스트 대조, 자료 표기·개수 확인

■ 1단계 — 조건 해부

조건을 문장 그대로 읽지 말고 **동사**로 쪼갬다. “선택하고 · 활용하여 · 작성할 것”이면 요구가 셋이다. 쪼갬 요구마다 답안의 어느 단락에서 처리할지 적는다. 이 표가 곧 채점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A형 조건은 거의 다음 여섯 종류의 조합이다.

- **선택:** 하나를 고를 것 (1안·2안·3안, A국·B국, 지지·반박)
- **반박·평가:** 고르지 않은 것을 반박하거나 평가할 것
- **활용 개수:** 자료를 모두 / N개 이상 쓸 것
- **표기:** 의견①, 논거②처럼 출처를 적을 것
- **배제:** 시기상조론·절충론, 소급입법 판단처럼 다루지 말 것
- **추가 과제:** 사례별 문제점 요약, 장단점 비교, 수정안 제시

■ 2단계 — 선택지 비교: 판단 기준을 먼저 세운다

선택지를 비교하려면 잣대가 있어야 한다. A형에서 자주 쓰는 잣대는 다섯 가지다.

판단 기준	묻는 것	잘 맞는 기출
시급성·피해의 성격	금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생기는가	2026-1
목적-수단 적합성	이 수단이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하는가	2023-1, 2022-1
비례성	더 약한 수단으로도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2026-2, 2018-1
실효성·집행 가능성	감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 우회되지 않는가	2023-1, 2026-2
절차의 정당성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	2021-1, 2026-2

첫 단락에서 판단 기준을 한 문장으로 밝히면 답안 전체가 그 기준을 따라 정렬된다. 예: “입법의 우선순위는 금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피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되돌리기 어렵게 돌아가는지로 정해야 한다.”

■ 3단계 — 자료 태깅

자료 하나하나에 표시를 붙인다. 이때 선택지별로 붙인다. 같은 자료가 1안에는 지지, 3안에는 반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지:** 내 입장의 근거로 바로 쓴다.
- **반박:** 내 입장을 공격한다. 답안에서 먼저 인정한 뒤 되받아쳐야 한다. 이런 자료를 하나는 다루어야 답안이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양쪽**: 해석에 따라 어느 쪽에도 쓰인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유”(2026-1 의견③)는 규제 반대 논거처럼 보이지만, 타인에게 해를 주는 수술을 금지하는 2안에는 오히려 지지 논거가 된다. 이런 자료를 뒤집어 쓰면 높은 평가를 받는다.
- **합정**: 사례와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쓰면 논지가 흐려지는 자료다. 활용 개수를 채우려고 억지로 넣지 않는다.

■ 4단계 — 개요: 분량을 먼저 나눈다

1100자를 목표로 단락별 글자 수를 미리 정한다. 다음 틀이 A형의 표준이다.

단락	내용	분량	문장 틀
①	입장 + 판단 기준 (+ 사례 요약이 조건이면 여기서)	150~250자	“나는 ○안을 지지한다. ~의 기준에서 볼 때 ~이기 때문이다.”
②	지지 근거 1 + 자료 2개	200~250자	“첫째, ~. ~이다(의견②). ~도 같은 점을 보여 준다(의견⑩).”
③	지지 근거 2 또는 반대 자료 재해석	200~250자	“~라는 반론(의견③)이 있다. 그러나 ~.”
④	다른 선택지 평가·반박	250~300자	“○안은 ~라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지만, ~라는 점에서 ~.”
⑤	결론 (+ 보완)	80~120자	“결국 ~해야 한다.”

실전 팁

이 책의 패션 작성란은 한 줄에 약 40자가 들어가므로 1100자는 약 28줄이다(원고지 기준은 6·5 참조). 개요에 단락별 줄 수(예: 5줄·6줄·6줄·7줄·3줄)를 적어 두면, 쓰는 중에 분량이 넘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분량 미달과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된다.

■ 5·6단계 — 작성과 검토

작성할 때는 한 단락에 한 가지 주장만 담는다. 자료 번호는 주장 문장 바로 뒤 괄호 안에 넣는다. 검토 단계에서는 조건 해부표를 다시 펴서 조건마다 답안의 해당 문장에 표시해 본다. 표시할 곳이 없는 조건이 있다면 그 답안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료를 요약만 하고 주장과 연결하지 않는다. “의견②는 신분 확인의 문제를 지적한다”가 아니라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의견②)”처럼 **주장 문장 안에서** 쓴다.
- 반박을 한 줄로 끝낸다. “○안은 비현실적이다”는 반박이 아니다. 전제, 적용 결과, 수단의 적합성 가운데 하나를 짚어야 한다.
- 결론 단락에서 새 논거를 꺼낸다. 결론은 판단 기준으로 돌아가 한 번 정리하는 자리다.
- 두 선택지의 장점을 섞는 절충안을 쓴다. 조건이 금지하지 않더라도 A형은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다. 보완은 **선택한 안의 틀 안에서** 한다.

7-3 대표 문항 풀해설

대표 문항 1

2026학년도 1번 — 성형수술 입법안

입법안 3개 중 1개 선택 · 의견 10개 · 시기상조론·절충론 배제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의견〉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K국의 입법자로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1개의 입법안을 선택하고 〈의견〉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작성할 것
- (2) 시기상조론이나 절충론은 배제할 것
- (3) 다른 2개의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 (4) 입법안을 활용할 때는 1안, 2안, 3안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 (5)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K국에서는 성형수술과 성형시술(이하 성형수술로 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형수술은 의료 목적 이외에 외모를 바꿔 사회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성형수술, 범죄나 혐오 표현과 관련된 성형수술, 신분 관련 서류의 부정 제시나 발급과 관련된 성형수술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K국은 이러한 성형수술을 규율하기 위하여 「성형수술 규제 및 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논의만 계속되고 있어 가장 시급하게 금지되어야 할 부분을 먼저 입법하기로 하였다. 이에 K국은 3가지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1안 : 차별이나 혐오 표현 등에 해당하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성형수술은 금지한다.

2안 : 얼굴이나 신체의 외관 등 생체 정보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타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성형수술은 금지한다.

3안 : 심신이 성장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금지한다.

〈의견〉

- ① 특정한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문안을 담은 성형수술을 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② 은행에서 신분증이나 외관 또는 지문 인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데 과도한 성형수술을 허용하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③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개인은 주권을 가지기에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어떤 행동도 개인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해.

④ 청소년들이 요즘 인기 절정인 연예인을 닮도록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

⑤ 최근 중범죄자의 모습대로 성형수술을 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⑥ 오늘날은 정보보안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 신분 확인 방법이 대세라 전통적인 얼굴 확인이나 지문 식별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다.

⑦ 성형수술은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해.

⑧ 청소년은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형수술을 결정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

⑨ 외모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성형수술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인다고 해.

⑩ 범죄자가 얼굴이나 지문 성형수술을 악용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체포를 면하는 경우가 있다.

■ STEP 1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입법자로서 우선 제정할 안 1개 선택 + 의견 활용	①~③	“우선”이 핵심이다. 왜 이것이 먼저 인지, 시급성의 기준을 밝혀야 한다.
(2)	시기상조론·절충론 배제	전체	“여건이 갖춰진 뒤”, “2안과 3안을 함께”는 곧바로 조건 위반이다.
(3)	다른 2개 안 평가	④	반박이 아니라 평가 다. 장점을 인정한 뒤 우선순위가 낮은 이유를 낸다.
(4)(5)	1안·의견① 형식 표기	전체	괄호 안 표기를 빠뜨리면 활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STEP 2 선택지 비교 — 누가 피해를 입는가

	1안 차별·혐오 성형 금지	2안 타인 오인 성형 금지	3안 미성년자 미용 성형 금지
피해자	사회 전체(가치·통합)	제3자(명의 도용, 범죄 피해)	본인(미성년자)
장점	혐오 확산 차단	신원 확인 체계 보호, 범죄 악용 차단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예방
약점	기준 모호 → 자의적 적용, 표현의 자유	기술 발전으로 필요성 약화 가능 (의견⑥)	부모 결정권·청소년 자율 제한

세 안의 차이는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가**에서 가장 뚜렷하다.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잡으면 2안(제3자 보호) 또는 3안(보호 능력이 약한 사람 보호)을 자연스럽게 논증할 수 있다. 1안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약점이 커서 옹호하기가 가장 어렵다.

■ STEP 3 의견 태깅

의견	요지	1안	2안	3안	메모
①	차별 문안 성형이 갈등 조장	지지			1안의 유일한 직접 근거
②	본인 확인 체계와 피해자		지지		피해가 누구에게 — 2안의 핵심
③	타인에게 해가 없는 한 자유	반박	양쪽	반박	2안은 ‘타인에게 해’이므로 오히려 지지로 뒤집힌다
④	건강 문제 없으면 허용?			반박	3안을 택하면 반드시 다룬다
⑤	중범죄자 모습으로 성형해 위협		지지		‘타인 오인’의 사례
⑥	디지털 신분 확인이 대세		반박		2안을 택하면 반드시 다룬다
⑦	자기 책임 원칙	반박	반박	반박	미성년자에게는 전제가 약하다(3안)
⑧	청소년의 즉흥적 판단			지지	3안의 핵심
⑨	외모 압력과 과도한 성형 비용			합정	어느 안과도 느슨함. 3안에서 ‘부모도 같은 압력’으로 쓰면 살아난다
⑩	범죄자의 추적 회피		지지		2안 지지

출제 의도 읽기

의견 10개 가운데 2안 관련이 4개(②⑤⑥⑩), 3안 관련이 3개(④⑧⑨), 1안 관련은 1개(①)뿐이다. 1안을 고르면 자료가 부족하다. 출제자는 2안과 3안의 대결을 기본 구도로 설계하고, 둘 다 반박 자료(⑥, ④)를 하나씩 넣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자기 쪽 반박 자료를 처리하는 단락**이 채점의 갈림길이다.

■ STEP 4 개요 (2안 선택)

단락	핵심 문장	자료	분량
①	2안 선택. 기준: 피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되돌리기 어렵게 가는가	—	약 180자
②	사회의 식별 체계 붕괴 → 제3자 피해. 디지털 신분 확인 반론은 생체 정보 기반이라 무력	②⑩⑤⑥	약 380자
③	자기결정권의 한계 = 타인 해악 → 2안은 자율성 원칙 안에서 정당	③⑦	약 170자
④	1안: 기준 모호·표현의 자유. 3안: 부모 판단 대체, 피해가 본인에 머물 → 시급성 낮음	①⑧	약 250자
⑤	결론: 제3자·사회적 신뢰 침해부터 금지	—	약 60자

■ STEP 5 예시답안

예시답안 A — 2안 선택

1027 자 (공백 포함)

K국이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할 법은 2안이다. 입법의 우선순위는 금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피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되돌리기 어렵게 돌아가는지로 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서 타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면적 생체 정보 변경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와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직접 해친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첫째, 2안이 막으려는 성형수술은 사회가 사람을 식별하는 기반을 무너뜨린다. 은행이 신분증과 외관,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수술을 허용하면 그 피해는 명의를 도용당한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의견②). 범죄자가 얼굴이나 지문을 바꿔 추적을 따돌리는 일(의견⑩)과 중범죄자의 모습으로 성형해 타인을 위협하는 일(의견⑤)도 모두 '타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신분 확인이 대세라는 반론(의견⑥)이 있지만, 디지털 인증 역시 얼굴과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기초로 삼는 경우가 많고 대면 확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2안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못한다.

둘째, 2안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의견③)과 자기 책임 원칙(의견⑦)은 모두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이라는 한계를 전제한다. 2안은 바로 그 한계를 넘는 수술만을 금지하므로 자율성의 원칙 안에서 정당화된다.

반면 1안은 차별 문안을 새긴 수술(의견①)이 갈등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를 행정기관이 판단하게 되면 신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자의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크다. 3안은 즉흥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청소년(의견⑧)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모 동의까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판단과 청소년의 선택을 과도하게 대체한다. 또한 그 피해가 주로 본인에게 머문다는 점에서 제3자 피해를 막는 2안보다 시급성이 낮다.

결국 K국은 제3자와 사회적 신뢰를 직접 침해하는 성형수술부터 금지하는 2안을 우선 입법해야 한다.

활용 의견: ①②③⑤⑥⑦⑧⑩ (8개) · 조건 (2) 절충 표현 없음 · 1안·3안 모두 장점 인정 후 우선순위 평가

예시답안 B — 3안 선택

977 자 (공백 포함)

K국이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할 법은 3안이다. 세 입법안이 막으려는 피해 가운데 되돌리기 가장 어렵고,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미성년자 성형수술의 피해이기 때문이다.

첫째, 미성년자는 성형수술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청소년은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의견⑧), 인기 연예인을 닮고 싶다는 일시적 욕구로 수술을 원하기도 한다(의견④). 건

강에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심신이 성장 중인 몸에 가한 변화는 성장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한 번 바꾼 외모는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수술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금지의 근거가 된다.

둘째,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는 것도 정당하다. 외모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에 성형에 과도한 비용을 쓰는 사회에서는(의견⑨) 부모 역시 같은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의 요건을 두면 금지는 서류 절차로 바뀌어 실효성을 잃는다.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의견③)과 자기 책임 원칙(의견⑦)은 성숙한 판단 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더구나 3안은 성인이 된 뒤의 선택까지 막지 않으므로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반면 1안은 차별 문안을 새기는 수술(의견①)의 해악을 지적하지만, 무엇이 '사회의 기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규제로 흐를 위험이 있다. 2안이 겨냥하는 신분 도용과 범죄 악용(의견②, 의견⑩)은 심각하지만, 디지털 신분 확인 기술이 발달해 얼굴과 지문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비중은 줄고 있다(의견⑥). 또한 그러한 악용은 수술 자체보다 도용·도주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수술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의 시급성은 3안보다 낮다.

그러므로 K국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3안을 가장 먼저 입법해야 한다.

활용 의견: ①②③④⑥⑦⑧⑨⑩ (9개) · ④를 인정 후 반박, ⑨를 '부모 동의 무력화' 근거로 전환

■ STEP 6 채점 포인트

- **판단 기준이 첫 단락에 있는가.** “우선 제정”이라는 조건에 답하려면 시급성의 기준이 필요하다.
- **자기 쪽 반박 자료를 처리했는가.** 2안이면 의견⑥, 3안이면 의견④를 피하지 않고 다루어야 한다.
- **다른 두 안을 ‘평가’했는가.** 두 예시답안 모두 다른 안의 취지를 먼저 인정(“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취지에 공감하지만”)한 뒤 우선순위가 낮은 이유를 낸다.
- **절충의 흔적이 없는가.** “3안은 부모 동의제로 보완하면 좋다” 같은 문장은 조건 (2) 위반으로 읽힐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의견③(“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유”)을 모든 규제에 대한 반론으로만 읽는 경우가 많다. 이 의견의 단서 조항은 곧 규제의 정당화 근거다. 2안은 바로 그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만 금지한다. 자료의 **단서와 전제**를 읽는 습관이 A형 고득점의 열쇠다.

대표 문항 2

2025학년도 1번 — 비영리법인 설립

입법정책 2개 중 선택 · 논거 5개 · 사례별 문제점 요약 · 900~1200자

1. <입법정책> 과 <사례> 를 읽고 <논거> 를 활용하여 <조건> 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각 <사례> 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자신이 선택한 <입법정책> 을 지지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다른 정책을 반박할 것
2. 지지 또는 반박하는 경우 관련된 <논거> 를 활용할 것
3. <논거> 를 활용할 때는 논거①, 논거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입법정책>

1안 :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

2안 :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며, 설립 이후에도 행정관청이 법인의 활동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 방안

※ 법인이란 사람 외에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사례>

<사례 1> X국의 A법인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운영비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 기관의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A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취업 알선, 인권 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지출 내역 등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최부자 씨도 부를 대물림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을 구상 중이지만,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저하고 있다. X국에는 최부자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별로 없다.

<사례 2> Y국의 B법인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대표자는 전국 20개 지점의 전화 상담사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지역에 있는 소외 계층 아동들의 나눔 교육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계좌에서 월 1만 원씩 자동 출금하게 하

여, 그 금액이 총 10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임직원들의 급여와 업무용 차량 구입 및 해외 연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20% 정도가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논거>

① 고대에는 노예가 단지 물건으로 취급되어 거래의 대상이었다. 근대에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을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을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본다. 현대에는 법인 설립과 운영도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으로 보아 법인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② 사람과 달리, 법인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법률이 인위적·기술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어떤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고 법인이 마구 설립될 우려가 있다. 어떤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그 목적으로 삼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③ 미래경영학자 드러커(Drucker)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정부(제1섹터)나 기업(제2섹터)의 역할보다 비영리조직(NPO)을 중심으로 한 제3섹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영리사업을 마냥 늘릴 수 없고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근원적 한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④ 로마법학자 사비니(Savigny)는 권리를 인간의 의사 지배로 보면서, “모든 권리는 개개인에 내재하는 도덕적인 자유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원래 사람의 개념과 일치하지만, 인간의 집단적인 자유의 실현도 가능하도록 법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법인이란 사람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지 사람을 벗어난 새로운 주체는 아니다.

⑤ 법인은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거나 그 사람에 대

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외형상 법인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인만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 STEP 1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①	각 사례의 문제점 요약	①	사례가 둘이다. 한쪽만 요약하면 조건 불충족이다.
1-②	선택한 정책 지지 이유	②③	사례의 문제점과 연결해야 한다.
1-③	다른 정책 반박	④	상대 논거를 그대로 옮긴 뒤 반박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2·3	논거 활용, 논거① 형식 표기	전체	개수 하한은 없지만 5개 중 4개 이상이 무난하다.

■ STEP 2 두 사례의 구조 — 출제자가 맞춘 균형

	〈사례 1〉 X국	〈사례 2〉 Y국
현재 제도	사실상 1안(설립·운영 규제)	사실상 2안(견제 없음)
드러난 실패	공익 의지가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음	공익을 가장한 후원금 유용
1안 지지자에게	처리해야 할 약점	핵심 근거
2안 지지자에게	핵심 근거	처리해야 할 약점

출제 의도 읽기

〈사례 1〉은 1안 체제의 실패, 〈사례 2〉는 2안 체제의 실패다. 어느 정책을 골라도 한 사례는 자기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 문항의 핵심 단락은 **불리한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다. 1안이면 “사례 1의 문제는 허가제 자체가 아니라 절차의 복잡함”으로, 2안이면 “사례 2의 문제는 허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배후의 사람이 책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처리한다.

■ STEP 3 논거 태깅

논거	요지	1안	2안	메모
①	법인 설립도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	반박	지지	2안의 원리적 근거
②	법인은 인위적 주체 → 엄격한 요건, 견제 장치 필요	지지	반박	1안의 핵심
③	제3섹터의 역할 확대 → 자유로운 설립 활성화	반박	지지	〈사례 1〉과 직결
④	법인은 사람의 자유와 결부(사비니)	반박	지지	1안은 “자유 남용까지 보호할 이유 없다”로 역이용
⑤	법인 뒤에 숨은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양쪽	양쪽	1안: 사전 감독 필요 / 2안: 사후 책임 추궁으로 충분

■ STEP 4 개요 (1안 선택)

단락	핵심 문장	논거	분량
①	두 사례 요약 → 사례 2가 더 근본적 → 1안	—	약 250자
②	법인은 인위적 주체, 설립요건이 신뢰의 근거	②	약 180자
③	사후 책임 추궁은 늦고 피해자가 흩어져 있음 → 상시 감독 필요	⑤	약 200자
④	2안 반박: 자유의 남용은 보호 대상 아님 · 제3섹터 확대의 전제는 신뢰 · 사례 1은 절차 개선으로	①③④	약 300자
⑤	결론	—	약 70자

■ STEP 5 예시답안

예시답안 A — 1안 선택

1001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서로 다른 실패를 보여 준다. 〈사례 1〉에서는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공익법인을 세우려는 사람이 많은데도 실제 설립이 드물다. 〈사례 2〉에서는 설립과 활동에 대한 견제가 없어, 공익을 내세워 모은 100억 원의 후원금 가운데 20%만 목적 사업에 쓰이고 나머지는 임직원의 이익으로 흘러갔다. 나는 두 실패 가운데 〈사례 2〉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1안을 지지한다.

첫째, 법인은 사람과 달리 법률이 기술적으로 만들어 낸 권리 주체다. 설립요건을 엄격히 정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어떤 단체가 법인인지 알 수 없고 법인이 마구 설립될 수 있다(논거②). 〈사례 2〉의 후원자들은 전화 한 통으로 '공익단체'라는 말만 믿고 돈을 냈다. 행정관청의 허가는 이런 신뢰에 최소한의 공적 근거를 부여한다.

둘째, 설립 이후의 감독은 법인이 개인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는다. 외형은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사업체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논거⑤). 〈사례 2〉처럼 후원금이 차량 구입과 해외 연수에 쓰인 뒤에야 책임을 묻는 것은 늦다. 피해가 수많은 소액 후원자에게 흩어져 있어 개인이 사후에 책임을 추궁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이 수입·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안을 지지하는 측은 법인 설립도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이며(논거①, 논거④), 제3섹터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민간 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논거③). 그러나 법인이 사람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라면, 그 자유를 남용해 타인의 선의를 착취하는 것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 제3섹터가 커질수록 공익을 가장한 단체의 피해도 커지므로, 활성화의 전제는 신뢰다. 〈사례 1〉의 설립 위축은 허가제 자체가 아니라 절차의 복잡함에서 오는 문제다. 따라서 허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처리 기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1안 안에서 개선할 수 있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자유는 공익에 대한 사회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으므로 1안이 타당하다.

활용 논거: ①②③④⑤ (5개) · 논거⑤를 '사전 감독의 필요'로 해석 · 불리한 〈사례 1〉은 절차 개선으로 처리

예시답안 B — 2안 선택

974 자 (공백 포함)

〈사례 1〉의 문제는 공익 활동을 하려는 시민의 의지가 행정 규제에 막혀 제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A법인이 있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사람도 많지만, 설립·운영 규제 때문에 공익법인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사례 2〉의 문제는 B법인 대표자가 공익단체라는 외형을 이용해 모은 후원금의 80%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나는 2안을 지지한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개인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다. 근대 이후 모든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며, 현대에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도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으로 인정된다(논거①). 사비니가 말했듯 법인은 사람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다(논거④). 그렇다면 뜻을 모아 공익 활동을 하려는 시민에게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 행사를 국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필요도 2안을 요구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비영리사업을 무한히 늘릴 수 없고, 기업은 영리 추구라는 한계가 있다(논거③). 〈사례 1〉의 최부자 씨처럼 사회 환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법인을 세울 수 있어야 제3섹터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1안을 지지하는 측은 설립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면 법인이 마구 설립되고 견제 장치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논거②). 그러나 〈사례 2〉의 문제는 허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후원금을 빼돌린 사람이 법인 뒤에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은 법인도 설립 뒤에 목적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허가는 이런 일탈을 막는 확실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법인의 형식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 배후의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다(논거⑤). 여기에 설립요건으로 회계 공시 의무를 포함하면, A법인처럼 투명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후원자의 신뢰를 얻고 B법인 같은 단체는 시장에서 걸러진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자유롭게 설립하되 남용한 사람에게 사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2안이 공익과 자유를 함께 살리는 길이다.

활용 논거: ①②③④⑤ (5개) · 논거⑤를 '사후 책임 추궁'으로 해석 · 불리한 〈사례 2〉는 책임 구조의 문제로 처리

■ STEP 6 채점 포인트

- **두 사례의 문제점을 각각 요약했는가.** 조건 1의 첫 요구다. 첫 단락에서 두 사례를 한 문장씩 정리하면 된다.
- **같은 논거⑤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두 예시답안은 같은 논거를 정반대 방향으로 쓴다. 이처럼 양쪽 자료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 **불리한 사례를 피하지 않았는가.** 자기 입장에 불리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으면 논증이 일방적으로 보인다.

실전 팁

두 예시답안을 나란히 놓고 읽어 보자. 논거는 같고 결론은 반대다. A형에서 점수를 가르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7-4 연습 문항

연습 문항 7개는 오래된 기출부터 최근 기출 순으로 실었다. 각 문항은 **원문 → 워크시트 → 답안 작성란** 순서다. 시간을 재고(1문항 55분) 워크시트부터 채운 뒤 답안을 쓴다. 해설과 예시답안은 7-6에 모아 두었다. 답안을 다 쓰기 전에는 펼치지 않는다.

번호	문항	이 문항에서 특히 연습할 것
연습 1	2018-1 의료 빅데이터	자료를 모두 쓰기 — 불리한 자료까지 내 논거로
연습 2	2018-2 세대 간 갈등	제시문 셋을 평가 하며 방안 설계하기 (1300~1600자)
연습 3	2020-2 규제 형식	하나의 원칙을 두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연습 4	2021-1 과거청산 입법안	의견서 형식 · 조항별 평가와 수정안
연습 5	2022-1 데이터 정책	상대 정책의 전제(시장의 합리성) 공격하기
연습 6	2023-1 가상화폐 규제	여론 10개 중 5개 이상 · 수단별로 판단 나누기
연습 7	2026-2 청소년 AI 규제	결정 과정(절차)의 정당성 평가 · 장단점 비교

연습 1

2018학년도 1번 — 의료 빅데이터

입장 2개 중 선택 · 자료 6개 모두 활용 · 900~1200자 (당시 40점)

1. <보기>에 나타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조건>에 따라 논변하시오. (900~1200자, 40점)

<조건>

1.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입장을 반박할 것.
2. 자료를 모두 논거로 활용할 것.
3. 자료를 활용할 때 ‘자료 ①’, ‘자료 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보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 작은 규모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개인의 의료 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료>

- ① 몇 년 전 구글의 연구원은 『네이처』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내용은 구글이 겨울철 미국에서 독감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국적 규모에서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유행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구글이 사용한 방법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살피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보내는 검색 질문은 매일 30억 개 이상이었으므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충분했다.
- ②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외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정보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여 음식점 이용 후기 데이터를 위생 점검 데이터와 연계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음식점에 대한 위생 평가 점수를 만들어 고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람들은 관련 홈페이지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음식점이 더 위생적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 ③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

포트」는 매우 인상적인 사회를 그려 낸다. 이 사회에서는 세 명의 예언자가 범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그가 장래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④ 혁신적인 과학기술은 때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과학자가 본래부터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도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 역시 과학자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⑤ 미국의 유통업체 ‘타깃’은 고객들의 구매 패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유용한 맞춤형 광고 전단지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타깃’은 10대 여학생의 구매 패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아기 용품 쿠폰이 첨부된 광고 전단지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⑥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 의해 지득되거나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반박·양쪽·함정

번호	요지	정부	시민단체	메모
①				
②				
③				
④				
⑤				
⑥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자료·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연습 2

2018학년도 2번 — 세대 간 갈등

방안 제시 · 제시문 3개 모두 평가 · 1300~1600자 (당시 60점)

2. <사례>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에 따라 제시하시오. (1300~1600자, 60점)

<조건>

1. 제시문 (가), (나), (다) 모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2.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것.

<사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파급 효과는 21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문제 되기 시작했으며,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점차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고령 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보수화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재원이 축소되어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의 투입에서 고령 인구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강화를 우선할 것인지,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 및 실업 대책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시문>

(가) 가장 대표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으로 다수결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정당성을 위한 전제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정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문적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의 다수결이 정당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한계로는 소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결정일 것, 즉 다수와 소수가 합의한 공동의 기초, 근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결이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가 되어 소수자들의 극단적 저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세대 간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다. 후속 세대가 선행 세대로부터 과중한 부담을 떠안은 경우는 정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세대 간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행 세대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몫과 후속 세대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과 관련해서 합당한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치 같은 세대의 사람들처럼 서로에 대해 책무를 지게 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지도 가상적인 협상 주체로 고려하여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정의로운 저축의 비율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빈곤한 사회라면 높은 저축률이 필요한데도 저축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부유한 사회라면 더 높은 저축률이 기대된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 근접하고 시민의 권리가 충실하게 실현된다면 요구되는 저축은 영(零)에 가깝게 될 것이다.

(다)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세대 간 불평등’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청년 문제의 사회 구조적 측면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본래 세대 간 갈등은 히피문화, X세대, Y세대와 같은 청년 문화와 기성 문화의 충돌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그런데 사회 문화적인 범주에 속하는 세대 간 갈등 개념을 경제적 범주로 끌어들이며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청년 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도, 장년 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다 부유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보다는 오히려 부의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반박·양쪽·함정

번호	요지	내 방안	메모
(가)			
(나)			
(다)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자료·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1300~1600자

연습 3

2020학년도 2번 —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규제 형식 2개 중 선택 · 규제 지침 7개 · 두 사례 일관 적용 · 900~1200자

2. <사례>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건> 에 따라 <사례> 를 해결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자신이 선택한 <규제 형식> 을 두 <사례> 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
2.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규제 형식> 을 반박할 것
3. <규제 지침> 을 활용하여 논변할 것
4. <규제 지침> 을 활용할 때는 가, 나, 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사례 1> 최근 개나 고양이 이외에도 파충류나 야생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인이 키우는 것을 금지할 뿐 그 밖의 동물을 개인이 키우거나 거래하는 것에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지 않는 뱀, 거북이, 악어, 북극여우 등과 같은 야생동물이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동물 보호 단체 P는 충분한 정보나 지식 없이 개인이 야생동물을 키우게 되면 공중 보건 위해, 질병 및 상해 위험, 생태계 위협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키우던 뱀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고도 있었음을 강조한다. P는 보건 당국이 지정한 동물만을 개인이 반려 동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례 2> 스타트업(start-up) 기업 Q는 이용자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 요금을 알려 주는 주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현재 활용되지 않는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Q는 사업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에는 주차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지만 이를 허용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사업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Q는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수년 동안 개정 작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Q는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규제 형식>

- (1)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 허용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형식
- (2)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 금지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형식

<규제 지침>

- 가. 규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이에 응답해야 한다.
- 나. 규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다. 규제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정책이나 가치를 형성하고 조정해야 한다.
- 라. 규제는 사회 및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 마. 규제는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 바. 규제는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 사. 규제는 사회에 해악이 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해야 한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4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 · 반박 · 양쪽 · 함정

번호	요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메모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 · 자료 · 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연습 4

2021학년도 1번 — 과거청산 입법안

의견서 · 조항별 평가와 수정안 · 관점 3개 고려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관점>을 고려하여 <조건>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입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할 것
2.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제시할 것
3. 입법안을 활용할 때는 가①, 나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4. 소급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 것

<사례>

A국에서는 10년 넘게 폭정을 일삼아 온 독재 정권이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의회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의회정부는 과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을 부패한 공직자 및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자들로 보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1년 넘게 지지부진한 논의만 계속되었다. 이에 더 이상 과거 청산을 늦출 수 없었던 의회정부는 논의를 종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가. 이 법에서 부패 공직자는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 ① 독재 정권에서 임명된 장·차관 중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 ② 독재 정권에서 선출된 여당 국회의원 중 재선 이상이었던 사람
- ③ 독재 정권에서 임명된 재판관 중 각급 재판소의장이었던 사람

나. 이 법에서 부정 축재자는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 ① 독재 정권에서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 ② 독재 정권에서 주식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 ③ 독재 정권에서 세금 포탈액이 1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그런데 막상 입법안이 발표되자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 기준을 여론 조사로 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 기준을 정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A

국 의회정부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입법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관점>

1.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억울한 대상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대상자를 공개하거나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 과거 청산은 신속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스러운 과거에 얽매어 있는 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요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수행한 후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3. 과거 청산은 진실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독재 정권의 희생자와 시민혁명의 주체들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4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 · 반박 · 양쪽 · 함정

번호	요지	유지	수정	삭제	메모
가①					
가②					
가③					
나①					
나②					
나③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 · 자료 · 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연습 5

2022학년도 1번 — 데이터 독점 정책

A국·B국 정책 중 선택 · 자료 8개 중 3개 이상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A국 정책>과 <B국 정책>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 주장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 (2) 이유를 제시할 때 지지 또는 반박의 근거로 <자료>를 활용하시오.
- (3)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시오.
- (4) 자료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사례>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data)가 형성 및 축적된다. 더불어 플랫폼(platform) 기업처럼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혁신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및 불평등 문제도 심화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생산 및 보유에 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 플랫폼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start-up) 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

<A국 정책> A국은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데이터 강제 매수’이다. 특정한 기업이 중요한 데이터를 독점하는 경우, 국가가 데이터를 강제로 매수하여 이를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데이터 세(稅)’를 신설하고 데이터를 보유하는 양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B국 정책> B국은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이다.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여 자율적인 시장 질서에 의해 데이터 보유를 둘러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 데이터 풀(pool)’ 조성이다. 공공 단체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데이터를 기부 받아 자율적으로 공공 데이터 풀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데이터 풀을 조성한 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고자 한다.

<자료>

- ①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본래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탁월한 능력으로 획득한 결과에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
- ② 물건과 데이터는 엄연히 구별된다. 데이터는 환경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환경이 우리 모두를 위한, 모든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되는 것처럼 데이터 역시 공공재로서 어느 일방이 독점할 수 없다.
- ③ 시장은 합리적인 체계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무질서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 ④ 자신의 의지와 노동으로 획득한 결과물은 자기 생명처럼 자신의 소유물이 된다. 이러한 소유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 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자율성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인간은 존엄해질 수 있다.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성을 억압하면 인간은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⑥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자연계의 진화처럼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점으로 다양한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혁신은 실현될 수 없다.
- ⑦ 오늘날 데이터는 물건처럼 소유, 이용,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 존중 원칙은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⑧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감정을 지닌 존재이다. 때로 감정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장을 광기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4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반박·양쪽·함정

번호	요지	A국	B국	메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자료·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연습 6

2023학년도 1번 — 가상화폐 '리오' 규제

규제에 대한 견해 · 여론 10개 중 5개 이상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여론〉을 활용하여 A국 당국의 '리오' 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 (2)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 5개 이상의 〈여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하시오.
- (3) 〈여론〉을 활용할 때는 여론①, 여론⑩과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사례〉

A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사람의 배설물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신기술 장치를 개발하였다. A국에서는 이 신기술 장치를 공공화장실은 물론 개인 주거에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 처음에는 신기술 장치를 반신반의하던 A국 시민들은 자신의 배설물이 에너지원으로 변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신기술 장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A국 유명 컴퓨터 공학자는 신기술 장치를 통해 변환된 에너지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공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A국 시민들은 신기술 장치와 공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배설물을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A국 시민들은 기존 법정화폐 '오(O)'와 구분하여 '리오(ReO)'라고 불렀다.

이렇게 '리오'가 널리 사용되자 A국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배설물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리오'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심에 시민들은 식사 시간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과식을 하였고 그로 인해 비만 인구가 늘어났다. 또한 '리오'의 보유와 이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독이나 과세가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오'보다 '리오'의 사용을 선호하였다. 그에 따라 '오'와 동일하던 '리오'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오'의 법정화폐로서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A국 당국은 '리오'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시민 1인당 발행할 수 있는 '리오'의 총량을 제한하고, '리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 발표가 있자, '리오'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을 기대한 A국 당국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여론이 들끓었다.

〈여론〉

- ①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어. 조금 과식하더라도 더 많은 '리오'를 얻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해. 조금 더 일하고 성과급을 더 받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 ② 신기술 장치를 개발해서 보급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잖아.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봐. 이럴 때 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 ③ '리오'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팔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 발표 이후 '리오'는 가치 등락이 너무 심해. 그래서 최근에는 '오'로 '리오'를 사고팔면서 큰 차익을 남기기도 하잖아. 그런 점에서 '리오'는 화폐보다 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아.
- ④ 당국이 신기술 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잖아. 그런데 환경보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장치를 관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그런 점에서 '리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 ⑤ '리오'의 1인당 발행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까? 사람마다 배설물 양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자신의 배설물을 다른 가족에게 주어도 잘 알 수가 없잖아. 자신의 배설물을 아예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도 생길 거야.
- ⑥ '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 새로운 소득이 없는데 '리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더욱 그래. '리오'의 가치가 폭락하면 당국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 ⑦ 애초에 신기술 장치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었어. 그런데 비만이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런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부과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 ⑧ 사람들은 유혹에 약해. 이럴 때는 윤리나 종교가 큰 역할을 하지. 그런데 때로는 윤리나 종교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때 당국이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야.
- ⑨ 화폐의 기본 기능은 지불 수단이야. 이 기능을 갖추었다면 화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리오'의 가치가 등락이 있지만, '오'의 가치도 외환시장에서는 등락을 거듭하잖아. 그런 점에서 '리오'도 똑같은 화폐로 봐야 해.
- ⑩ 신기술 장치를 통해 변환된 에너지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잖아. ‘리오’는 그 에너지원이 전환된 것뿐인데 과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리오’ 때문에 신기술 장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이 더 보호되었는데도 말이야.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반박·양쪽·함정

번호	요지	총량 제한	과세	메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자료·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연습 7

2026학년도 2번 — 청소년 생성형 AI 규제

K국 결정 지지 또는 반박 · 정책A·B 장단점 비교 · 의견 8개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의견>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의견>을 활용하여 K국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박하시오.
- (2) 정책A와 정책B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시오.
-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⑧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시오.

<사례>

K국 인공지능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사용 이유로는 관심과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 활용, SNS 게시물 제작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K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하거나 각종 범죄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되었다. 또한 해당 언론 보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K국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13세 미만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정책A). K국은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와 역량 개발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연 매출의 5% 범위에서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입안했다(정책B).

K국은 정책B에 관한 찬반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책B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B를 찬성하는 그룹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이, 정책B를 반대하는 그룹에는 청년층과 과학기술자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

K국은 정책A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B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외로 높게 나온 것을 당혹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K국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의학자·교육학자·범죄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

과에 근거하여 정책B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견>

- ① 어떤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발휘하는지는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면 시범 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② 규제는 인간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행위 유도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만큼의 강제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 ③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여론에 의존하는 정책 결정은 소수의 권리를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자율 규제가 강조되지만 이 역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 ⑤ 규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어떤 지식이 이로운지 또는 해로운지는 그 수용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므로 현실적인 해악이 발생하기도 전에 특정 지식의 이용을 사전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
- ⑦ 국가는 가정의 문제에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녀 교육 영역에서 부모의 결정을 국가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⑧ 규제는 그 대상자가 수용할 때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에 다수 국민의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반박·양쪽·함정

번호	요지	결정 지지	결정 반박	메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자료·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7-5 A형 점검표

답안을 다 쓴 뒤, 제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다. 연습 문항을 채점할 때도 이 표를 쓴다.

영역	점검 항목	확인
조건	조건을 동사 단위로 쪼갬고, 요구마다 답안에 해당 문장이 있다	☐
조건	자료 활용 개수의 하한을 채웠다 (조건에 없더라도 4개 이상)	☐
조건	자료 표기 형식(의견①, 논거② 등)을 조건 그대로 지켰다	☐
조건	배제 조건(절충론·시기상조론·소급입법 등)을 어기는 문장이 없다	☐
입장	첫 단락에서 선택과 판단 기준을 함께 밝혔다	☐
입장	답안 끝까지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 (절충으로 새지 않는다)	☐
근거	자료를 요약하지 않고 주장 문장 안에서 썼다	☐
근거	내 입장에 불리한 자료나 사례를 적어도 하나 다루었다	☐
반박	다른 선택지의 장점을 먼저 인정한 뒤 한계를 짚었다	☐
반박	반박이 전제·적용 결과·수단의 적합성 가운데 하나를 겨룬다	☐
형식	900~1200자 안이다 (한 줄 40자 기준 23~30줄)	☐
형식	결론 단락에 새 논거가 없다	☐

7-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예시답안은 가능한 여러 답안 가운데 하나다. 입장이 달라도 조건을 지키고 판단 기준이 분명하면 좋은 답안이다. 자기 답안과 비교할 때는 **결론**보다 **구조**를 비교한다.

연습 1 2018-1 의료 빅데이터

조건의 핵심 — 자료 6개를 모두 써야 한다. 그래서 내 입장에 불리한 자료도 버릴 수 없다.

태깅 — 정부 측 지지: ①② (빅데이터의 성과), ④ (과학기술 가치증립). 시민단체 측 지지: ③ (예측에 따른 불이익), ⑤ (민감 정보 추론), ⑥ (질병명은 민감 정보).

풀이의 열쇠 — 시민단체를 택하면 ①②가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개인 의료 기록 없이** 얻은 성과다. 이 점을 짚으면 ①②가 오히려 “개인정보 없이도 된다”는 근거로 바뀐다. ④는 “판단 대상은 기술이 아니라 수집 방식”으로 받아친다.

예시답안 — 시민단체 입장

1001 자 (공백 포함)

나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의료 정보라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아 공유하는 방식이 그 가치를 얻는 데 꼭 필요하지 않으며, 그 위험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의료 정보는 보호의 필요가 특히 큰 정보다.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조차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자료 ⑥). 하물며 전 국민의 진료 기록을 국가가 수집해 공유한다면 침해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은 사람이 드러내지 않은 사실까지 추론해 낸다. '타깃'은 구매 패턴만으로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예측하고 아기 용품 쿠폰을 보냈다(자료 ⑤). 의료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밝히지 않은 질병이나 유전적 위험까지 드러낼 수 있다.

셋째, 예측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사회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예측만으로 격리한다(자료 ③). 질병 위험이 높다고 예측된 사람이 보험 가입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그 사회가 이미 현실이 된 것이다.

정부 측은 과학기술 자체에는 가치판단을 할 수 없으며 그 활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한다(자료 ④). 그러나 활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정보 수집을 신중히 해야 할 이유다. 판단의 대상은 기술이 아니라 정부가 선택한 수집 방식이다. 또한 정부 측이 강조하는 빅데이터의 성과는 개인 의료 기록 없이도 얻을 수 있다. 구글은 익명의 검색어 데이터만으로 독감의 확산을 예측했고(자료 ①), 샌프란시스코는 이용 후기와 위생 점점이라는 비개인 데이터를 결합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자료 ②). 공익적 성과는 집계되고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 의료 정보를 직접 수집·공유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의료 빅데이터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활용 자료: ①~⑥ 전부 · 불리한 ①②④를 재해석해 흡수

연습 2 2018-2 세대 간 갈등

조건의 핵심 — 제시문 셋을 평가하라는 것은 요약만 하지 말고 각각의 타당성과 한계를 말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평가가 방안을 강화하는 데 쓰여야 한다.

구조 — (가)는 다수결의 한계, (나)는 세대 간 정의의 원칙, (다)는 세대보다 계층이라는 관점을 준다. 예시답안은 세 제시문을 **방안의 세 부분**에 하나씩 대응시키고, 각 제시문의 한계를 다음 제시문이 보완하도록 배열했다.

분량 — 이 문항은 1300~1600자다. 현재 형식(900~1200자)으로 연습하려면 (가)~(다) 평가를 한 단락씩 줄이면 된다.

예시답안 — 장기 원칙 + 필요 기준 지원

1423 자 (공백 포함)

〈사례〉의 갈등은 한정된 복지 재원을 연금·건강보험과 교육·실업 대책 가운데 어디에 먼저 쓸지를 둘러싼 대립이다. 나는 이 갈등을 줄이려면 재원 배분을 그때그때의 다수결에 맡기지 않고, 세대 간 정의의 원칙을 미리 정해 두되, 지원 대상은 세대가 아니라 실제 필요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본다. 세 제시문은 이 방안의 세 부분에 각각 근거를 준다.

(가)는 다수결이 정당하려면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어야 하고,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근본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기준은 〈사례〉에 날카롭게 적용된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선거에서 다수가 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다. 게다가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결정에 참여조차 못 한다. 이런 조건에서 재원 배분을 다수결에만 맡기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다. 다만 (가)는 다수결의 한계를 보여 줄 뿐,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 기준을 주는 것이 (나)다. (나)는 세대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보고,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세대처럼 책무를 지는 원칙을 세우라고 한다. 이를 제도로 옮기면, 연금과 교육 투자의 장기 배분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세대별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된다. 미래 세대를 가상의 협상 주체로 고려한다는 (나)의 생각은, 장기 재정 추계에서 후속 세대의 부담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적절한 저축률이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므로, 이 원칙은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규칙이어야 한다. 다만 (나)는 세대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같은 세대 안의 격차를 놓칠 수 있다.

(다)는 바로 그 약점을 보완한다. (다)는 청년이라고 모두 가난하지 않고 장년이라고 모두 부유하지 않으므로, 갈등의 본질은 세대가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라고 본다. 이 지적은 옳다. 연금 수급자 가운데에도 빈곤 노인이 있고 자산가가 있으며, 청년 가운데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 다만 (다)처럼 세대 문제를 부의 불평등으로 완전히 환원하면,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후속 세대에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는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 다수결의 한계를 인정해 재원 배분의 장기 원칙을 선거 주기와 분리한다. 둘째, 그 원칙을 세대 간 정의에 따라 정하고 후속 세대의 부담을 공개한다. 셋째, 개별 급여는 세대가 아닌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청년과 노인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구도에서 벗어나, 두 세대의 약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다.

제시문 (가)(나)(다) 모두 평가 · 각 제시문의 한계를 짚고 다음 제시문으로 보완하는 구조

연습 3 2020-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조건의 핵심 — “두 사례에 **일관되게**”가 핵심이다. 〈사례 1〉은 포지티브, 〈사례 2〉는 네거티브로 나누어 적용하면 조건 1 위반이다.

구조 — 〈사례 1〉은 포지티브, 〈사례 2〉는 네거티브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짜여 있다. 네거티브를 택하면 〈사례 1〉을, 포지티브를 택하면 〈사례 2〉를 같은 원칙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야 한다.

풀이의 열쇠 —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지할 것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 〈사례 1〉도 풀린다. 규제 지침은 가·나·라·마(네거티브 친화), 다·마·사(포지티브 친화)로 나뉘지만, 사·마도 금지 목록으로 충족할 수 있다.

예시답안 — 네거티브 규제

998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규제가 사회의 요구에 제때 응답하지 못한다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례 1〉에서는 멸종 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위험이 드러났는데도 금지 규정이 없어 거래가 방치되고 있다. 〈사례 2〉에서는 주차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허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사업이 막혀 있다. 나는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하고 이를 두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사례 2〉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면 주차 공유는 금지 목록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새로운 서비스가 조려 개정을 기다리며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다(가). 유희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차난을 줄이는 서비스는 사회의 공리를 늘리며(바),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나).

〈사례 1〉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지할 것을 명확히 정하는 방식이다.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수·독사, 인수공통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종, 국내 생태계에 정착할 위험이 있는 종을 금지 목록에 올리면 해악을 예방할 수 있다(사). 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에도 부합한다(마). 목록에 없는 동물은 기를 수 있게 하되, 새로운 위험이 확인되면 목록을 신속히 보완하면 된다.

동물 보호 단체 P가 주장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지정된 동물만 허용하므로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례 2〉가 보여 주듯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해한 행위까지 막는다. 규제 당국이 모든 동물의 안전성을 미리 심사해 목록을 만들 때까지 시민의 선택은 정지된다. 사회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까지 국가가 허가를 쥐게 되면 규제는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라).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금지하는 틀이 아니라 위험한 것을 정확히 골라내는 목록이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는 〈사례 1〉에서는 해악을 정밀하게 막고 〈사례 2〉에서는 혁신을 풀어 준다. 두 사례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요구에 모두 응답할 수 있다.

활용 지침: 가·나·라·마·바·사 · 〈사례 1〉을 금지 목록 방식으로 해결해 일관성 확보

연습 4 2021-1 과거청산 입법안

조건의 핵심 — ‘의견서’라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평가와 수정안을 함께 요구한다. 조항 여섯 개를 하나씩 모두 다룰 필요는 없지만, 성격이 다른 조항은 구별해야 한다.

풀이의 열쇠 — 가①~나②는 직위·금액이라는 **지표**이고, 나③만 **위법 행위** 자체다. 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이 문항의 분수령이다. 관점 1(억울한 대상자 방지)을 중심에 두되, 관점 3(철저한 청산)과 충돌하지 않는 수정안을 내면 설득력이 높다.

배제 조건 — 소급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소급 처벌은 위헌” 같은 문장은 조건 위반이다.

예시답안 — 기준을 '조사 대상'으로 전환

1025 자 (공백 포함)

이 의견서는 입법안이 과거 청산의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수정안을 제시한다. 과거 청산은 철저해야 하지만, 억울한 대상자가 생기면 새 정부가 무너뜨린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해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입법안을 그대로 고수하는 데 반대하고, 형식적 기준을 조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바꾸는 수정을 제안한다.

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직위나 금액이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부패와 부정을 단정한다는 점이다. 가①은 재임 1년 이상인 장·차관을 모두 부패 공직자로 보지만, 같은 장관이라도 민생 부처에서 성실히 일한 사람과 정권의 탄압에 가담한 사람은 다르다. 가②의 재선 여당 의원과 가③의 재판소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가③은 재판관 개인의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직위만으로 판단하므로, 독재 아래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나향도 비슷하다. 나①과 나②는 부동산과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취득한 사람을 부정 축재자로 보지만, 취득액은 부정의 증거가 아니다. 상속이나 정당한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도 포함된다. 반면 나③의 세금 포탈은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므로 부정 축재의 기준으로 적절하다. 다만 금액 기준인 1억 원은 여론 조사로 정할 것이 아니라 포탈의 경위와 규모를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

또한 기준을 여론 조사로 정한 절차도 문제다. 여론은 분노를 반영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가①~가③과 나①·나②는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를 정의하는 조항이 아니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조항으로 바꾼다. 둘째, 조사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권한 남용이나 권력과의 결탁 같은 구체적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부패 공직자 또는 부정 축재자로 확정한다. 셋째, 나③은 확정 기준으로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지 않으면서도 억울한 대상자를 막을 수 있다. 진실에 근거한 청산과 공정한 청산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다.

조항 표기: 가①·가②·가③·나①·나②·나③ · 수정안 3개 제시 · 소급입법 언급 없음

연습 5 2022-1 데이터 독점 정책

태깅 — A국 지지: ①②⑥⑧. B국 지지: ③④⑤⑦. 정확히 반반이다.

플이의 열쇠 — B국 정책의 전제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합리적”(③)이다. A국을 택하면 이 전제를 ⑧로 공격하고, 거래 활성화가 오히려 격차를 키운다는 **적용 결과**를 짚는다. 반대로 B국을 택하면 ②의 ‘데이터 = 공공재’를 ⑦의 ‘데이터 = 소유 대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주의 — 조건 (4)의 표기는 “①”처럼 번호만 쓰는 형식이다. “자료①”로 써도 감점 사유는 아니지만, 조건 그대로 쓰는 습관을 들인다.

예시답안 — A국 정책

995 자 (공백 포함)

데이터를 둘러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타당한 것은 A국 정책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신생 기업이 진입할 기회 자체를 잃는다는 데 있다. B국 정책은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자발성에 기대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첫째, 데이터는 일반적인 물건과 다르다. 데이터는 환경처럼 모든 세대를 위한 자산이며, 공공재로서 어느 일방이 독점할 수 없다(②). 플랫폼 기업이 가진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수많은 이용자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기업의 노동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유물로 보고 과세를 강제 노동에 비유하는 주장(④)이나, 소유권 존중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주장(⑦)은 데이터의 형성 과정을 무시한다.

둘째, 혁신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독점 때문에 다양한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혁신은 실현될 수 없다(⑥). A국의 강제 매수는 독점된 데이터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제공해 진입 장벽을 직접 낮춘다. 데이터 세는 보유량에 따라 누진 과세하되 공유하면 감면해 주므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인한다. 강제와 유인을 함께 쓰는 설계다.

B국 정책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믿음(③)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참여자는 감정을 지닌 인간이며, 감정은 때로 시장을 광기로 몰아넣는다(⑧). 무엇보다 데이터 시장은 이미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가격과 거래 조건을 정하는 구조이므로, 거래를 활성화하면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공공 데이터 풀도 기부에 의존하므로, 데이터를 독점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핵심 데이터를 기부할 이유가 없다.

물론 A국 정책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강제 매수는 몰수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매수이며, 공유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업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A국 정책은 자율성을 억압하기보다는 독점으로 가로막힌 다른 기업들의 자율성을 회복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활용 자료: ②③④⑤⑥⑦⑧ (7개) · B국의 전제(③)를 ⑧로 공격 · 불리한 ④⑤⑦을 재반박

연습 6 2023-1 가상화폐 '리오' 규제

조건의 핵심 — ‘규제에 대한 견해’이므로 찬반 하나로 답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는 **총량 제한**과 **과세** 두 수단으로 되어 있다. 수단별로 판단을 나누면 절충이 아니라 **분석**이 된다.

태깅 — 규제 필요: ②⑧. 총량 제한 반대: ⑤. 과세 찬성: ④⑦. 과세 반대: ⑥⑩. 성격 논쟁(화폐나 자산이냐): ③⑨. 규제 반대: ①.

풀이의 열쇠 — ③(자산)과 ⑨(화폐)의 대립을 “지불 수단이지만 차익이 생기는 자산이기도 하다”로 통합하면, 과세의 근거와 과세 대상(실현 차익)이 동시에 나온다.

예시답안 — 과세 지지, 총량 제한 반대

1018 자 (공백 포함)

나는 A국 당국이 '리오'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에는 찬성하지만, 두 가지 수단 가운데 과세는 지지하고 1인당 발행 총량 제한은 반대한다. 규제의 정당성은 개입 여부가 아니라 수단이 목적에 맞는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 사람들은 유혹에 약하고, 윤리나 종교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여론⑧). 신기술 장치가 과식과 비만, 법정화폐의 지위 약화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낳은 이상, 이를 방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감추는 일이다(여론②). 과식해서라도 '리오'를 더 얻고 싶다는 선택을 존중하자는 주장(여론①)은, 그 선택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화폐 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외면한다.

과세는 이 문제에 맞는 수단이다. '리오'는 지불 수단으로 쓰이지만(여론⑨), 규제 발표 이후 가치 등락이 심하고 '오'와의 교환으로 큰 차익을 얻는 투자 대상이 되었다(여론③). 차익이 생기는 자산이라면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며, 과세는 '리오'가 '오'보다 유리하다는 왜곡을 줄여 법정화폐의 지위를 회복시킨다. 걷은 세금은 신기술 장치를 관리하고 비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쓸 수 있다(여론④, 여론⑦). 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여론⑥)은 타당하므로, 과세는 보유가 아니라 '오'로 교환할 때 실현된 차익에 부과해야 한다. 또 에너지원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리오'에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여론⑩)도 있지만, 과세 대상은 에너지가 아니라 가상화폐로 전환되어 거래되며 생긴 이익이다.

반면 총량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 배설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고, 가족에게 넘기거나 타인에게 파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여론⑤). 감시할 수 없는 규제는 정직한 시민에게만 부담을 주고, 배설물을 사고파는 새로운 음성 시장을 만들 뿐이다. 과식 문제는 발행량 제한보다 과세 수입을 활용한 건강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A국 당국은 총량 제한을 철회하고, 실현 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규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활용 여론: ①~⑩ 전부 (조건: 5개 이상) · 수단별 판단으로 구조화

연습 7 2026-2 청소년 생성형 AI 규제

조건의 핵심 — 지지·반박의 대상은 정책B 자체가 아니라 **K국의 결정**(여론에 반해 전문가 자문만으로 원안 시행)이다. 정책의 내용과 결정 과정을 모두 다룰 수 있다. 조건 (2)의 장단점 비교는 두 정책 **모두**에 대해 해야 한다.

태깅 — 결정 지지: ②③④⑤. 결정 반박: ①⑥⑦⑧.

풀이의 열쇠 — 사례에 숨은 사실 두 가지를 찾는다. 첫째, 자문위원회에 과학기술자가 없다(⑤를 반박할 근거). 둘째, 반대 그룹은 규제 대상자와 기술 당사자다(③을 반박하고 ⑧을 강화할 근거).

예시답안 — K국 결정 반박

966 자 (공백 포함)

나는 여론의 반대에도 전문가 자문만을 근거로 정책B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한 K국의 결정에 반대한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정책B는 수단의 강도와 결정 과정 모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먼저 두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A의 장점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부모의 동의를 결합해 가정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이다(의견⑦). 단점은 자율 규제가 시장의 실패를 막지 못하고(의견④), 부모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B의 장점은 16세 미만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매출의 5%에 이르는 과징금으로 강제하므로 행위 유도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이다(의견②). 단점은 딥페이크나 범죄 정보 같은 해악과 무관한 학습·창작 목적의 이용까지 사전에 금지한다는 점이다. 현실의 해악이 나타나기도 전에 지식의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수용자의 자율적 판단을 박탈한다(의견⑥).

K국의 결정이 문제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규제의 효과는 사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K국은 시범 실시 없이 곧바로 전면 시행을 택했다(의견①). 정책B가 문해력 저하를 막는다는 근거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K국은 전문가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지만(의견⑤), 자문위원회는 청소년 정신건강의학자·교육학자·범죄심리학자로만 구성되었다. 반대 그룹의 중심인 과학기술자가 빠진 자문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다수 의견이 항상 정의는 아니라는 점(의견③)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에 반대한 사람들은 권리를 침해당하는 소수가 아니라 규제를 직접 받거나 기술을 만드는 당사자들이다. 대상자가 수용하지 않는 규제는 우회 이용을 부르고 실효성을 잃는다(의견⑧).

따라서 K국은 정책B를 그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생성처럼 해악이 명확한 기능부터 제한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효과를 검증한 뒤 확대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에는 과학기술자와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

활용 의견: ①~⑧ 전부 · 정책A·B 장단점을 한 단락에서 대칭 비교 · 결정 과정의 정당성까지 평가

제8장

B형 — 두 사례 비교형

2부 유형별 실전 | 연결 기출: 2019-1, 2022-2, 2023-2, 2024-2 · 모의고사 1회 2번, 3회 1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8-1 B형은 어떤 문제인가	89
8-2 B형을 푸는 여섯 단계	89
8-3 대표 문항 풀해설	90
대표 문항 1 2023학년도 2번 — 가스기지와 중계탑	90
대표 문항 2 2024학년도 2번 — 붕쇄와 사이버 보안	94
8-4 연습 문항	98
연습 1 2019학년도 1번 — 구조 의무	99
연습 2 2022학년도 2번 — 수문장과 배심원	102
8-5 B형 점검표	105
8-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106
연습 1 2019-1 구조 의무	106
연습 2 2022-2 수문장과 배심원	107

8-1 B형은 어떤 문제인가

B형은 구조가 비슷한 두 사례를 주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힌 뒤** 그 비교를 근거로 각 사례의 판단을 평가하게 하는 문제다. 2018~2027학년도에 4문항이 출제되었다. 네 문항 모두 첫 조건이 “유사점과 차이점”이다.

학년도	소재	자료	평가 대상과 특수 조건
2024-2	봉쇄 조치와 사이버 보안	의견 8	두 사례 논평 + 자신의 견해, 의견 4개 이상
2023-2	가스기지·중계탑 철거	관점 4	공통 논점 제시, B와 C의 주장 평가
2022-2	수문장과 배심원	관점 3	두 판단 평가, (1)의 유사점·차이점을 근거로 활용
2019-1	택시 승객과 대리 기사 구조 의무	관점 2	〈질문〉 (1)~(4) 순서대로, 실정법 판단 제외

B형의 본질

B형의 핵심 질문은 하나다. “**두 사례에 대한 판단은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유사점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의미 있는 차이점은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첫 단락의 비교가 뒤의 평가에서 다시 쓰이지 않으면 B형 답안은 둘로 쪼개진다.

8-2 B형을 푸는 여섯 단계

단계	할 일	시간	산출물
1	조건 해부	3분	평가 대상(사람·판단·주장)과 순서 확인
2	네 축 비교표	5분	사실관계·지위·형량 이익·결과를 두 칸에 채운 표 (3장)
3	공통 논점 한 문장	2분	두 사례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
4	관점·의견 태깅 + 판단 결정	6분	사례별 결론(같음/다름)과 근거 차이
5	작성	34분	비교 → 논점 → 사례 1 평가 → 사례 2 평가 → 결론
6	검토	5분	첫 단락의 차이가 평가에서 다시 쓰였는지 확인

실전 팁

3단계의 공통 논점은 2023-2처럼 조건이 직접 요구하기도 하지만, 요구하지 않아도 쓰는 것이 좋다. 두 사례의 평가를 한 기준으로 묶어 주기 때문이다. 예: “절차상 흠이 있는 공익시설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결론의 네 가지 모양

모양	뜻	예
같음-긍정	두 판단 모두 정당	2024-2 예시답안 B: 두 조치 모두 정당(〈사례 2〉는 보완 필요)
같음-부정	두 판단 모두 부당	2023-2 예시답안 B: B·C의 주장 모두 정당 → 두 회사 모두 부당
다름	한쪽만 정당	2023-2 예시답안 A, 2024-2 예시답안 A, 2022-2 예시답안
정도 차이	둘 다 부당하지만 정도가 다름	모의 1회 2번: A시와 C대학

어느 모양이든 좋다. 다만 **결론의 모양이 첫 단락의 유사점·차이점과 맞아야** 한다. 차이를 강조해 놓고 “둘 다 같다”고 결론 내면 비교가 헛돈다.

8-3 대표 문항 풀해설

대표 문항 1

2023학년도 2번 — 가스기지와 중계탑

관점 4개 · 공통 논점 제시 · B와 C의 주장 평가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시오.
- (2) <사례 1>과 <사례 2>에서 공통되는 논점을 제시하고, <관점>을 활용하여 B와 C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관점①, 관점④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사례>

<사례 1> A가스회사는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 절차를 통해 B가 소유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위에 가스 공급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가스회사의 실수로 B에게 보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B는 보상 절차에 흠이 있었고, 그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므로 공급기지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A가스회사는 공급기지를 철거하면 가스 공급 중단으로 10만 가구의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며,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공급기지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큰 비용이 소요된다고 철거에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면서 A가스회사는 시세의 2배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B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공급기지의 철거만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 2> C는 10년 전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구입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D통신회사의 중계탑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계탑에 모여든 새 떼가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중계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D통신회사는 처음 중계탑을 설치할 때 농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 한편, C의 농지가 포함된 지역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C는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 땅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C는 D통신회사를 상대로 중계탑을 철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D통신회사는 C가 애초에 농지를 구입할 때 이미 중계탑이 설치된 것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철거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C가 겪고 있는 불편도 중계탑을 철거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관점>

- ① 개인도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자신의 이해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크다면 개인의 불이익은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한다면 개인 자신도 궁극적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줄 때도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와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 ② 자유는 인격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권리는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공익을 위해 제한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권 침해 여부가 재산 가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침해라도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권리를 행사할 때는 상대방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권리를 행사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매우 작지만, 상대방에게 끼치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가 막대하다면 그러한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인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 ④ 어떠한 내용을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권리의 목적이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어긋나거나 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

STEP 1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유사점과 차이점	①	사례 요약이 아니라 비교로 쓴다
(2)	공통 논점 제시	②	한 문장의 질문 형태로
(2)	관점 활용, B의 주장에 대한 견해	③	B와 C를 각각 평가한다
(2)	관점 활용, C의 주장에 대한 견해	④	같은 관점으로 두 사람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3)	관점① 형식 표기	전체	—

STEP 2 네 축 비교표

축	〈사례 1〉 B와 가스회사	〈사례 2〉 C와 통신회사
사실관계	법정 보상 절차를 밟았으나 보상금 지급에 실패	사용권 취득도 보상도 전혀 없음
지위·관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 시세 2배 매수 제안을 거절	중계탑을 알고 농지를 삼. 주택 건축을 계획 중
형량 이익	B의 제한된 토지 이용 ↔ 10만 가구의 가스 공급	C의 영농·장래 건축 ↔ 중계탑 운영(이전 가능)
결과	철거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새 폐·소음이라는 현재의 피해

STEP 3 관점 태깅

관점	요지	B 주장	C 주장	메모
①	사회 전체 이익 > 개인 불이익	반박	반박	공익 우선 — 두 소유자 모두에 불리
②	소유권 최대 존중, 사소한 침해도 부당	지지	지지	두 소유자 모두에 유리
③	권리 행사의 이익·피해 비교, 가해 목적 금지	반박	양쪽	B에게 결정적. “오직”이라는 한정어 주의
④	실현 불가·미확정 내용은 권리 아님		일부 반박	C의 주택 건축 계획(미확정)을 겨냥

출제 의도 읽기

관점①과 ②는 두 사례에 똑같이 작용해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두 사례를 가르는 관점은 ③과 ④다. ③은 B의 사례(이익 작고 피해 막대, 2배 매수 거절)에, ④는 C의 사례(미확정 계획)에 맞춰 설계되었다. 따라서 “B는 불인정, C는 인정”이 출제자가 예상한 기본 구도이고, 이를 뒤집으려면 관점②를 중심에 세워 ③의 ‘오직’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예시답안 B).

STEP 4 개요 (B 불인정, C 인정)

단락	핵심 문장	관점	분량
①	유사점 1문장 + 차이점(힘의 크기, 매수 제안, 철거의 영향)	—	약 280자
②	공통 논점 + 판단 기준(관점③)	③	약 100자
③	B: 이익 작고 피해 막대, 2배 매수 거절 → 불인정. ②는 보상으로 회복 가능	③①②	약 330자
④	C: 권원 없는 사용, 이전 가능 → 인정. 주택 계획은 권리 근거 아님	④	약 300자

STEP 5 예시답안

예시답안 A — B 불인정, C 인정

1026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 절차상 흠을 안은 채 사인의 토지 위에 들어섰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철거를 요구하며, 회사는 공익과 비용을 이유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흠의 크기와 철거로 얻는 이익이 다르다. 〈사례 1〉은 법정 보상 절차를 밟았으나 보상금 지급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고, 회사는 시세의 2배로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철거하면 10만 가구가 가스 공급을 잃는다. 〈사례 2〉는 처음부터 사용권 취득도 보상도 없었고, C는 새 폐와 소음이라는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

두 사례의 공통 논점은 흠 있는 절차로 설치된 공익시설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나는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비교해야 한다는 관점③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에서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철거되더라도 B가 누릴 수 있는 이용 가치가 크지 않다. 반면 철거로 10만 가구가 겪을 불편과 재건축 비용은 막대하다. 더구나 B는 시세의 2배 매수 제안까지 거절하고 철거만을 고집한다. 흠을 바로잡을 수단이 있는데도 철거만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데 치우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관점③).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①도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소유권은 사소한 침해라도 동의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관점②는 원칙으로서 타당하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B의 재산적 이익은 충분한 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철거까지 허용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반면 C의 주장은 받아들여야 한다. D통신회사는 처음부터 권원 없이 타인의 땅을 쓰면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 이 경우까지 공익을 이유로 소유자의 희생을 요구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쪽이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중계탑은 옮겨 설치할 수 있어 철거로 인한 피해가 〈사례 1〉만큼 크지 않다. 다만 주택단지 개발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므로 그 부분은 권리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관점④). C의 청구는 현재 겪는 농업 피해만으로 충분히 정당하다.

활용 관점: ①②③④ · 관점③을 판단 기준으로 두 사례를 다르게 판단

예시답안 B — B·C 모두 인정

1030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회사가 공익을 위한 시설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면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자 회사가 공익과 비용을 내세워 거부한다는 점에서 같다. 차이도 있다. 〈사례 1〉은 법정 절차를 거쳤으나 보상금 지급에 실수가 있었고, 회사가 시세의 2배 매수를 제안했으며, 철거 시 10만 가구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례 2〉는 사용권 취득 없이 중계탑을 세웠고, C는 이미 알고 땅을 샀으며, 장래 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공통 논점은 공익을 이유로 소유자의 동의 없는 토지 사용을 계속 허용할 수 있는가이다. 나는 소유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②를 기준으로 B와 C의 주장을 모두 정당하다고 본다.

먼저 B의 경우, 법이 정한 보상 절차는 공익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통로다. 그 절차에 흠이 있다면 제한의 근거도 사라진다. 10만 가구의 불편이 크다는 사실은 회사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이유이지, 흠을 덮을 이유가 아니다. 소유권 침해 여부는 재산 가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관점②), 시세의 2배를 제시했다고 해서 팔지 않을 자유가 사라지는 않는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관점①은, 이 사례처럼 공익을 앞세운 쪽이 스스로 절차를 어겼을 때 개인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논리가 된다. 또한 관점③이 말하는 권리 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를 괴롭히는 데 있을 때를 가리킨다. 자기 땅을 되찾으려는 B의 요구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C의 주장은 더욱 정당하다. D통신회사는 처음부터 적법한 사용권을 얻지 않았다. C가 구입 당시 중계탑을 알았다는 사실이 그 불법 점유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 새 폐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실재한다. 주택 건축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관점④), 철거 청구의 근거는 장래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무단 사용이다.

결국 두 회사가 공익 시설을 유지하려면 소유자와 새로 합의하거나 법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공익은 소유권을 무시하는 근거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다.

활용 관점: ①②③④ · 관점②를 기준으로 삼고 관점③의 '오직'을 좁게 해석해 B에 적용하지 않음

■ STEP 6 채점 포인트

- **공통 논점을 한 문장으로 제시했는가.** 조건 (2)의 명시적 요구다.
- **관점③을 B에게 어떻게 적용했는가.** A는 이익-피해 비교로, B는 '오직'이라는 한정어로 다룬다. 어느 쪽이든 관점③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 **C의 주택 건축 계획을 관점④로 걸렀는가.** 두 예시답안 모두 “미확정 계획은 근거가 아니다”를 짚는다.

대표 문항 2

2024학년도 2번 — 봉쇄와 사이버 보안

의견 8개 중 4개 이상 · 두 사례 논평 + 자신의 견해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 ~1200자, 50점)

〈조건〉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시오.
2. 〈의견〉을 활용하여 〈사례 1〉과 〈사례 2〉를 논평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3. 〈의견〉은 4개 이상 활용하시오.
4.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④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사례〉

〈사례 1〉 바이러스를 통해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는 신종 독감이 A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유행하였다. 이 신종 독감은 전파 및 감염이 잘 될뿐더러 치명률도 높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되었고, A국 역시 이에 발맞추어 대응해야 했다. A국 정부는 신종 독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lock-down)를 시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게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때는 법으로 제재하였다. 동시에 전면적 행위 제한에 필요한 생필품과 손실 보상금도 충분히 지급하였다. 다행히 A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국민 대부분이 외출 금지 및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였다. 그 덕분에 A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신종 독감 유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사례 2〉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편익이 증대하였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침해도 늘어났다. 특히 A국의 경우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개인 기기로 회사의 내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기기의 보안 조치가 취약해 이를 통한 사이버 보안 침해가 급증하였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의 데이터가 적대국이나 경쟁 기업으로 유출되거나,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사고가 빈번하

게 발생하였다. 사회의 초연결로 사고의 피해는 손쉽게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A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 보안 모델을 제시하였다.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와 유사한 원칙을 법률에 따라 사이버 보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안 조치의 핵심은 보안 프로그램의 강제적 업그레이드와 철저한 본인 확인 제도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으로 제재하기로 하였다. 반면 재정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의견〉

- ① 안전은 공익이자 생명, 자유, 재산처럼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인간은 생명과 자유, 재산을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 ②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생명이나 재산, 안전보다 우선한다. 최대한의 자유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사이버 보안 침해는 독감 유행보다 사회 전체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B국에서는 핵심 송유관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이 한동안 중단되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수도 관리 회사가 사이버 침해로 상수원에 독극물이 유출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 ④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정책은 신종 독감 상황에서 성공을 거둔 전면적 행위 제한 조치를 보안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사이버 보안도 신종 독감 예방처럼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직결되기에 필요하다.
- ⑤ 인터넷은 그 어떤 공간보다 자유로운 공간이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⑥ 현대 초연결 사회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 사업자와 이용자를 구별하는 경계 중심적 보안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에 대응하려면 인터넷에서는 그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
- ⑦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가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이라는 견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⑧ 사이버 보안은 보안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만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민간이 주도해야만 보안 기술 향상도, 사이버 보안 구현도 달성할 수 있다.

STEP 1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유사점과 차이점	①	〈사례 2〉가 〈사례 1〉을 본뜬 정책이라는 연결 고리를 짚는다
2	두 사례를 논평	②③	논평 = 평가. 사례 1도 평가 대상이다
2	자신의 견해	④⑤	논평과 구별되는 결론 문장
3·4	의견 4개 이상, 의견① 형식	전체	—

STEP 2 차이를 만드는 사실

축	〈사례 1〉 신종 독감	〈사례 2〉 사이버 보안
위험	치명적 감염병, 일시적 위기	사이버 공격, 상시적 위험
수단	외출 금지·마스크, 위반 시 제재	보안 프로그램 강제 업그레이드·본인 확인, 위반 시 제재
보상	생필품·손실 보상금 충분히 지급	재정 지원 고려하지 않음
수용	국민의 적극 호응	언급 없음

출제 의도 읽기

사례 끝의 한 문장, “반면 재정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 문항의 열쇠다. 〈사례 1〉이 성공한 조건 가운데 하나를 〈사례 2〉가 빠뜨렸다는 점이 차이의 핵심이다. 의견⑦(디지털 포용)이 이 차이와 짝을 이룬다. 어느 입장을 택하든 이 차이를 다루어야 한다.

STEP 3 의견 태깅

의견	요지	사례 2 정당	사례 2 부당	메모
①	안전은 권리의 전제	지지		사례 1 정당화에도 쓰임
②	자유가 생명·안전보다 우선		지지	극단적 명제 — 쓰면 사례 1까지 부정하게 됨
③	사이버 침해가 독감보다 치명적	지지	양쪽	위험의 크기 ≠ 수단의 정당성
④	봉쇄 원칙을 보안에 적용	지지		〈사례 2〉 정부의 논리 그대로
⑤	인터넷 자유, 제약 최소		지지	
⑥	제로 트러스트 모델	지지	양쪽	기술 원리 ≠ 법적 제재 정당화
⑦	디지털 포용, 약자 부담	보완	지지	핵심 차이(재정 지원)와 짝
⑧	민간 주도 기술 발전		지지	

STEP 4 개요 (사례 1 정당, 사례 2 부당)

단락	핵심 문장	의견	분량
①	유사점(일률 의무·제재, 정책 이식) + 차이 셋(일시/상시, 보상 유무, 호응)	—	약 300자
②	사례 1 정당: 안전은 전제, 일시적·보상	①	약 150자
③	사례 2 부당: ③④ 인정 후 반박 → 자유 공간, 약자 배제, 민간 기술	③④⑤⑦⑧	약 450자
④	⑥ 재해석 + 결론	⑥	약 180자

STEP 5 예시답안

예시답안 A — 사례 1 정당, 사례 2 부당

1083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사회 전체로 퍼지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A국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점에서 같다. 〈사례 2〉의 정책은 〈사례 1〉의 성공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사례는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사례 1〉은 치명적 감염병이라는 일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지만 〈사례 2〉는 기한 없는 상시 규제다. 둘째, 〈사례 1〉은 생필품과 손실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했지만 〈사례 2〉는 재정 지원이 없다. 셋째, 〈사례 1〉은 국민의 자발적 호응을 얻었지만 〈사례 2〉는 그렇지 않다.

나는 〈사례 1〉의 조치는 정당했지만 〈사례 2〉의 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사례 1〉에서 안전은 생명과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전제였다(의견①). 전면적 행위 제한은 자유를 크게 제한했지만, 위기가 끝나면 풀리는 조치였고 손실도 보상되었다.

〈사례 2〉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이 독감보다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의견③, 의견④).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같은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첫째, 인터넷은 오늘날 일하고 배우고 표현하는 기본 공간이다. 이 공간에 대한 접근을 상시로 조건 짓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약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의견⑤). 둘째,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따르려면 그에 맞는 기기가 필요하다. 재정 지원 없이 이를 강제하면 경제적 약자가 인터넷에서 밀려난다(의견⑦). 〈사례 1〉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충분한 보상이었는데, 〈사례 2〉는 바로 그 요소를 뺐다. 셋째, 보안은 결국 기술 수준에 달려 있다. 보안 기술은 민간의 혁신으로 발전하므로, 국가가 특정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강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의견⑧).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견⑥)도 이 정책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제로 트러스트는 접속 과정마다 검증하는 기술적 설계 원리이지, 국민 전체를 잠재적 위험원으로 보고 법적 제재를 가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따라서 A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제 규범으로 다루기보다, 보안 기기 지원과 민간 보안 기술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활용 의견: ①③④⑤⑥⑦⑧ (7개) · 차이점(보상 유무)을 평가의 핵심 근거로 재사용

예시답안 B — 두 사례 모두 정당, 사례 2는 보완

1019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사회 전체로 번지는 위험에 맞서 A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은 위험의 성격과 정책 설계에 있다. 〈사례 1〉의 위험은 감염병이고, 정부는 외출 금지와 마스크 착용을 명하면서 생필품과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례 2〉의 위험은 사이버 공격이고, 정부는 보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본인 확인을 강제하면서 재정 지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두 사례 모두에서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사례 2〉는 〈사례 1〉이 성공한 조건 하나를 빠뜨렸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은 다른 권리의 전제다(의견①). 감염병이든 사이버 공격이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 두면 한 사람의 부주의가 전체의 피해로 번진다. 특히 초연결 사회에서 사이버 침해는 송유관이나 상수도처럼 생명과 직결된 기반 시설을 멈추게 할 수 있다(의견③). 〈사례 2〉에서도 개인 기기의 취약점이 회사 데이터 유출로 이어졌다. 이는 감염병의 전파 구조와 같다(의견④).

둘째, 초연결 사회에서는 누구를 믿을지 미리 가릴 수 없다.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별하던 경계 중심 모델이 무너진 만큼, 모든 접속자에게 같은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대응이다(의견⑥).

인터넷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의견②, 의견⑤).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자유는 공격자의 자유일 뿐이다. 또 보안은 민간 기술로만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의견⑧). 하지만 기술이 있어도 모든 이용자가 쓰지 않으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침해가 일어난다. 최소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문제는 재정 지원이다. 보안 조치에 맞는 기기를 갖추는 비용은 경제적 약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의견⑦). 〈사례 1〉의 국민이 협조한 이유 중 하나는 충분한 보상이었다. 따라서 A국은 〈사례 2〉의 원칙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기기 지원과 무료 보안 프로그램 보급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강제가 배제로 바뀌지 않는다.

활용 의견: ①②③④⑤⑥⑦⑧ (8개) · 같은 차이점을 '보완 과제'로 처리

■ STEP 6 채점 포인트

- **〈사례 1〉도 논평했는가.** 조건 2는 두 사례를 모두 논평하라고 했다. 〈사례 2〉만 다루는 답안이 많다.
- **재정 지원의 차이를 다루었는가.** 두 예시답안 모두 이 차이를 결론에 연결한다.
- **의견②를 조심해서 썼는가.** “자유가 안전보다 우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례 1〉의 봉쇄까지 부정하게 된다. 예시답안 B처럼 반박 대상으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8-4 연습 문항

번호	문항	이 문항에서 특히 연습할 것
연습 1	2019-1 구조 의무	〈질문〉의 순서를 지키며 양쪽 근거를 모두 쓰고 선택하기
연습 2	2022-2 수문장과 배심원	판단의 목적 과 방법 을 나누어 평가하기

연습 1

2019학년도 1번 — 구조 의무

〈질문〉 (1)~(4) 순서 · 관점 2개 · 실정법 판단 제외 · 900~1200자

1. 〈사례 1〉, 〈사례 2〉를 읽고 〈관점〉을 반영하여
〈질문〉의 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십시오. (단, 실정
법적 판단은 제외할 것) (900~1200자, 50점)

〈질문〉

-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2) A와 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3) A와 C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상이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4) 본인의 견해는 (2)와 (3) 중 어느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사례〉

〈사례 1〉 의사인 A는 해외학회 참석을 위하여 공항으로 가려고 콜택시를 요청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 운전사 B는 A를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A는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대로 가자고 하였지만, B는 자신이 빠른 길을 더 잘 안다고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았다. 길은 막혔고, 택시가 도로에 멈춰 있던 중에 B는 의식을 잃었다. A는 B를 깨워 보려 하였지만, B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비행기 출발 시각이 가까워져 다급해진 A는 B를 그대로 둔 채 다른 택시를 타고 다시 공항으로 향하였다. A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어서 B가 곧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는 A의 기대와 달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례 2〉 회사원 D는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기사를 요청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대리 기사 C는 D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만취한 D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수를 알려 주지는 못한 채 운전하는 C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아파트 근처에 도착할 무렵 D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C는 D를 깨워 보려 하였지만, D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D가 사는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C는 다른 대리 호출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에 D의 차를 주차하고 떠났다. C는 D를 차 안에 홀로 남겨놓았지만, 시간이 지나 술에서 깨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D는 C의 기대와 달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관점〉

갑 :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를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행동의 자유가 있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어.

을 :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생명이나 안전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 물론 동등하거나 우월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면 예외로 해야겠지.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4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 · 반박 · 양쪽 · 함정

번호	요지	A 판단	C 판단	메모
갑				
을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 · 자료 · 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연습 2

2022학년도 2번 — 수문장과 배심원

관점 3개 · 두 판단 평가 · (1)의 유사점·차이점 활용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시오.
- (2) <사례 1>의 수문장 및 <사례 2>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이때 (1)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관점>을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시오.
- (3) 관점의 출처를 표시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사례>

<사례 1> 도적 때가 들끓는 무법천지의 시대에 한 도시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도시는 도적들의 살육과 약탈, 방화 등을 피하기 위해 새 법을 만들었다. 도적들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은 도적들이 도시에 진입할 수 없도록 즉시 성문을 닫아야 하고, 도적들이 물러간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닫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일부 시민들이 성 밖에 나갔다가 도적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소식이 성 안에 전달된 후였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도적들에게 희생될 것을 두려워한 시민들이 수문장에게 성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적들이 도시 부근까지 가까이 접근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수문장은 새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한다.

<사례 2> 경제 활동이 융성해진 상공업 시대를 맞아 한 도시가 재산 범죄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었다. 새 법은 높아진 개인의 소유권 존중 의식을 반영하여 피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절도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도시의 마을 주변에는 미개척 토지들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땀과 열매, 야생동물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얻었다. 그 토지를 소유한 도시의 몇몇 시민들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마을 사람들의 출입과 이용을 막았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새 법에 따라 기소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재판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사실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에 못 미

치게 낮추어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사형을 선고받는 것을 모면하게 했다.

<관점>

㉠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든다. 입법자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예견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법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가 불합리한 때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는 입법자가 간과하거나 지나친 부분을 알았다면 어떻게 입법했는지 생각해 보고 법이 추구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정의를 이루도록 법의 문구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입법 단계에서는 여러 법들을 놓고 비평할 수 있어도, 일단 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법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와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의 품성을 고양할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무질서와 폭력을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전자의 경우 법의 불완전함은 곧바로 드러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법의 엄격한 집행만으로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다. 입법에서는 물론 법의 해석 및 집행에서도 공동선이 최고의 가치로 작용한다.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므로 법의 협소한 시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대우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 판단에 따라 법의 문구에 반하여 행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을 문구대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공동선에 큰 해악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현저한 부정의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 · 반박 · 양쪽 · 함정

번호	요지	수문장	배심원	메모
㉠				
㉡				
㉢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 · 자료 · 줄 수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8-5 B형 점검표

영역	점검 항목	확인
비교	유사점을 한 문장, 차이점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만 적었다	☐
비교	첫 단락의 차이점을 평가 단락에서 다시 근거로 썼다	☐
논점	두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 논점을 한 문장으로 밝혔다	☐
평가	평가 대상(사람·판단·주장)을 각각 평가했다	☐
평가	결론의 모양(같음/다름/정도 차이)이 비교와 맞는다	☐
자료	두 사례에 똑같이 작용하는 관점과 차이를 만드는 관점을 구별했다	☐
순서	조건·질문이 정한 순서를 지켰다	☐
형식	900~1200자, 표기 형식, 배제 조건	☐

8-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연습 1 2019-1 구조 의무

조건의 핵심 — 〈질문〉 네 개를 **순서대로** 답해야 한다. (2)와 (3)은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양쪽 근거를 모두 써야 하고, (4)에서 하나를 고른다. 분량 배분: (1) 250자, (2) 200자, (3) 250자, (4) 350자.

관점의 쓰임 — 을은 판단이 **같아야** 한다는 근거(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를, 갑은 판단이 **달라야** 한다는 근거(특별한 관계의 유무)를 준다. 갑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을 뒤집어 읽는 것이 열쇠다.

의미 있는 차이 — A가 의사라는 사실(능력)과 C가 대리 기사라는 사실(역할)을 구별한다. 남겨진 장소(도로/주차장)는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바꾼다.

예시답안 — (3) 판단이 달라야 한다

1014 자 (공백 포함)

두 사례의 유사점은 고객과 운전자라는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 한 사람이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곁에 있던 사람이 깨우려다 실패한 뒤 자기 일을 이유로 떠났으며, 상대가 관촬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떠난 사람의 지위와 남겨진 장소에 있다. A는 서비스를 받던 승객이고 의사였으며, B를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에 두고 떠났다. C는 D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일을 맡은 대리 기사였고, D를 주차장의 차 안에 홀로 남겼다.

A와 C에 대한 판단이 같아야 한다는 쪽은 을의 관점에 선다. 두 사람 모두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두고 떠났고, 학회 참석이나 다음 호출은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인 A는 구조 능력이 더 크다.

판단이 달라야 한다는 쪽은 갑의 관점이 제시한 '특별한 관계'에 주목한다. 갑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구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뒤집으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구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C는 D의 차와 몸을 맡아 귀가까지 책임지기로 한 사람이다. 반면 A는 B의 서비스를 받던 쪽이지 B를 보호하기로 한 쪽이 아니다.

나는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구조를 요구할 근거는 막연한 도덕적 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누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을이 우려하는 방관도 실제로 줄일 수 있다. C는 D의 안전을 맡은 사람이므로 떠나기 전에 구조를 요청할 책임이 있었다. 둘째, 남겨진 장소가 결과를 예측할 가능성을 바꾼다. 왕래가 많은 도로에 멈춘 택시는 곧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은 행인의 눈에 띄기 어렵다. 셋째, 의사라는 A의 능력은 비난의 크기를 키울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A를 C와 같은 지위에 두지는 못한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지우면 의무의 범위는 끝없이 넓어진다.

따라서 A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규범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D의 안전을 맡았던 C라고 판단한다.

〈질문〉 (1)~(4) 순서 준수 · 갑의 '특별한 관계'를 역으로 활용 · 능력과 역할의 차이를 구별

연습 2 2022-2 수문장과 배심원

조건의 핵심 — 평가의 근거로 ①의 유사점·차이점과 관점을 **함께** 써야 한다.

관점의 쓰임 — ㉡는 입법 의도에 따른 교정을, ㉢는 문구의 엄격한 집행을, ㉣는 공동선을 기준으로 하되 두 요건(명백한 해악, 긴급성 또는 현저한 부정의)을 갖추는 때만 문구 이탈을 허용한다. ㉣의 두 요건이 두 사례를 가르는 도구다.

풀이의 열쇠 — 배심원의 판단을 **목적**(사형이라는 부정의를 피함)과 **방법**(사실 인정 조작)으로 나누어 평가하면, 단순한 찬반보다 정밀한 답안이 된다.

예시답안 — ㉣ 중심: 수문장 타당, 배심원 목적 타당·방법 부당

996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새로 만든 법을 문구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상황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려야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차이도 크다. 〈사례 1〉의 수문장은 법을 문구대로 따랐고, 그 결과 시민들이 도적에게 희생될 위험에 놓였다. 〈사례 2〉의 배심원들은 피해액을 낮추어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의 적용을 피했다. 또한 〈사례 1〉은 도적이 눈앞에 온 긴급한 상황이지만, 〈사례 2〉는 법 자체의 형벌이 과도해서 생긴 문제다.

나는 공동선을 기준으로 하되 법의 문구에 반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의 관점에서 두 판단을 평가한다.

수문장의 판단은 타당하다. ㉣는 법을 문구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동선에 명백히 큰 해악이 될 때만 문구에 반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도적이 도시 부근까지 온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성문을 열면, 밖의 시민 일부를 구하려다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문구대로 적용하는 쪽이 오히려 공동선을 지킨다. 입법자가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법을 달리 썼으리라고 보는 ㉣의 관점에서, 성문을 닫는 법의 목적이 도시 전체의 보호인 이상 결론은 같다.

배심원들의 판단은 목적은 타당하지만 방법은 정당하지 않다. 오래전부터 생활 자원을 얻던 땅에서 땀과 열매를 가져간 가난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현저한 부정의다. 이 점에서 ㉣의 두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조작했다. 사실 인정이 동정에 따라 달라지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받게 되고, 이는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한편 질서를 위해 법의 문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는 〈사례 2〉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생존을 위한 절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질서를 확보하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례 2〉의 해법은 배심원의 사실 조작이 아니라 입법의 교정이다. 법을 바로잡는 일은 입법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활용 관점: ㉡㉢㉣ · 첫 단락의 긴급성 차이를 ㉣의 요건 판단에 재사용

제9장

C형 — 관점 택1·반박형

2부 유형별 실전 | 연결 기출: 2020-1, 2021-2, 2024-1, 2025-2, 2027-2 · 모의고사 2회 1번, 3회 2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9-1 C형은 어떤 문제인가	109
9-2 C형을 푸는 여섯 단계	109
9-3 대표 문항 풀해설	110
대표 문항 1 2021학년도 2번 — 타인사칭 재판	110
대표 문항 2 2024학년도 1번 — 벽화 철거	114
9-4 연습 문항	118
연습 1 2020학년도 1번 — 형법 해석	119
연습 2 2025학년도 2번 — 출생 보조금	122
9-5 C형 점검표	125
9-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126
연습 1 2020-1 형법 해석	126
연습 2 2025-2 출생 보조금	127

9-1 C형은 어떤 문제인가

C형은 사례에 대해 둘 이상의 관점이나 견해를 주고, **하나를 골라 강화하고 나머지를 모두 반박**하게 하는 문제다. A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A형의 선택지가 정책이라면 C형의 선택지는 **판단의 원리**다. 법 해석의 원리(2020-1), 유무죄 판단의 원리(2021-2),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원리(2024-1), 통치 기구 구성의 원리(2027-2)처럼 하나의 원리를 골라 사례에 적용한다.

학년도	소재	선택지	특수 조건
2027-2	국가평의회 구성	견해 3	의견 4개 이상, 한계와 극복 방안(반박한 견해 활용 금지) — 16장 수록
2025-2	출생 보조금	견해 2	의견 활용 또는 새로운 논거
2024-1	벽화 철거와 예술가의 권리	주장 2	주장 요약 먼저, 새로운 논거로 입장 강화
2021-2	타인사칭 재판	관점 3	의견 6개 모두 활용
2020-1	형법 해석	관점 3	각 사례의 쟁점 발견, 법적 판단 평가

C형의 본질

C형에서 관점은 **사례를 해석하는 렌즈**다. 관점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렌즈로 사례를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를 써야 한다. 반박도 마찬가지다. 다른 관점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그 관점으로 이 사례를 판단하면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 준다.

9-2 C형을 푸는 여섯 단계

단계	할 일	시간	산출물
1	조건 해부	3분	선택·반박 대상 수, 요약·새로운 논거·한계 등 추가 과제 확인
2	관점별 적용 결과표	6분	관점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사례의 결론은?” 한 줄씩
3	자료 태깅	4분	관점별 지지·반박 표시
4	선택과 반박 전략	4분	반박할 관점마다 겨룰 곳(전제·결과·모순·수단) 하나씩
5	작성	33분	선택·근거 → 사례 적용 → 반박 1 → 반박 2 → 결론/보완
6	검토	5분	반박 대상을 모두 다루었는지, 요약 순서를 지켰는지

■ 2단계의 예 — 2020-1 관점별 적용 결과표

관점	〈사례 1〉 화약 밀조	〈사례 2〉 카드 내기	약점
㉠ 입법자 의도	입법자가 예상 못 한 행위 — 의도 발견 불가 → 판단 어려움	손실 위험 방지가 목적 → 유죄 타당	예상 못 한 행위엔 ‘의도’가 없다
㉡ 사전적 의미	처벌 조문 없음 → 무죄	화살 던지기만 금지 → 무죄	처벌 공백 발생
㉢ 적용 시점 견해	국가 전권 도전으로 수용 → 유죄 가능	도박의 대명사 → 유죄 타당	행위 시 예측 불가

이 표를 만들면 어느 관점이 두 사례에 **일관된 결론**을 내는지, 어느 관점의 약점이 사례에서 드러나는지 한눈에 보인다. ㉡는 두 사례 모두 무죄로 일관되지만 처벌 공백이라는 약점을 인정해야 하고, ㉠은 〈사례 1〉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 반박을 고르게 배분한다

반박할 관점이 둘이면 각각 200자 안팎을 준다. 한쪽을 한 줄로 끝내면 “모두 반박할 것”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반박마다 다른 기법을 쓰면 답안이 단조롭지 않다(4장).

9-3 대표 문항 풀해설

대표 문항 1

2021학년도 2번 — 타인사칭 재판

관점 3개 중 선택 · 의견 6개 모두 활용 · 900~1200자

2. <조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2. <의견>을 모두 활용하여 논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X, Y, Z로 표시할 것
4. <의견>을 활용할 때는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중세 A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 및 이웃과 지속적인 불화를 겪던 젊은 농민 갑은 아내를 버려둔 채 가출했다. 몇 년 후 전쟁이 발발하여 징병되었다는 소문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그가 십수 년이 지나 돌연히 귀향했다. 돌아온 갑은 예전에 비해 건강해지고 성실해졌으며 가출 전과 달리 아내에게 매우 다정해졌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갑이 외지에서 배워 전파한 농작 기법 덕분에 마을의 수확량이 늘어난 데 기뻐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동업 관계에 있던 갑과 숙부 을 사이에 재산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을과 일부 친척들은 타인사칭 혐의로 갑을 고소하였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재산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A국 형법은 타인사칭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 재판소는 선례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여 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을은 재판 방식 및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중앙 재판소는 마을 사람들 중 여섯을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모두 들은 재판관 3인은 각자의 <관점>을 피력하고 갑의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관점>

재판관 X : 선례와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재판관 Y : 모든 증거가 유죄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관 Z : 중한 범죄의 경우 개연적인 유죄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의견>

① 재단사 : 저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간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출 전에 갑이 수선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바지를 돌려준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새로 주문한 바지는 이보다 두 치수 더 작았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바에 따르면 사람의 키가 커지는 경우는 있어도 작아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② 갑의 누이 : 타인사칭을 주장하는 이들은 을로부터 돈을 받거나 협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재단사의 경우도 처남이 을의 소작농이라 그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의 말대로 치수가 줄었다 해도 긴 타지 생활로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갑의 동생으로, 누구보다 오빠를 잘 압니다. 거짓된 말들로 선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③ 촌장 : 저는 을의 의도가 조카에 대한 애정이 아닌 재산 욕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갈라지고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그가 가짜라 해도 진짜는 이미 전쟁터에서 사망했을 텐데 을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반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④ 제빵사 : 갑이 전쟁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징병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났었습니다. 전쟁에 갔다 오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⑤ 을의 부인 : 저는 갑이 어렸을 때 거의 매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를 지켜보며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 상당수가 의심을 품고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득이 되어서 모른 채하는 걸로 짐작됩니다. 갑의 누이와 아내 역시 가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남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원로 : 저희 마을에서는 심한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광장에 모여 토론을 벌인 후 다수결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서 발생

한 사건과 그 결과에 직접 영향 받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판소는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선례를 존중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 STEP 1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관점 하나 선택, 나머지 모두 반박	①③④	반박 대상 둘 각각 200자
2	의견 모두 활용	전체	6개 중 불리한 것까지 전부
3·4	X, Y, Z / ① 형식 표기	전체	의견 표기가 ‘의견①’이 아니라 ‘①’이다

■ STEP 2 관점별 적용 결과

관점	이 사례에서의 결론	약점
X 선례·공동체 이익	무죄 (마을 다수결 존중, 반목 방지)	유무죄라는 사실 문제를 이익으로 판단한다
Y 무죄 추정	무죄 (유죄 증거가 서로 다툼)	사칭 범죄는 완전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다
Z 중범죄 개연성	유죄 (신체 치수, 양육자의 의심)	오판 시 무고한 사람에게 중한 처벌

■ STEP 3 의견 태깅

의견	요지	X	Y	Z	메모
①	재단사: 바지 두 치수 작아짐		×	○	가장 객관적인 유죄 증거
②	누이: 매수·협박, 재단사 이해관계		○	×	①의 신빙성을 흔든다
③	촌장: 가짜라도 반목보다 낫다	○		×	진위와 무관한 판단 — X의 약점을 드러냄
④	제빵사: 전쟁으로 사람은 변한다		○	△	성격 변화는 설명하나 키 감소는 설명 못함
⑤	을의 부인: 의심, 마을 사람들의 이해관계	×	△	○	이해관계 당사자의 증언이면서, 다수결 비판 근거도 됨
⑥	원로: 다수결 선례	○	×	×	X의 핵심

출제 의도 읽기

의견이 모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누이(②)와 을의 부인(⑤)은 당사자의 가족이고, 재단사(①)는 처남을 통해 을과 연결되며, 마을 사람들(③⑥)은 수확량 증가로 이익을 얻었다. “모두 활용”하라는 조건은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 STEP 4 개요 (Y 선택)

단락	핵심 문장	의견	분량
①	Y 선택: 중범죄일수록 오판 비용이 크다	—	약 170자
②	유죄 증거(①⑤)가 반론(②④)과 이해관계로 확증에 이르지 못함	①②④⑤	약 300자
③	Z 반박: 증명 기준을 낮출 게 아니라 높여야	—	약 180자
④	X 반박: 사실 문제는 다수결로 못 정함, 이해관계	③⑤⑥	약 230자
⑤	결론: 무죄, 그러나 근거는 다수결이 아니라 증명 부족	—	약 90자

STEP 5 예시답안

예시답안 A — 재판관 Y 선택(무죄)

968 자 (공백 포함)

나는 모든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관 Y의 관점을 지지한다. 타인 사칭은 중한 범죄이므로, 잘못된 유죄 판결이 한 사람의 이름과 가족과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는다. 판단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오류를 더 무겁게 보아야 한다.

〈의견〉 가운데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은 ①과 ⑤다. 재단사는 바지 치수가 두 치수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①). 이는 가볍지 않은 증거다. 그러나 재단사의 처남이 을의 소작농이라는 이해관계가 제기되었고, 긴 타지 생활로 체형이 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②). 을의 부인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지만(⑤), 그는 재산 다툼의 당사자인 을의 배우자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 갑이 달라진 모습도 전쟁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④). 결국 유죄 증거는 개연성은 있어도 서로 다투는 증언들 속에서 확증에 이르지 못한다.

재판관 Z는 중한 범죄라면 개연적인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범죄가 중할수록 처벌도 무거우므로 오판의 대가도 커진다. 증명의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한다. 사칭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는 사정은 수사를 철저히 할 이유이지, 증명 없이 처벌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판관 X는 선례와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자고 한다. 원로는 마을 일은 마을 사람들이 다수결로 정해왔다고 했고(⑥), 촌장은 가짜라 해도 마을이 반목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③). 그러나 유무죄는 갑이 실제로 누구인가라는 사실의 문제다. 다수결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며, 을의 부인이 지적하듯 수확량 증가로 이익을 얻은 마을 사람들은 공정한 판단자가 되기 어렵다(⑤). 촌장의 말처럼 진위와 상관없이 판단한다면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흥정이다.

따라서 중앙 재판소는 갑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결론은 지방 재판소와 같지만 근거가 다르다. 갑이 무죄인 이유는 다수가 원해서가 아니라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활용 의견: ①~⑥ 전부 · Z는 오판 비용으로(전제 공격), X는 사실과 이익의 구별로 반박

예시답안 B — 재판관 Z 선택(유죄)

922 자 (공백 포함)

나는 중한 범죄의 경우 개연적인 유죄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관 Z의 관점을 지지한다. 당시 A국에서는 타인을 사칭해 재산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 형법이 이를 중죄로 규정했다. 이런 범죄는 본인이 죽거나 사라진 뒤에 일어나므로 완전한 증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완전한 증명만을 요구하면 사칭 범죄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에는 개연적인 유죄 증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사의 증언이다(①). 수십 년 옷을 지어온 사람이 가출 전 바지보다 두 치수 작은 옷을 주문받았다고 했다. 사람의 키는 줄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이다. 갑의 누이는 재단사가 을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반박했지만(②), 치수라는 객관적 기록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다. 체형이 변했다는 주장도 몸무게라면 모를까 키가 줄어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제빵사의 말처럼 전쟁은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 있지만(④), 몸의 크기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게다가 갑을 어릴 때 거의 매일 돌본 을의 부인도 의심을 표했다(⑤).

재판관 Y는 모든 증거가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증언은 언제나 다룰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은 사실상 무죄를 뜻한다.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것은 이름과 재산을 빼앗긴 진짜 갑과 그 가족이다.

재판관 X의 관점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촌장은 가짜라 해도 마을이 평화로운 편이 낫다고 했다(③). 원로는 다수결의 선례를 존중하자고 했다(⑥). 그러나 이는 진실보다 마을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다. 수확량 증가로 이익을 얻은 마을 사람들의 다수결은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표현일 수 있다(㉔). 재산 다툼이 없었다면 을의 문제 제기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은 을의 동기를 의심하게 할 뿐, 갑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앙 재판소는 객관적 증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갑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활용 의견: ㉑~㉔ 전부 · 경험칙(키는 줄지 않는다)을 중심 증거로 · Y는 적용 결과(사실상 무죄)로 반박

■ STEP 6 채점 포인트

- **의견 여섯 개를 모두 썼는가.** 특히 불리한 의견을 인정-한정-반박으로 처리했는가.
- **X를 반박할 때 ‘사실 문제’와 ‘이익 판단’을 구별했는가.** 두 예시답안의 공통 논리다.
- **같은 결론(무죄)이라도 근거가 다를 수 있다.** 예시답안 A의 마지막 문장처럼, 지방 재판소와 결론이 같더라도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짚으면 논증이 선명해진다.

대표 문항 2

2024학년도 1번 — 벽화 철거

주장 2개 중 선택 · 요약 먼저 · 새로운 논거로 입장 강화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병이나 정의 주장 중 하나를 택하여 <조건>에 따라 주장을 완성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병의 주장을 택할 경우
 - 제시되어 있는 병의 주장을 먼저 요약할 것
 - 을의 입장을 반박하고 갑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것
- 정의 주장을 택할 경우
 - 제시되어 있는 정의 주장을 먼저 요약할 것
 - 갑의 입장을 반박하고 을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것

<사례>

30년 이상 대학 교수 등으로 활동하여 온 저명한 미술가 갑은 특히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하는 벽화 제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 왔다. 국가 기관인 을은 대중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심 한가운데에 시민들을 위한 가족 공원을 조성하면서 갑에게 공공장소의 이미지에 맞는 벽화 제작을 의뢰하였다. 갑과 을은 남자아이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뛰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미술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을이 실시한 외부 인사를 통한 사전 검사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가족 공원의 담벼락과 기둥에 폭 2.8m, 길이 20m가량의 벽화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갑은 가족 공원이 완성됨에 따라 제작 대금을 모두 받았으며 벽화의 소유권은 을에 넘어갔다. 그런데 1년 후 을은 벽화의 등장인물이 모두 남자라서 가족 공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을은 갑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원래의 규격보다 작게 절단한 후 벽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벽화를 크게 손상시켰다. 그 후 을은 벽화를 가족 공원의 어느 공간에 방치하다가 인근 공터에서 소각하였다.

문학이나 음악 등 보통의 작품은 책이나 음반 등 복제물의 형태로 유통되므로, 그러한 복제본을 파손 또는 폐기하더라도 그것은 소유하는 자의 권리에 해당할 뿐 특별히 창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원본을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훼손,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의견이 대립한다.

<입장>

갑 : 작가는 예술 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 자기의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관해 창작자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작품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작품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기관인 을이 해당 작품을 폐기한 행위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작가로서의 명예 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을의 벽화 파괴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 : 소유권의 내용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예술 작품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되며, 벽화의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또한 갑의 작품 창작 활동에 간섭하거나 작품의 표현 자체를 금지한 적이 없기에 갑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단순히 갑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침해한 것만으로는 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예술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파괴 행위가 예술가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상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예술가라면 이후 자기 작품의 운명을 소유자의 손에 맡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향 변화 등 어떠한 이유로든 미술 작품에 싫증이 났다면 소유자가 해당 작품을 양도·교환·증여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제거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감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유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주장>

병 : 예술가는 자기 작품의 동일성 유지와 온전한 보존에 관한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외부적 평가는 예술가 자신의 사상, 노력, 명성, 명예 등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이나 음악 작품과 달리 미술 작품은 원본이 파괴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로 작가는 작품 원본의 소유권을 넘긴 후에도 계속 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유했을 수 있다(…)

정 :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외부적 평가 자체가 사라지기에 병이 주장하는 예술가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원본 작품의 작가가 소유권을 넘긴 후에도 계속 자신의 이익을 주장한다면, 해당 작품의 소유자는 그 보유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갖게 되어 오히려 예술 작품의 원활한 유통이 저해된다. 그 결과 작가의 이익도 침해될 수 있다(…)

■ STEP 1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가	선택한 주장을 먼저 요약	①	순서가 정해져 있다. 요약 전에 입장을 늘어놓지 않는다
나	상대 입장(을 또는 갑)을 반박	②~④	반박 대상은 병·정이 아니라 갑·을 이다
나	자기 입장(갑 또는 을)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	②~④	제시문에 이미 있는 논거를 되풀이하면 ‘새로운’이 아니다

자주 하는 실수

병을 택하면 반박 대상은 **을**, 강화 대상은 **갑**이다. 병과 정은 요약만 하면 된다. 병을 택한 뒤 정을 반박하는 데 분량을 쓰는 실수가 흔하다. 조건을 다시 읽자: “을의 입장을 반박하고 갑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

■ STEP 2 '새로운 논거'를 찾는 법

제시문에 없는 논거는 **사례의 사실**에서 찾는다. 갑과 을의 입장문은 일반론이지만, 사례에는 두 입장문이 쓰이지 않은 사실이 많다.

사례 속 사실	병(갑 강화)의 논거로	정(을 강화)의 논거로
철거 이유: 등장인물이 모두 남자	국가가 내용 을 이유로 표현을 지움 → 사후 검열	공간 기능(다양한 가족)에 맞춘 관리자의 판단
외부 인사의 사전 검사를 통과	1년 만의 번복 → 작가의 정당한 신뢰 침해	—
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	보존 조건을 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사적 자치)
물 분사 절단, 방치, 소각	반환·이전 등 대안이 있었음 → 방법의 현저한 불합리	방법의 결례 ≠ 권리 침해
국가 기관이 공공장소에 발주	국가는 사인보다 엄격한 정당화 필요	보존 의무가 생기면 공공미술 발주 자체가 위축

STEP 3 개요 (병 선택)

단락	핵심 문장	분량
①	병의 주장 요약(인격적 이익, 원본의 유일성)	약 200자
②	새 논거 1: 내용을 이유로 한 국가의 철거는 사후적 표현 제거 → 을의 “간섭 안 했다” 반박	약 220자
③	새 논거 2: 사전 검사 통과 후 1년 만의 번복 → 신뢰 → 을의 “운명을 맡겼다” 반박	약 220자
④	새 논거 3: 대안 있었음에도 절단·소각 → 외부 명성 훼손 → 을의 “주관적 명예 감정” 반박	약 250자
⑤	결론: 갑의 종합 판단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약 80자

STEP 4 예시답안

예시답안 A — 병의 주장

947 자 (공백 포함)

병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에 대한 외부 평가는 예술가의 사상과 명예 같은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술가는 작품의 동일성과 온전한 보존에 대해 이익을 가진다. 특히 미술 작품은 원본이 파괴되면 세상에서 사라지므로, 작가는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그 이익을 계속 보유한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을의 입장을 반박하고 갑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를 세 가지 제시한다.

첫째, 을은 표현을 금지한 적이 없으므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을이 벽화를 철거한 이유는 등장인물이 모두 남자라는 작품의 내용이었다. 국가 기관이 작품의 내용을 문제 삼아 완성된 작품을 없앤 것은, 창작 이전에 막지 않았을 뿐 사후에 표현을 지운 것과 같다. 사적 소유자와 달리 국가는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 더 엄격한 정당화를 요구받는다.

둘째, 을은 대가를 받은 예술가는 작품의 운명을 소유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벽화는 을이 공공장소에 전시할 목적으로 주문했고, 외부 인사의 사전 검사까지 거쳐 설치되었다. 갑은 작품이 그 장소에서 공중에게 보일 것을 전제로 계약했다. 을이 불과 1년 만에 협의 없이 이 전제를 깨뜨린 것은 갑이 가졌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셋째, 폐기의 방법이 인격권 침해의 핵심이다. 설령 철거가 필요했더라도 을에게는 작가에게 알리고 반환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선택지가 있었다. 그런데 을은 벽화를 절단해 크게 훼손한 뒤 방치하다 소각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작품이 잘려 나가고 버려지는 모습은 30년 넘게 활동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떨어뜨린다. 이는 을의 말처럼 주관적 명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명성의 훼손이다.

따라서 갑의 입장처럼 을의 행위는 작품의 성격, 설치 경위, 폐기 과정과 방법을 종합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 갑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 → 을의 논거 셋을 하나씩 반박하며 각각 새로운 논거 제시 · 새로운 논거는 모두 사례의 사실에서 나옴

예시답안 B — 정의 주장

962 자 (공백 포함)

정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을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과 달리 완전히 파괴하면 작품에 대한 외부 평가 자체가 사라지므로, 병이 말하는 예술가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작가가 이익을 주장하면 소유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되어 작품의 유통이 저해되고, 결국 작가의 이익도 침해된다.

이를 바탕으로 갑의 입장을 반박하고 을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갑은 공공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근거로 작품의 보존 이익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장소의 공공성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공공장소는 시민 모두의 공간이므로, 그 공간의 기능과 의미는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한다. 한 작가의 작품이 영구히 머물 권리를 인정하면 공공 공간이 특정인의 전시장이 된다. 가족 공원이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을의 판단은 공간 관리자로서 내릴 수 있는 정당한 판단이다.

둘째, 보존에 대한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갑은 계약 단계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존치 기간, 철거 시 사전 협의나 반환 조건을 계약에 넣었다면 갑의 이익은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약정 없이 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을 넘긴 이상, 작품의 운명을 소유자에게 맡겼다고 보는 을의 입장이 타당하다.

셋째,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공미술 자체가 위축된다. 국가 기관이 작품을 발주할 때마다 철거에 작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기관은 영구 설치 작품의 발주를 꺼리게 된다.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가장 많이 잃는 것은 갑 같은 벽화 작가들이다.

물론 을이 벽화를 절단하고 조각한 방식은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예의의 결여를 법적 권리의 침해로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갑의 창작 활동과 표현은 제한되지 않았고, 폐기된 것은 을이 정당하게 소유한 물건이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갑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요약 → 갑의 '공공성' 논거를 역이용 · 계약·시장 위축이라는 새로운 논거 · 방법의 결례는 인정하되 권리 침해와 구별

■ STEP 5 채점 포인트

- **요약이 먼저 나오는가.** 조건의 순서다.
- **반박과 강화의 대상이 맞는가.** 병 → 을 반박·갑 강화, 정 → 갑 반박·을 강화.
- **논거가 새로운가.** 갑·을·병·정의 문장을 바꾸어 쓴 것은 새로운 논거가 아니다. 두 예시답안의 논거는 모두 사례의 사실(철거 이유, 사전 검사, 계약, 폐기 방법)에서 나왔다.

9-4 연습 문항

번호	문항	이 문항에서 특히 연습할 것
연습 1	2020-1 형법 해석	관점별 적용 결과표로 일관성 비교하기
연습 2	2025-2 출생 보조금	상대 견해의 숨은 전제(벌금과 보조금의 동일시) 공격하기

연습 1

2020학년도 1번 — 형법 해석

관점 3개 중 선택 · 각 사례의 쟁점과 법적 판단 평가 · 900~1200자

1.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사례〉를 논평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아래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2. 각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발견하고, 선택한 〈관점〉에 따라 각 〈사례〉의 법적 판단을 평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사례 1〉 중세 말 X국은 최고 법전인 치국대전(治國大典)에서 형법의 개정을 금지하고, 대신 형법전에 ‘마땅히 처벌할 만한 행위에는 유사한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X국 사람인 甲은 화약을 사사로이 제조하여 화적패에게 팔아넘기려다 발각되었다. X국의 형법전에는 사인(私人)이 화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다. X국 병기창이 화약 제조에 관한 신기술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던 까닭에 개인이 화약을 밀조하는 상황을 형법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은 논의 끝에 형법전상 동전 또는 달력 위조죄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X국에서 동전의 주조나 달력의 제작은 국가가 독점해 왔다. 경제적 신용 수단으로서 화폐의 공급은 국가의 전권에 속하기 때문에 조폐장에서 동전의 주조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달력은 농사 일정에 관련되어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기청에서만 제작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화약을 사사로이 제조하는 행위를 동전 또는 달력의 위조와 같이 국가의 전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례 2〉 Y국 사람인 乙은 돈을 걸고 전통적인 카드 게임을 하다가 종교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Y국의 헌법에 의하면 법원은 종교법 사건에서 종교법 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Y국 종교법에는 ‘화살 던지기 내기’만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화살 던지기는 일곱 걸음 거리에서 통에 화살을 던져 넣어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널리 알려진 도박 행위의 하나였던 화살 던지기 내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도박의 대명사가 되었다. 乙은 종교법이 금지하는 내기는 화살 던지기뿐이므로 카드 게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

하였다. 또한 카드 게임의 승패는 화살 던지기와 달리 실력과 훈련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법 제정 당시의 기록을 검토한 종교법 위원회는 종교법이 내기를 금지한 이유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위험이 있는 모든 내기는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관점〉

〈관점 ㉠〉 입법자가 모든 사례를 고려할 수는 없어.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 존재하기 어려워. 그런 까닭에 다양한 역사적 자료나 유사한 입법례를 통해 입법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관점 ㉡〉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언어의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가장 중요해. 사람들은 통상 그런 의미로 법을 이해하거든. 그런 점에서 언어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관점 ㉢〉 사회적 상황이나 판단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사전적 의미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야. 그리고 법의 제정 시점보다 법의 적용 시점에서 합당한 것으로 수용된 견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반박·양쪽·함정

번호	요지	사례 1	사례 2	메모
㉠				
㉡				
㉢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자료·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연습 2

2025학년도 2번 — 출생 보조금

갑·을 중 선택 · 의견 7개 또는 새로운 논거 · 900~1200자

2. <사례>와 <의견>을 읽고 <조건>에 따라 토론
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사례>의 갑과 을의 발표 중 지지하는 견해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할 것
2. <의견>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선택한 견해를 강화하고, 지지하지 않는 견해를 반박할 것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생률이라고 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0.78명이었던 합계출생률은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올해는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는 내년에 합계출생률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 3,591만 명에서 2040년 2,910만 명이 되어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인구정책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갑과 을이 발표자로 나서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러분은 이 세미나에서 갑과 을의 발표에 대해 토론하여야 한다.

갑 : 생산가능인구의 회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결혼하지 않거나 출생률이 떨어져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결국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기업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비혼자의 인공 수정이나 해외 입양 등으로 아이를 갖는 사람에게는 확대되어야 한다.

을 :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부 인구과밀 국가에서 산아 제한을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다. 결혼과 임신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혼과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세금의 배분이 된다.

<의견>

- ① 보조금 제도는 결혼과 출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결혼한 부부는 늘어난 가족으로 인해 더 많은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보조금으로는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은 더 큰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다.
- ② 보조금 제도는 저임금이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주저하는 2~30대의 교제와 결혼을 장려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비싼 교육비와 양육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 자녀를 낳으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일부 국가는 자국의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고용 연장 및 여성 취업 장려를 통해 국내 노동인구를 적절히 재배치하고, 취업비자 확대나 이민 수용 등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④ 보조금 제도는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생에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기대를 갖게 하여 경제 논리에 의해 결혼과 출생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왜곡된 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 ⑤ 아이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겠다는 결심의 실천이다. 따라서 결혼과 출생에 경제적인 고려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 ⑥ 보조금 제도는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이나 공공요금의 지원과 아울러 기업이 임신이나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 및 돌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와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⑦ 보조금 제도와 상관없이 결혼과 임신을 계획했던 사람도 국내외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기대했던 보조금 지급이 줄거나 중단된다면 결혼과 임신을 주저하게 되어 더 큰 인구 급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워크시트 ① 조건 해부

조건	요구하는 것	단락	놓치기 쉬운 점
1			
2			
3			

■ 워크시트 ② 자료 태깅 — 지지·반박·양쪽·함정

번호	요지	갑	을	메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워크시트 ③ 개요 — 단락별 핵심 문장·자료·줄 수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9-5 C형 점검표

영역	점검 항목	확인
선택	선택한 관점을 사례에 적용한 결과 를 썼다(관점 소개에 그치지 않았다)	☐
반박	반박할 관점을 모두 , 각각 비슷한 분량으로 다루었다	☐
반박	반박이 “그 관점을 이 사례에 적용하면 생기는 문제”를 보여 준다	☐
순서	요약 등 순서 조건을 지켰다	☐
논거	‘새로운 논거’ 조건이 있으면 사례의 사실에서 논거를 만들었다	☐
보완	한계·보완 조건이 있으면 반박한 관점을 끌어오지 않았다	☐
형식	900~1200자, 표기 형식, 배제 조건	☐

9-6 연습 문항 해설과 예시답안

연습 1 2020-1 형법 해석

조건의 핵심 — 관점 하나를 골라 나머지 **모두**를 반박하고, 각 사례의 쟁점을 **발견**하여 선택한 관점으로 법적 판단을 평가한다.

관점별 적용 결과 — 9-2의 표 참조. ㉠은 두 사례에 일관되게 무죄를 내고, ㉡는 〈사례 1〉에서 발견할 의도가 없으며, ㉢는 행위 시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

풀이의 열쇠 — ㉠을 택하면 ‘처벌 공백’이라는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백은 입법으로 메운다”로 처리한다. ㉢를 택하면 “누가 적용 시점의 견해를 정하는가”라는 반론을, ㉡를 택하면 〈사례 1〉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예시답안 — ㉠ 사전적 의미

1010 자 (공백 포함)

두 사례의 쟁점은 법조문이 명시하지 않은 행위를 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가이다. 〈사례 1〉의 법원은 화약 밀조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자 동전·달력 위조죄를 유사 적용했다. 〈사례 2〉의 법원은 '화살 던지기 내기'만 금지한 종교법을 금전적 손실 위험이 있는 모든 내기로 넓혀 카드 게임을 처벌했다. 나는 법을 언어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의 관점을 택한다. 처벌은 사람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 일이므로, 무엇이 처벌되는지를 사람들이 법의 문언만 보고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에 따르면 두 판결은 모두 부당하다. 〈사례 1〉에서 화약 제조는 동전이나 달력의 위조와 어떤 문언상 공통점도 없다. 법원이 찾은 공통점은 '국가의 전권에 도전한다'는 추상적 성격인데, 이 기준이라면 국가가 관장하는 거의 모든 일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 2〉에서 '화살 던지기'는 일곱 걸음 거리에서 통에 화살을 던지는 게임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카드 게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살 던지기가 도박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사정은 일상 언어의 비유일 뿐 법의 문언을 바꾸지 못한다.

㉡는 역사적 자료로 입법자의 본래 의도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례 1〉에서 입법자는 개인의 화약 밀조를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의도'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례 2〉에서도 종교법 위원회가 찾은 입법 목적은 모든 내기를 금지할 만큼 넓게 설정되었다. 입법 목적을 넓게 잡을수록 처벌 범위도 해석자의 뜻대로 넓어진다.

㉢는 적용 시점에 합당하다고 수용된 견해를 따르자고 한다. 하지만 무엇이 '수용된 견해'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행위할 때는 합법이던 일이 재판할 때의 견해에 따라 처벌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처벌될지 미리 알 수 없다.

물론 ㉠을 따르면 위험한 화약 밀조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그러나 그 공백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으로 메워야 한다. 〈사례 1〉의 X국이 형법 개정을 금지한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다.

㉡는 적용 결과(의도 창작)로, ㉢는 예측 가능성으로 반박 · 처벌 공백은 입법 과제로 처리

연습 2 2025-2 출생 보조금

조건의 핵심 — 의견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둘 다 쓰면 더 좋다.

태깅 — 갑 지지: ②⑤⑥. 을 지지: ①④⑦. 양쪽: ③(이민 — 갑에게는 보완책, 을에게는 대안). ⑦은 보조금의 불안정성 비판이지만 갑은 “법률로 고정”이라는 보완으로 흡수할 수 있다.

풀이의 열쇠 — 을의 핵심 논거는 “보조금 = 산아 제한 벌금”이라는 유비다. 이 유비의 숨은 전제(방향과 무관하게 금전적 개입은 같은 침해)를 공격하는 것이 갑의 가장 강한 반박이다. 을을 택한다면 “보조금은 결혼·출생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세금 배분”이라는 논거를 ④(경제 논리에 의한 왜곡)와 연결해 강화한다.

예시답안 — 갑 지지

1014 자 (공백 포함)

나는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갑의 견해를 지지한다. 합계출생률이 0.72명까지 떨어졌고, 지금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까지 약 8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추세를 방치하면 연금과 의료, 국방을 떠받칠 사람이 사라진다. 저출생은 개인의 선택이 모인 결과이지만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진다.

첫째, 결혼과 출생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경제적 부담이다. 아이를 갖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다는 결심이고, 경제적 고려가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의견⑤). 보조금은 저임금과 주거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에게 결혼을, 교육비와 양육비가 부담스러운 부부에게 출산을 가능하게 한다(의견②).

둘째, 보조금의 한계는 제도 설계로 보완할 수 있다. 보조금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의견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세금 감면, 공공요금 지원, 육아휴직과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의견⑥). 또한 보조금이 도중에 줄어들면 오히려 출생이 급감할 수 있으므로(의견⑦), 예산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로 지급 기준을 고정해야 한다.

을은 보조금이 산아 제한을 위한 벌금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벌금은 선택을 처벌해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고, 보조금은 경제적 장벽을 낮춰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결혼과 출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을은 결혼과 출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세금 배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 태어난 아이는 훗날 모든 국민의 연금과 의료를 떠받치는 세대가 된다. 출생 지원의 혜택은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보조금 때문에 왜곡된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견④)는 지급을 실제 양육 여부와 연동하면 줄일 수 있다.

외국 인력 도입(의견③)은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따라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되, 갑의 주장처럼 비혼 출산이나 입양 가정까지 대상을 넓혀 다양한 가족을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

활용 의견: ①~⑦ 전부 · 을의 유비를 전제 공격으로 반박 · 새로운 논거: 세대 간 연대(연금·의료)

제3부

배경 개념 도구상자

LEET 논술은 법 지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규범적 판단을 세우는 데 쓰이는 개념의 틀은 반복해서 나온다. 3부는 20문항에 쓰인 개념을 여섯 영역으로 묶었다. 각 개념은 정의, 대립 구도, 쓰이는 기출, 그리고 답안에 넣을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했다. 처음부터 읽기보다 2부를 풀다가 막힐 때 찾아 읽는다.

제10장

법의 해석과 재판

3부 배경 개념 | 연결 기출: 2014-1, 2015-2, 2020-1, 2021-2, 2022-2, 2009 예비 3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0-1 법의 목적 사이의 긴장	130
10-2 재판과 사실인정	131

10-1 법의 목적 사이의 긴장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은 법이 미리 정해져 있고 쉽게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다. 구체적 타당성은 개별 사건에서 결과가 정의에 맞는 상태다. 법을 문구대로 적용하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을 들고 셋 사이의 긴장을 강조했다.

대립 구도

문구의 엄격한 집행(질서·예측 가능성) ↔ 목적에 따른 교정(개별 정의)

쓰이는 기출 2022-2 ㉠㉡㉢, 2020-1 ㉠㉡㉢, 2015-2

답안 속 문장

“법을 문구대로 적용한 결과가 불합리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자가 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벗어남이 허용 되려면 그 불합리가 명백하고 긴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집행자마다 다른 법이 된다.”

법 해석의 세 방법

문언 해석은 법률 문장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를 따른다. **주관적(역사적) 해석**은 입법 당시의 기록 등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찾는다. **객관적(목적론적) 해석**은 법이 지금 이 사회에서 달성해야 할 목적에 비추어 의미를 정한다. 세 방법은 대개 같은 결론에 이르지만,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서 갈라진다.

대립 구도

문언(예측 가능성) ↔ 입법자 의도(민주적 정당성) ↔ 적용 시점의 목적(시대 적합성)

쓰이는 기출 2020-1 ㉠ / ㉡ / ㉢, 2015-2 (가)(나)(다)

답안 속 문장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할 ‘의도’가 없다. 그때 입법자의 의도를 내세우는 해석은 사실상 해석자의 판단을 입법자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유추 적용과 처벌 법규

유추 적용은 법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비슷한 사안의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것이다. 민사 분쟁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사람을 처벌하는 법에서는 엄격히 제한된다. 무엇이 처벌되는지를 행위하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의 이념) 때문이다. LEET 논술은 실정법 판단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문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라는 원리로 설명한다.

쓰이는 기출 2020-1 <사례 1> (동전·달력 위조죄의 유추)

답안 속 문장

“처벌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므로, 무엇이 처벌되는지는 법의 문언만 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 행위 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처벌은 법이 아니라 사후의 결정이다.”

10-2 재판과 사실인정

무죄 추정과 증명의 기준

무죄 추정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취급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질문은 **어느 오류를 더 무겁게 볼 것인가**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오류와 죄 지은 사람을 놓치는 오류는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증명의 기준을 높이면 앞의 오류가 줄고 뒤의 오류가 늘어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은 앞의 오류를 더 무겁게 본다는 선언이다.

대립 구도

엄격한 증명(무고한 처벌 방지) ↔ 개연성 기준(범죄 억지·피해자 보호)

쓰이는 기출 2021-2 Y / Z, 2014-1 (변론문)

답안 속 문장

“범죄가 중할수록 처벌도 무거우므로 오판의 대가도 커진다. 중한 범죄일수록 증명의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한다.”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

“갑은 진짜인가”는 **사실** 문제이고, “마을에 무엇이 이로운가”는 **가치** 문제다. 사실 문제는 증거로 판단하고, 가치 문제는 토론과 결정으로 판단한다. 다수결은 가치 문제를 정하는 민주적 방법이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니다. 2018-2 제시문 (가)도 “학문적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쓰이는 기출 2021-2 X (마을 다수결), 2018-2 (가)

답안 속 문장

“다수결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하는 방법이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다.”

시민의 재판 참여와 배심의 법 무시

시민이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재판에 공동체의 상식과 정의감이 반영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반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여론이나 동정에 흔들릴 수 있다. 배심원이 법을 알면서도 부당하다고 여겨 따르지 않는 것을 ‘배심의 법 무시’라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배심원들이 절도 피해액을 낮게 평가해 피고인이 사형을 피하게 한 관행이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다. 2022-2 <사례 2> 가 바로 이 구조다.

대립 구도

공동체의 정의감 반영 ↔ 법 적용의 평등과 예측 가능성

쓰이는 기출 2022-2 <사례 2> , 2009 예비 3번(시민의 재판 참여)

답안 속 문장

“배심원의 동정은 가혹한 법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낮추어 인정하는 방식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배심원에 따라 다른 판결을 받게 만든다. 가혹한 법은 사실 조작이 아니라 입법으로 고쳐야 한다.”

제11장

권리와 그 한계

3부 배경 개념 | 연결 기출: 2019-1, 2023-2, 2024-1, 2025-1 · 모의고사 1회 2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1-1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133
11-2 의무와 관계	134

11-1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소유권과 그 사회적 제약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존중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소유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본다. 공익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은 소유권을 무시할 근거가 아니라 절차를 거쳐 제한할 근거다.

대립 구도

소유권의 절대성(자유 의 기반) ↔ 사회적 구속성(공공복리)

쓰이는 기출 2023-2 관점①②, 2024-1 을

답안 속 문장

“공익이 크다는 사실은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이유이지, 절차의 흠을 덮을 이유가 아니다.”

권리남용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가 인정된 목적에서 벗어난 행사를 말한다. 흔히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기준**은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는가이고, **주관적 기준**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데 있는가이다. 두 기준을 모두 요구할수록 권리남용은 좁게 인정된다.

쓰이는 기출 2023-2 관점③, 2024-1 (소각이라는 폐기 방법)

답안 속 문장

“흠을 바로잡을 수단이 있는데도 철거만을 고집하는 것은, 권리의 목적이 자기 이익의 회복보다 상대방의 손해에 치우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비례의 원칙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하려면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목적이 정당하고, ② 수단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③ 같은 효과를 내는 더 약한 수단이 없고(침해의 최소성), ④ 얻는 공익이 잃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 A형 문항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가장 쓸모 있는 틀이다.

쓰이는 기출 2024-2(봉쇄와 사이버 보안), 2026-1(3안), 2026-2(정책B), 2023-1(총량 제한)

답안 속 문장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더라도, 딥페이크 생성처럼 해악이 명확한 기능만 제한하는 더 약한 수단이 있는데도 전면 금지를 택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신뢰 보호

국가나 공적 기관의 약속·제도를 믿고 행동한 사람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도는 바꿀 수 있지만, 바꿀 때 이미 신뢰하고 행동한 사람에게 경과 조치를 두거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공익상 필요와

신뢰의 가치를 저울질해 판단한다. 사정이 크게 변했다는 이유로 약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정 변경’의 논리와 짝을 이룬다.

대립 구도

신뢰 보호(예측 가능한 장래 계획) ↔ 사정 변경·공익 변화(제도의 유연성)

쓰이는 기출 2024-1 (사전 검사 통과 후 1년 만의 철폐), 모의 1회 2번

답안 속 문장

“제도를 바꿀 권한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비용을 약속을 믿은 쪽에 떠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2 의무와 관계

구조 의무와 특별한 관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전통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보호를 맡은 사람처럼 **특별한 관계나 위험을 스스로 만든 사람**에게만 구조 의무를 인정했다. 반면 일부 나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처벌한다(예: 프랑스). 앞의 입장은 행동의 자유를, 뒤의 입장은 생명의 가치와 공동체의 연대를 앞세운다.

대립 구도

행동의 자유·특별한 관계 기준(2019 갑) ↔ 생명 보호·일반적 구조 의무(2019 을)

쓰이는 기출 2019-1

답안 속 문장

“구조를 요구할 근거는 막연한 도덕적 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누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

작품에는 재산적 가치뿐 아니라 창작자의 사상과 명예가 담겨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작품의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창작자에게 작품의 동일성을 지키고 이름을 표시할 권리 같은 인격적 이익을 인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작품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논쟁이 있다. 원본이 하나뿐인 미술 작품, 특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

대립 구도

창작자의 동일성 유지 이익(2024-1 병) ↔ 소유자의 처분 자유와 작품 유통(2024-1 정)

쓰이는 기출 2024-1

답안 속 문장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작품이 잘려 나가고 버려지는 것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성을 직접 훼손한다.”

제12장

자유·해악·후견

3부 배경 개념 | 연결 기출: 2010-1, 2015-1, 2018-1, 2024-2, 2026-1, 2026-2 · 모의고사 1회 1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2-1 국가는 언제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가 136

12-2 위험과 예방 137

12-1 국가는 언제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가

해악의 원리

J. S. 밀은 『자유론』에서 문명사회의 구성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에서는 개인이 주권자다. 이 원리는 규제의 정당성을 묻는 A형 문항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준이다. 주의할 점은, 이 원리가 규제 **반대**의 근거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 **찬성**의 근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대립 구도

자기 관련 행위의 자유 ↔ 타인 관련 행위의 규제

쓰이는 기출 2026-1 의견③, 2015-1(오토바이 안전모), 2010-1(도덕의 법적 강제)

답안 속 문장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이라는 한계를 전제한다. 타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수 술만을 금지하는 2안은 바로 그 한계를 넘는 행위를 막는다.”

후견주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입하는 것을 후견주의(온정적 간섭)라 한다. **약한 후견주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는 경우(미성년자, 착오, 충동)에만 개입을 허용한다. **강한 후견주의**는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의 선택에도 본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다. 약한 후견주의는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지만, 강한 후견주의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립 구도

자율성 존중(자기 책임) ↔ 본인 보호(판단 능력의 한계)

쓰이는 기출 2026-1 3안, 2026-2 정책B, 2015-1

답안 속 문장

“자기 책임 원칙은 결정의 결과를 충분히 헤아릴 판단 능력을 전제로 한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미성년자에게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부모의 결정권과 국가의 개입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몫이다.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배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의 결정이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줄 수 있거나, 부모 역시 사회적 압력에 휩쓸릴 수 있는 영역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문제는 ‘최소한’의 범위다.

대립 구도

가정의 자율(2026-2 의견⑦) ↔ 청소년 보호의 공적 기준(2026-1 3안)

쓰이는 기출 2026-1, 2026-2

답안 속 문장

“부모 등의 요건을 두면 금지는 서류 절차로 바뀐다. 외모 압력이 큰 사회에서는 부모도 같은 압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12-2 위험과 예방

사전 예방의 원칙

피해가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더라도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환경·보건 분야에서 발전했다. 비판자들은 이 원칙을 넓게 적용하면 불확실한 위험을 이유로 유익한 기술과 행위까지 막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피해의 크기와 비가역성**, 그리고 **예방 조치의 비용**을 함께 따진다.

대립 구도

미리 막기(비가역적 피해) ↔ 해악이 나타난 뒤 대응하기(2026-2 의견⑥)

쓰이는 기출 2026-2, 2024-2, 2018-1

답안 속 문장

“현실의 해악이 나타나기 전에 지식의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수용자의 판단을 박탈한다. 사전 금지는 되돌릴 수 없는 해악이 명확한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축 효과

어떤 제도가 직접 금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정당한 행동까지 스스로 삼가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감시, 모호한 금지 기준, 과도한 제재가 위축 효과를 낳는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다룰 때 특히 중요하다.

쓰이는 기출 모의 1회 1번(얼굴인식) 의견④, 2026-1 1안(모호한 기준)

답안 속 문장

“감시를 의식한 시민이 집회나 특정 장소를 피하게 된다면, 그 제도는 금지 조항 하나 없이도 자유를 제한한다.”

민감 정보와 정보 자기결정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건강·질병, 생체 정보처럼 드러났을 때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쉬운 정보는 특히 보호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이 드러내지 않은 사실까지 **추론**해 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을 만든다.

쓰이는 기출 2018-1 자료⑤⑥, 모의 1회 1번 의견②

답안 속 문장

“얼굴은 비밀번호와 달리 바꿀 수 없는 정보다.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평생 이어진다.”

제13장

규제와 신기술

3부 배경 개념 | 연결 기출: 2017-1, 2018-1, 2020-2, 2022-1, 2023-1, 2024-2, 2026-2 · 모의고사 2회 1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3-1	규제의 형식과 주체	139
13-2	누가 결정하는가	140
13-3	데이터와 기술의 책임	140

13-1 규제의 형식과 주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포지티브 방식은 위험을 미리 통제하기 쉽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막는다. 네거티브 방식은 혁신에 유리하지만, 금지 목록이 위험을 따라잡지 못하면 공백이 생긴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지할 것을 정밀하게 고르는 것”이다.

대립 구도

사전 통제·안전 ↔ 혁신·자유

쓰이는 기출 2020-2

답안 속 문장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금지하는 틀이 아니라 위험한 것을 정확히 골라내는 목록이다.”

자율 규제와 시장 실패

자율 규제는 기업이나 업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 지키는 방식이다. 정부보다 현장을 잘 알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과 충돌하는 기준은 지켜지지 않기 쉽고, 위반해도 제재가 약하다. 시장이 스스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 하는데, 독점, 정보 비대칭, 외부효과(제3자에게 미치는 비용)가 대표적 원인이다. 시장 실패가 있는 곳에서는 공적 규제의 근거가 강해진다.

대립 구도

자율·유연성 ↔ 강제·실효성

쓰이는 기출 2026-2 정책A·의견④, 2022-1 ③⑧

답안 속 문장

“데이터 시장은 이미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가격과 조건을 정하는 구조다. 이런 시장에 맡기면 불평등은 해소되기보다 커진다.”

시범 실시와 규제 샌드박스

규제의 효과는 시행해 보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지역·기간에 먼저 시행해 효과를 검증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유예해 실험하게 하는 방식(규제 샌드박스)이 쓰인다. 전면 시행 전에 증거를 쌓아 규제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쓰이는 기출 2026-2 의견①, 2020-2 <사례 2>

답안 속 문장

“규제의 효과는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면 금지보다 일부 지역의 시범 실시로 근거를 쌓는 것이 순서다.”

13-2 누가 결정하는가

전문가 판단과 민주적 정당성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전문가는 선거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대로 여론은 민주적 정당성을 주지만, 소수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단기적 감정에 흔들릴 수 있다. 좋은 결정 과정은 둘을 대립시키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대상자가 참여하는 절차를 만든다.

대립 구도

전문성(2026-2 의견⑤) ↔ 수용성·민주성(의견⑧) ↔ 소수 보호(의견③)

쓰이는 기출 2026-2, 2027-1 의견③⑨, 2021-1(여론 조사로 정한 기준)

답안 속 문장

“전문가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지만, 반대 그룹의 중심인 과학기술자가 빠진 자문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의 실효성과 우회

규제는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다. 감시할 수 없는 규제,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규제는 우회와 음성 시장을 낳고, 결국 정직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된다. 정책을 평가할 때는 “이 규제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를 반드시 묻는다.

쓰이는 기출 2023-1 여론⑤(총량 제한), 2026-2 의견⑧, 모의 2회 2번 의견④

답안 속 문장

“감시할 수 없는 규제는 정직한 시민에게만 부담을 주고,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음성 시장을 만든다.”

13-3 데이터와 기술의 책임

데이터의 성격

데이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비경합성). 많이 모일수록 가치가 커져 한 기업에 집중되기 쉽다(네트워크 효과). 또 플랫폼의 데이터는 기업의 노력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용자의 활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데이터를 물건처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볼지, 공공재에 가까운 자원으로 볼지가 정책의 방향을 가른다.

대립 구도

소유·거래의 대상(2022-1 ⑦④) ↔ 공공재적 자산(2022-1 ②)

쓰이는 기출 2022-1, 2018-1

답안 속 문장

“플랫폼이 가진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수많은 이용자의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기업의 노동만으로 얻은 소유물로 보는 것은 데이터의 형성 과정을 무시한다.”

통제 가능성과 책임

책임은 결과를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책임이 사고를 줄이는 유인이 된다. 자율주행처럼 판단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옮겨 가면, 책임도 그 판단 과정을 설계한 쪽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반대편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보유해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위험 책임)고 본다.

대립 구도

통제 가능성(제조사) ↔ 위험원 보유·이익(소유자) ↔ 사회적 분담(기금·보험)

쓰이는 기출 모의 2회 1번

답안 속 문장

“책임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에게 지워야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에서 그 사람은 판단 과정을 설계한 제조사다.”

제14장

공정 · 분배 · 조세

3부 배경 개념 | 연결 기출: 2016-2, 2018-2, 2022-1, 2023-1, 2025-2, 2027-1 · 모의고사 2회 2번, 3회 2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4-1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걷는가	143
14-2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	144

14-1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걷는가

응능 원칙과 응익 원칙

응능 원칙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소득·재산)에 따라 세금을 걷는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대표적이다. **응익 원칙**은 공공 서비스로 얻는 이익에 따라 세금을 걷는다. 도로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방식이다. 응능 원칙은 수직적 공평(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을, 응익 원칙은 대가 관계를 중시한다.

쓰이는 기출 2027-1 의견⑦(수익 비례), 2022-1(데이터 세의 누진)

답안 속 문장

“세금은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례해야 공평하다. 가격과 면적으로 정해지는 세금은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같은 금액을 요구한다.”

조세의 네 원칙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의 원칙으로 **공평**(능력에 비례), **확실**(세액과 납부 시기가 명확), **편의**(납세자에게 편리한 시기와 방법), **경제**(징수 비용 최소화)를 들었다. 현대의 조세 논의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네 원칙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과세(공평)는 대가 비용이 크고 복잡하다(경제·확실).

대립 구도

공평·정확성(2027-1 의견②) ↔ 명확성·경제성(의견⑥⑩)

쓰이는 기출 2027-1, 2023-1

답안 속 문장

“행정 비용이 편익보다 과다하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부정확한 과세가 낳는 불공평과 조세 저항의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과세 대상 — 보유와 실현

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팔지 않고 보유만 하는 상태에서 과세할지(보유·미실현 이익 과세), 팔아서 이익이 확정되었을 때 과세할지(실현 이익 과세)가 갈린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현금 소득 없이 세금을 내게 하고, 가치가 떨어져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쓰이는 기출 2023-1 여론⑥

답안 속 문장

“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과세는 보유가 아니라 교환할 때 실현된 차익에 부과해야 한다.”

14-2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

세대 간 정의

현 세대의 결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다. 롤스는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적정한 몫을 남기는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제시했다. 2018-2 제시문 (나)가 이 생각이다. 세대 간 정의는 연금·재정·환경 문제에서 “지금의 다수결”을 제약하는 근거가 된다.

대립 구도

현 세대의 필요 ↔ 미래 세대의 몫

쓰이는 기출 2018-2 (나), 2025-2(생산가능인구)

답안 속 문장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오늘의 다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원 배분의 장기 원칙을 선거 주기와 분리해야 하는 이유다.”

보조금과 유인의 왜곡

보조금은 원하는 행동의 비용을 낮춰 그 행동을 늘린다. 그러나 보조금이 행동의 **이유**를 바꾸어 원래 목적과 다른 행동을 부를 수 있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 행동), 지급이 불안정하면 오히려 행동을 미루게 만든다. 벌금과 보조금은 모두 금전적 유인이지만, 벌금은 선택지를 줄이고 보조금은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쓰이는 기출 2025-2 을·의견④⑦, 모의 2회 2번 3안

답안 속 문장

“벌금은 선택을 처벌해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고, 보조금은 경제적 장벽을 낮춰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하는 능력주의는 공정해 보이지만, 능력을 기를 기회 자체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하다면 결과의 격차는 배경의 격차를 되풀이한다. **형식적 기회의 평등**은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이다. 할당제·가산점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수단이지만 역차별 논쟁을 부른다.

대립 구도

형식적 평등(같은 규칙) ↔ 실질적 평등(출발선 보정)

쓰이는 기출 2016-2(공공기관 채용), 모의 2회 2번 2안·의견③

답안 속 문장

“할당의 기준을 출신 지역이 아니라 지역 대학에서 받은 교육으로 삼으면,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같은 조건에서 대상이 되어 역차별의 소지가 줄어든다.”

위험과 의존에 따른 보호

노동법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근로자’라는 지위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처럼 형식은 독립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플랫폼에 의존하고 지시에 가까운 통제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보호의 기준을 **형식**에서 **위험과 의존의 정도**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쓰이는 기출 모의 3회 2번

답안 속 문장

“보호의 수준은 일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위험과 의존의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제15장

민주주의와 대표

3부 배경 개념 | 연결 기출: 2012-1, 2013-2, 2018-2, 2021-1, 2027-2 · 모의고사 3회 1번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5-1 누가 통치하는가	147
15-2 정당한 절차와 과거의 청산	148

15-1 누가 통치하는가

다수결의 조건과 한계

다수결은 구성원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주적 결정 방식이다. 그러나 정당하려면 조건이 있다. ① 사안이 다수결로 정하기에 적합해야 하고(진리·고도의 전문 사안은 제외), ②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어야 하며, ③ 공동체가 합의한 근본 가치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이 무너지면 다수결은 ‘다수의 횡포’가 된다.

쓰이는 기출 2018-2 (가), 2021-2 X, 2027-1 의견③⑨

답안 속 문장

“고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선거에서 다수가 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다.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없다면 다수결의 정당성도 약해진다.”

대표의 세 모델 — 선거·전문성·추첨

선거는 피치자의 동의로 통치자를 정하고 다음 선거로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말 잘하고 자원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다음 선거를 의식한 단기적 결정을 부를 수 있다. **전문성에 따른 선발**은 식견 있는 통치를 기대하지만, 검증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에 따라 특정 계층의 지배가 될 수 있다. **추첨**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고 사회의 구성을 닮은 기구를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을 민주적, 선거를 귀족적 방식으로 보았다. 오늘날에도 시민의회처럼 추첨으로 구성된 기구가 쓰인다. 다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책임성과 숙련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대립 구도

동의와 책임(A) ↔ 식견과 판단력(B) ↔ 대표성과 평등한 기회(C)

쓰이는 기출 2027-2 견해A·B·C

답안 속 문장

“통치 능력은 타고나거나 시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다.”

대표자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

대표자가 유권자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위임** 모델과,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신탁** 모델이 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의원이 지역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앞의 모델은 여론 반영을, 뒤의 모델은 독립적 판단을 강조한다.

쓰이는 기출 2027-2 의견①⑧, 2026-2(여론과 전문가)

답안 속 문장

“시민의 눈치만 살피는 통치자는 눈앞의 문제에 골몰해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시민에게서 멀어진 통치자가 공익에 헌신한다는 보장도 없다.”

15-2 정당한 절차와 과거의 청산

절차적 정당성

결정의 내용이 옳은지와 별도로, 결정에 이르는 절차가 공정했는지가 결정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가,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했는가, 정보가 공개되었는가를 묻는다. 절차를 건너뛴 결정은 내용이 옳더라도 수용되기 어렵고, 같은 방식의 남용을 부른다.

쓰이는 기출 2026-2(자문위원회 구성), 2023-2(보상 절차의 흠), 모의 3회 1번(국회 동의)

답안 속 문장

“협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판단하고 바로잡을 권한은 국회에 있다. 그 경로를 건너뛴 공개는 공익을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행기 정의

독재나 분쟁이 끝난 사회가 과거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 다룰지의 문제다. 흔히 네 요소로 설명한다: **처벌** (책임자 처벌), **진실 규명**, **피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철저한 처벌은 정의를 세우지만 사회 통합을 늦출 수 있고, 신속한 화해는 통합을 앞당기지만 불처벌의 문화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청산의 기준을 형식적 지위로 정하면 억울한 대상자가 생긴다.

대립 구도

철저한 청산(2021-1 관점3) ↔ 억울한 대상자 방지(관점1) ↔ 신속한 화해(관점2)

쓰이는 기출 2021-1, 2010-2(빼앗긴 세대), 2011-2(전시 특별조치령 판결)

답안 속 문장

“진실에 근거한 청산과 공정한 청산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다. 형식 기준은 조사의 출발점으로 쓰고, 책임의 확정도 구체적 행위의 확인에 맡겨야 한다.”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의 불법이나 위험을 외부에 알리는 공익 제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다.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공익을 판단해 비밀을 공개하면 조직은 운영될 수 없다. 그래서 흔히 세 가지를 따진다. 공익이 중대하고 급박한가, 내부 절차나 권한 있는 기관 같은 다른 수단을 먼저 시도했는가, 공개 범위가 필요한 만큼인가.

쓰이는 기출 모의 3회 1번

답안 속 문장

“비밀 공개의 정당성은 공익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공익을 지킬 다른 길을 먼저 찾았는지, 공개를 필요한 만큼에 그쳤는지에 달려 있다.”

제4부

실전 모의고사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 만든 모의고사 3회와, 가장 최근 기출인 2027학년도를 최종회로 신는다. 한 회는 실제 시험처럼 두 문항을 110분 안에 쓴다. 해설과 예시답안은 장 끝에 모았다.

제16장

실전 모의고사

4부 실전 | 신작 1~3회(A·B·C형 각 2문항) · 최종회: 2027학년도 기출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6-1 모의고사 사용법	151
모의고사 1회 · 1번 공공장소 얼굴인식 조례안	152
모의고사 1회 · 2번 약속의 변경 — 세금 감면과 장학금	154
모의고사 2회 · 1번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156
모의고사 2회 · 2번 지역 청년 유출 대책	158
모의고사 3회 · 1번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160
모의고사 3회 · 2번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	162
최종회 · 1번 2027학년도 1번 — 점포세 과세 방식	164
최종회 · 2번 2027학년도 2번 — 국가평의회 구성	166
16-6 해설과 예시답안	168
1회 1번 공공장소 얼굴인식 조례안	168
1회 2번 약속의 변경	169
2회 1번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170
2회 2번 지역 청년 유출 대책	171
3회 1번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172
3회 2번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	173
최종회 1번 2027학년도 1번 — 점포세 과세 방식	174
최종회 2번 2027학년도 2번 — 국가평의회 구성	175

16-1 모의고사 사용법

회차	1번	2번
1회	A형 · 공공장소 얼굴인식 조례안	B형 · 약속의 변경(세금 감면, 장학금)
2회	C형 ·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한계·보완)	A형 · 지역 청년 유출 대책 (한계·보완)
3회	B형 ·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C형 ·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
최종회	2027학년도 1번 · 점포세 과세 방식	2027학년도 2번 · 국가평의회 구성

1. 한 회를 한 번에 푼다. 110분을 재고, 두 문항에 55분씩 배분한다.
2. 답안은 문항 뒤의 작성란이나 부록 D의 원고지에 쓴다.
3. 끝나면 부록 C의 평가 기준으로 채점하고, 16-6의 해설을 읽는다.
4.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1부의 장으로 돌아가 드릴을 다시 한다.
5. 일주일 뒤 같은 문항을 다시 쓴다. 두 번째 답안에서 고친 점을 적어 두면 부록 E를 채우는 자기만의 실수 목록이 된다.

신작 문항에 대하여

1~3회는 이 책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다. 사례의 국가·기관·인물·수치는 모두 가상이며 실제 정책이나 사건을 가리키지 않는다. 최근 기출의 조건 형식(활용 개수 하한, 절충론 배제, 한계와 보완)을 고르게 반영했다.

모의고사 1회 · 1번

공공장소 얼굴인식 조례안

A형 · 조례안 3개 · 의견 10개 중 4개 이상 · 절충론 배제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의견>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S시 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1개의 조례안을 선택하고,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그 이유를 제시할 것
- (2) 절충론은 배제할 것
- (3) 선택하지 않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 (4) 조례안은 1안, 2안, 3안으로, <의견>은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S시의 변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S시 경찰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에 얼굴인식 기능을 더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며 기술 도입을 요청하였다. 이 기술은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얼굴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감시라며 반발하였다. S시 의회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세 가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1안 : 공공장소 CCTV에 실시간 얼굴인식 기능을 도입하되, 수배자 데이터베이스와만 대조하고 일치하지 않은 영상은 24시간 후 자동 삭제한다.

2안 : 실시간 얼굴인식은 금지하되,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저장된 영상에 한하여 얼굴인식 검색을 허용한다.

3안 :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순찰 인력 확충과 조명 개선 등 다른 수단으로 대응한다.

<의견>

- ① 흉기 난동은 몇 분 안에 끝나. 사건이 일어난 뒤에 범인을 찾는 것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어.
- ② 얼굴은 바꿀 수 없는 정보야.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바꾸면 되지만 얼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평생 따라다녀.
- ③ 얼굴인식 기술은 피부색이나 성별에 따라 오인식률이 다르다고 해. 잘못 지목된 사람은 억울하게 질문을 당할 수 있어.
- ④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집회에 나

가거나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을 꺼리게 돼.

⑤ 이미 공공장소 곳곳에 CCTV가 있는데 얼굴인식 기능만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⑥ 수배자만 대조한다고 해도, 대조하려면 결국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야 해.

⑦ 법원의 통제를 거치면 수사기관이 기술을 남용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⑧ 한번 도입된 감시 기술은 목적이 조금씩 넓어지기 마련이야. 처음엔 흉악범을 찾다가 나중엔 체납자까지 찾게 될 수도 있어.

⑨ 순찰 인력을 늘리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넓은 지역을 사람이 다 지켜볼 수는 없어.

⑩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어.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모의고사 1회 · 2번

약속의 변경 — 세금 감면과 장학금

B형 · 관점 4개 중 3개 이상 · 두 결정 평가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시오.
- (2) (1)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관점>을 활용하여 A시와 C대학의 결정을 각각 평가하시오.
- (3) <관점>은 3개 이상 활용하고, 관점①, 관점④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능력이 더 큰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사례>

<사례 1>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A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에 10년간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였다. 기업 B는 이 조례를 믿고 다른 지역 대신 A시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다. 그런데 5년 뒤 새로 취임한 시장은 세수 부족으로 복지 예산이 모자란다고 감면 조례를 폐지하였고, B에게도 다음 해부터 지방세를 전액 부과하였다. B는 감면을 전제로 투자 계획을 세웠으며 반발하였다.

<사례 2> 사립 C대학은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입학 성적 상위 5%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하였다. 학생 D는 다른 대학의 합격을 포기하고 C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2년 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급락하자 C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장학금을 등록금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 결정은 재학생에게도 즉시 적용되었다. D는 남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

<관점>

- ① 공적 주체든 사적 주체든 약속을 믿고 행동한 사람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신뢰가 보호되지 않으면 누구도 약속을 믿고 장래를 계획할 수 없다.
- ② 약속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화가 생겼다면, 약속을 그대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수 있다. 이때는 약속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공동체의 결정은 변화하는 공익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결정이 현재와 미래의 판단을 묶어서는 안 된다.
- ④ 약속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약속한 쪽과 믿은 쪽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특히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모의고사 2회 · 1번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C형 · 관점 3개 · 의견 8개 중 4개 이상 · 한계와 극복 방안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지하고, 다른 두 관점을 반박할 것
- (2)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지지와 반박의 이유를 제시할 것
- (3) 자신이 지지한 관점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할 것. 단, 극복 방안으로 자신이 반박한 관점을 활용하지는 말 것
- (4) <관점>은 관점A, 관점B, 관점C로, <의견>은 의견①, 의견⑧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K국에서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이 허용되었다. 甲은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구입해 출퇴근에 이용해 왔다. 어느 날 甲이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도로 공사 구간의 임시 표지판을 잘못 인식하여 인도로 진입하였고, 보행자 丙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제조사 乙은 사고 3주 전에 임시 표지판 인식 오류를 수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였으나 甲은 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乙은 “업데이트 알림을 여러 차례 보냈으므로 설치하지 않은 甲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甲은 “운전을 하지 않는 내가 기술적 오류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맞섰다. K국 국회는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원칙을 정하기 위해 다음 세 관점을 검토하고 있다.

<관점>

관점A : 사고의 원인이 된 판단 과정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관점B :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여 이익을 누리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관점C :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지 말고, 자율주행 차량 보유자 전체가 분담금을 내어 조성한 공동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의견>

- 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의 결과를 책임 지우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 ②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몫

이다. 자기 몫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 결과를 져야 한다.

③ 제조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면 기업은 기술 개발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더 안전한 기술의 등장이 늦어진다.

④ 사고 원인이 소프트웨어의 판단 과정에 있다면, 그 과정을 설계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제조사 뿐이다.

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빠르고 확실한 보상이다.

⑥ 과실을 따지지 않으면 누구도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⑦ 자동차를 보유해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자동차가 만든 위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

⑧ 업데이트 알림은 자주 오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일반 소유자는 어느 것이 안전에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모의고사 2회 · 2번

지역 청년 유출 대책

A형 · 정책안 3개 · 의견 10개 중 4개 이상 · 한계와 보완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의견>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십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J도 의회 의원으로서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개의 정책안을 선택하고,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작성할 것
- (2) 선택하지 않은 2개의 정책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 (3) 자신이 선택한 정책안의 한계를 밝히고 보완 방안을 제시할 것. 단, 선택하지 않은 정책안을 보완 방안으로 활용하지는 말 것
- (4) 정책안은 1안, 2안, 3안으로, <의견>은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J도는 지난 10년간 20~30대 인구가 30% 가까이 줄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도내 대학 졸업생의 상당수도 취업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다.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도내 대학 두 곳이 문을 닫자 그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졌다. J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1안 :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이고, 줄어든 정원만큼 지역 대학에 정원과 재정을 지원한다.

2안 : 도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도내 대학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3안 : 도내로 이주하거나 도내에 머무는 만 19~34세 청년에게 5년간 매달 50만 원의 정주 수당을 지급한다.

<의견>

- ①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대학이 아니라 일자리야. 졸업 후 일할 곳이 없으면 지역 대학을 나와도 결국 떠나.
- ② 수도권 대학에 가려는 학생의 선택을 정원으로 막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거야.
- ③ 할당제는 같은 능력을 갖춘 다른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어.
- ④ 현금 지원은 지급이 끝나면 효과도 끝나. 수당을 받으려고 주소만 잠시 옮기는 사람도 생길 거야.

⑤ 지역에 대학이 사라지면 병원, 상점, 문화시설도 함께 사라져. 대학은 지역의 마지막 거점이야.

⑥ 지역 인재가 지역 기관에서 일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게 돼.

⑦ 사람이 머물려면 결국 삶의 질이 중요해. 의료와 교육, 문화 기반이 없는 곳에 돈만 준다고 정착하지 않아.

⑧ 한정된 예산은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에 먼저 투입해야 낭비되지 않아.

⑨ 할당제로 채용된 사람도 몇 년 뒤 수도권으로 이직하면 효과가 사라져.

⑩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어. 시장에 맡겨 두면 격차는 더 벌어질 뿐이야.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모의고사 3회 · 1번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B형 · 관점 4개 중 3개 이상 · 두 행위 평가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사례 1>과 <사례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시오.
- (2) (1)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관점>을 활용하여 甲과 乙의 행위를 각각 평가하시오.
- (3) <관점>은 3개 이상 활용하고, 관점①, 관점④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하시오.

<사례>

<사례 1> 식품회사의 연구원 甲은 자사의 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甲은 이를 상급자와 품질관리 부서에 세 차례 보고하였으나, 회사는 “재검사가 필요하다”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였다. 甲은 실험 기록과 함께 제조 공정의 세부 배합 비율이 담긴 내부 문서를 복사하여 식품 안전 당국에 신고하고, 같은 자료를 언론사에도 넘겼다. 보도 이후 제품은 회수되었으나, 회사는 甲이 입사할 때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며 甲을 해고하였다. 경쟁사들은 보도된 배합 비율을 참고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였다.

<사례 2> 외교부 공무원 乙은 정부가 이웃 나라와 체결한 비공개 협약 문서를 검토하다가, 자국 어민의 조업 구역을 크게 줄이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乙은 이 협약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乙은 내부 보고나 국회 제보를 하지 않고, 곧바로 협약 전문을 언론사에 넘겼다. 보도 이후 어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상대국은 외교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후속 협상을 중단하였다. 정부는 乙을 비밀 누설로 징계하였다.

<관점>

- ① 비밀 유지는 조직과 국가가 신뢰를 유지하는 기초이다. 구성원 각자가 공익을 판단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떤 조직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 ② 공개되지 않으면 다수의 생명이나 안전 같은 중대한 공익이 침해되고, 이를 막을 다른 수단이 없다면 비밀의 공개는 정당하다.
- ③ 비밀을 공개하더라도 그 범위와 방법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문제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

는 기관에 먼저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공개 행위의 정당성은 공개한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진실한지와 그 공개가 공익에 기여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모의고사 3회 · 2번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

C형 · 견해 3개 · 의견 8개 중 5개 이상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갑, 을, 병의 견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지하고, 다른 견해를 모두 반박할 것
- (2) <의견>을 5개 이상 활용할 것
-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⑧과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배달 플랫폼 R에는 약 5만 명의 배달원이 등록되어 있다. 배달원은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해 일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과 동시에 일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앱은 배달 요청을 배달원에게 자동으로 배정하고, 배정을 거절하거나 배달이 늦으면 평점을 낮추며, 평점이 낮은 배달원에게는 좋은 조건의 요청을 덜 배정한다. 배달원은 R과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산업재해 보상, 해고 제한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최근 배달 중 사고로 크게 다친 배달원이 치료비와 생계비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달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갑 : 배달원은 앱을 통해 사실상 R의 지휘를 받으며 일한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최저임금, 산재 보상, 해고 제한 등 근로자 보호 제도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

을 : 배달원은 일할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독립 사업자다. 지위는 그대로 두되, 국가가 배달원의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병 : 배달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다. 두 지위 사이에 새로운 지위를 만들어, 산재 보상과 최소 보수는 보장하되 근로시간 규제와 해고 제한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견>

- ① 알고리즘이 배정을 거절한 배달원의 평점을 낮춘다면, 배달원은 사실상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 ② 많은 배달원이 다른 일과 병행하며 원하는 시간에만 일한다. 이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오히려 족쇄다.
- ③ 새로운 지위를 만들면 기업은 기존 근로자까지 그 지위로 바꾸어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④ 보호의 수준은 일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위험과 의존의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⑤ 인건비가 오르면 플랫폼은 배달료를 올리고,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부담을 떠안는다.

⑥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면 기업이 저야 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내는 셈이다.

⑦ 법적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지는 동안 사고를 당한 배달원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

⑧ 배달원 대부분에게 이 일은 생계의 주된 수단이며, 한 플랫폼의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답안 작성란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최종회 · 1번

2027학년도 1번 — 점포세 과세 방식

A형 · 과세 방식 2개 · 의견 10개 중 4개 이상 · 여론 조사에서 장단점 추론 · 900~1200자

1.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T국의 시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그 이유를 제시할 것
- (2) 여론 조사 결과에서 추정되는 각 과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할 것
- (3)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T국 정부는 세수(稅收)가 부족하여 ‘점포세’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한다. 점포의 운영자에게 점포세를 부과하되, 운영자(임차인)와 소유자(임대인)가 다를 때는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다. 점포세의 과세 방식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제안되었다.

하나는 ‘매출추산법’이다. 현장직 공무원이 임의로 매달 특정일을 정해 놓고 담당 지역 점포에 직접 나가 그날의 매출액을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총매출액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 점포를 금·은·동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금 등급 점포에는 은 등급 점포보다 25% 높은 세율을, 동 등급 점포에는 은 등급 점포보다 25% 낮은 세율을 총매출액에 곱해서 세금 액수를 산정한다.

다른 하나는 ‘경기전망법’이다. 매년 초 정부가 중앙은행의 경기 전망을 반영하여 그해의 세율을 결정한다. 경기 전망은 호황·관망·불황으로 구분하고, 호황일 때는 지난해보다 10% 높은 세율로, 관망일 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불황일 때는 지난해보다 10%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부과되는 세금 액수는 점포의 가격과 면적에 그해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T국 정부는 점포세 도입에 앞서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시행하였다.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의 시민은 두 가지 과세 방식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호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매출추산법은 현장직 공무원, 대형 점포와 신축 점포 임대인, 상업이 덜 발달한 지방 점포 임차인이 더 선호하였다. 반대로 경기전망법은 관리직 공무원, 소형 점포와 낙후 점포 임대인, 상업이 더 발달한 수도권 점포 임차인이 더 선호하였다.

<의견>

- ①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부패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② 큰 비용이 들더라도 과세는 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다.
- ③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止揚)하여야 한다.
- ④ 실제로 수익을 얻은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일치해야 한다.
- ⑤ 공무원은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성되는 편익에 비하여 과다하다면 그러한 행정은 비효율적이다.
- ⑦ 수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수익이 적을수록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공평하다.
- ⑧ 조세 행정에서는 단순히 세수 충당뿐만 아니라, 과세로 인하여 파생되는 정책적 효과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⑨ 과세 방식을 결정할 때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납세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⑩ 과세 방식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여야 한다.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최종회 · 2번

2027학년도 2번 — 국가평의회 구성

C형 · 견해 3개 · 의견 10개 중 4개 이상 · 한계와 극복 방안 · 900~1200자

2. <사례>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P국의 시민으로서 정치인 A, B, C의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지하고, 다른 두 견해를 반박할 것
- (2) <의견>을 4개 이상 활용하여 지지와 반박의 이유를 제시할 것
- (3) 자신이 지지한 견해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단, 극복 방안으로 자신이 반박한 견해를 활용하지는 말 것
- (4) 정치인 A, B, C의 견해는 견해A, 견해B, 견해C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의견>을 활용할 때는 의견①, 의견⑩과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사례>

P국은 세습 군주가 통치하는 왕정국가이다. 군주의 방탕한 생활로 국고가 탕진되어 최근 P국 전체가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왕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음은 세 명의 유력 정치인이 나눈 대화이다.

정치인 A : 현명한 군주를 만나는 건 요행에 불과하네. 왕정을 유지하는 이상 어리석은 군주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위험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

정치인 B : 자네 말이 맞아. 왕정을 대체할 정치체제가 필요해. 그런데 시민이 모두 통치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정치인 C : 그렇지. 그래서 나는 모든 시민을 대신하는 국가평의회(國家評議會)를 새로 설치해 통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네.

정치인 A : 나도 자네들과 같은 생각일세. 정작 중요한 건 국가평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겠지. 나는 피치자(被治者)의 동의에 기반한 통치야말로 이상적인 정치라는 신념을 갖고 있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통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국가평의회 구성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

정치인 B : 국가평의회가 통치를 담당해야 한다는 말에는 나도 찬성하네. 중요한 건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식견(識見)이야. 통치에 적합한 전문성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에게 통치를 맡기는 게 옳아. 선출된 사람이 반드시 그런 역량을 갖췄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그래서 나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로 국가평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네.

정치인 C : 내 생각은 좀 달라. 자네들 견해대로라면 말만 번지르르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로만 국가평의회가 채워지지 않겠나? 국가평의회가 시민 모두를 대표하는 통치 기구라면, 그 구성은 실제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어야 해. 그러려면 국가평의회 구성원은 성별·연령·직업·지역·소득·학력 등을 비례적으로 반영해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게 맞아.

<의견>

정치인 A, B, C의 견해를 듣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 ① 시민의 눈치만 살피는 통치자는 눈앞의 문제에만 골몰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워.
- ②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통치에 참여해야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을 거야.
- ③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통치를 맡기는 건 자기 지배라는 정치의 이상에 맞지 않아.
- ④ 통치에 요구되는 덕목은 냉철한 이성이야. 무지한 통치자만큼이나 다수의 열정에 휘둘리는 통치자도 위험해.
- ⑤ 통치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치자(治者)와 피치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시민이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
- ⑥ 통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
- ⑦ 제도를 설계할 때 이상만 좋으면 안 돼. 중요한 건 어느 제도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 주는지야.
- ⑧ 동료 시민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책임 있게 통치하기 마련이야.
- ⑨ 통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해. 통치자는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찾아야 해.
- ⑩ 왕정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우선은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게 현실적이야.

한 줄 약 40자 · 900~1200자

16-6 해설과 예시답안

1회 1번 공공장소 얼굴인식 조례안

조건의 핵심 — 2026-1과 같은 틀이다. 1개 선택, 의견 4개 이상, 절충론 배제, 나머지 2안 평가.

태깅 — 1안 지지: ①⑤⑨⑩. 1안 반박: ②③④⑥⑧. 2안 지지: ⑦. 3안 지지: ②④⑧. 3안 반박: ⑤⑨.

출제 의도 — 의견⑥이 1안의 핵심 약점(“수배자만”이라도 결국 모두를 분석)이고, 의견⑦이 2안의 핵심 근거다. 1안을 택하면 ⑥을, 3안을 택하면 ⑤⑨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절충의 함정 — “2안을 시행하되 변화가에 한해 1안을 허용”은 절충이다.

예시답안 — 2안

980 자 (공백 포함)

나는 2안을 선택한다. 조례안을 고르는 기준은 흥기 난동이라는 위협에 실제로 대응하면서도, 그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결과로 번지지 않는가이다. 2안은 이 두 요구를 함께 충족하는 유일한 안이다.

첫째, 2안은 감시의 대상을 사건과 관련된 영상으로 한정한다. 1안은 수배자만 대조한다고 하지만, 대조를 위해서는 결국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야 한다(의견⑥). 얼굴은 비밀번호와 달리 바꿀 수 없는 정보이므로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평생 이어진다(의견②). 2안은 중대 범죄가 발생한 뒤 저장 영상만 검색하므로 이런 상시 분석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2안은 남용을 막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법원의 영장을 거치면 수사기관이 기술을 자의적으로 쓸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의견⑦). 감시 기술은 한번 도입되면 목적이 점점 넓어지기 쉽다(의견⑧). 1안에서는 대조할 데이터베이스를 넓히기만 하면 체납자 추적도 가능해지지만, 2안에서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그런 확장이 어렵다.

1안을 지지하는 측은 흥기 난동이 몇 분 안에 끝나므로 사후 검거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의견①). 이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실시간 인식이 수배자를 찾아내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흥기 난동범 대부분은 사전에 수배된 사람이 아니다. 반면 1안의 비용은 확실하다. 오인식으로 억울한 검문을 당하는 시민이 생기고(의견③), 감시를 의식한 시민은 집회나 특정 장소를 피하게 된다(의견④).

3안은 감시의 위험을 가장 확실히 막는다. 그러나 이미 공공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대 범죄가 일어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검색까지 금지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의견⑤). 순찰 인력으로 대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넓은 지역을 모두 지켜볼 수도 없다(의견⑨). 결국 3안은 시민의 불안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

따라서 S시 의회는 중대 범죄에 한해 법원의 통제 아래 기술을 쓰는 2안을 채택해야 한다.

활용 의견: ①~⑨ (9개) · 1안의 강점(의견①)을 인정한 뒤 실효성과 비용으로 반박 · 3안은 비례성으로 평가

1회 2번 약속의 변경

조건의 핵심 — 유사점·차이점을 쓰고, 그것과 관점을 **함께** 근거로 두 결정을 **각각** 평가한다. 관점 3개 이상.

의미 있는 차이 — 약속한 주체(공공/사립), 믿은 쪽의 위험 감당 능력(기업/학생), 변경의 정도(전면/절반), 변경 사유의 예측 가능성.

관점의 쓰임 — ①신뢰 보호와 ③공익 변화는 두 사례에 똑같이 작용한다. ②사정 변경과 ④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두 사례를 가른다. 특히 ④의 “대비할 능력이 더 큰 쪽이 더 많은 부담”이 판단의 열쇠다.

결론의 모양 — “둘 다 부당하되 정도가 다르다”가 자연스럽지만, “A시는 부당, C대학은 정당”도 ②를 중심으로 논증하면 가능하다.

예시답안 — 두 결정 모두 부당(정도 차이)

1004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한쪽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다른 쪽이 믿고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약속한 쪽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약속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은 세 가지다. 첫째, 약속한 주체가 <사례 1>은 공적 기관인 시이고 <사례 2>는 사립 대학이다. 둘째, 믿은 쪽이 <사례 1>은 투자의 위험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고 <사례 2>는 그런 능력이 없는 학생이다. 셋째, 변경의 정도가 <사례 1>은 감면의 전면 폐지이고 <사례 2>는 절반 축소다.

A시의 결정은 부당하다. 공동체의 결정은 공익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한다(관점③). 따라서 A시가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폐지를 이미 약속을 믿고 공장을 지은 B에게까지 곧바로 적용한 것은 문제다. 공적 기관의 약속이 5년 만에 뒤집힌다면 어느 기업도 지자체의 약속을 믿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관점①). 또한 세수 부족은 A시가 감면을 설계할 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정이다. 예측 능력이 더 큰 쪽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관점④에 따르면, 그 손해는 A시가 떠안아야 한다. A시는 신규 기업부터 감면을 폐지하고 B에게는 남은 기간 감면을 유지했어야 한다.

C대학의 결정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A시보다는 고려할 사정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을 급락은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변화이므로, 약속의 내용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관점②). 그러나 조정의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는 수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고, 대학은 이를 대비할 정보와 수단을 가진 쪽이다(관점④). 반면 D는 다른 대학 합격을 포기해 선택을 되돌릴 수 없고, 등록금 절반을 갑자기 마련할 능력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C대학은 변경을 재학생에게 즉시 적용해 부담을 학생에게 넘겼다.

따라서 C대학은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재학생에게는 기존 약속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두 사례 모두에서 약속을 바꿀 권한은 인정되지만, 그 비용을 믿은 쪽에 떠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활용 관점: ①②③④ · 차이점(예측·대비 능력)을 관점④로 연결

2회 1번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조건의 핵심 — 2027-2와 같은 틀이다. 한계와 극복 방안에 **반박한 관점을 쓰지 말 것**. 관점A를 택하고 “보상은 공동 기금으로”라고 쓰면 관점C를 끌어온 것이다.

태깅 — 관점A 지지: ①④⑧. 관점B 지지: ②⑦. 관점C 지지: ⑤. A 반박: ③. C 반박: ⑥.

사례의 열쇠 — 업데이트 미설치라는 사실이 관점B의 가장 강한 근거다. 관점A를 택하면 의견⑧로 이를 처리하고, 한계 단락에서 “업데이트 소홀”을 스스로 인정한 뒤 기술적 방안(자동 설치)으로 보완한다.

예시답안 — 관점A(제조사)

1062 자 (공백 포함)

나는 판단 과정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A를 지지한다. 책임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에게 지워야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에서 그 사람은 제조사다.

첫째, 이 사고의 원인은 임시 표지판을 잘못 인식한 소프트웨어의 판단이다. 그 판단 과정을 설계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제조사뿐이다(의견④). 반면 甲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완전자율주행 차량은 애초에 그렇게 이용하도록 허용된 것이다.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의 결과를 책임지우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의견①).

관점B는 업데이트 설치의 소유자의 몫이므로(의견②), 차량으로 이익을 누리는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의견⑦). 그러나 업데이트 알림은 자주 오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일반 소유자는 어느 것이 안전에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의견⑧). 乙이 알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오류의 책임이 甲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애초에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은 乙이다.

관점C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공동 기금으로 보상하자고 한다. 빠르고 확실한 보상이 중요하다는 점(의견⑤)은 옳다. 하지만 과실을 따지지 않으면 누구도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의견⑥). 결함이 있는 제조사와 없는 제조사가 똑같이 기금에 기대게 되면, 안전 기술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다.

물론 관점A에도 한계가 있다. 제조사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면 기업은 기술 개발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더 안전한 기술의 등장이 늦어질 수 있다(의견③). 또한 소유자는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도 불이익이 없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안전과 직결된 업데이트는 소유자의 선택에 맡기지 말고, 차량이 정차한 동안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기술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업데이트 미설치 문제 자체가 줄어든다. 둘째, 제조사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제조사가 사고 비용을 예측 가능한 보험료로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제조사의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고, 제조사는 안전 성능이 좋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안전 기술에 투자할 동기를 갖는다.

활용 의견: ①~⑧ 전부 · 한계 2개(기술 개발 위축, 업데이트 소홀) · 극복 방안은 관점B·C를 쓰지 않음

2회 2번 지역 청년 유출 대책

조건의 핵심 — 1개 선택, 의견 4개 이상, 다른 2안 평가, 자기 안의 한계와 보완(다른 안 활용 금지).

태깅 — 1안: 지지 ⑤⑩ / 반박 ①②. 2안: 지지 ①⑥⑩ / 반박 ③⑨. 3안: 지지 ⑧ / 반박 ④⑦.

풀이의 열쇠 — 의견①(“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이 1안을 약하게 만들고 2안을 강하게 만든다. 2안을 택하면 ③(역차별)과 ⑨(이직)가 한계가 되고, 보완 방안은 “할당 기준의 재설계”, “지역 안의 경력 경로”처럼 2안의 원리 안에서 찾는다. 보완으로 “정주 수당을 함께”라고 쓰면 3안을 끌어온 것이다.

예시답안 — 2안(지역 인재 채용)

1054 자 (공백 포함)

나는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규 채용 30% 이상을 도내 대학 졸업자로 선발하는 2안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청년이 떠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졸업 후 일할 곳이 없으면 지역 대학을 나와도 결국 떠난다(의견①). 2안은 이 연결 고리를 직접 잇는다.

첫째, 2안은 교육과 취업을 지역 안에서 이어 준다. 도내 대학에 진학하면 도내에서 일할 길이 열린다는 기대가 생기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역 대학을 선택할 이유도 생긴다. 둘째, 지역 인재가 지역 기관에서 일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게 된다(의견⑥). 셋째, 격차를 시장에 맡겨 두면 더 벌어질 뿐이므로, 공공이 채용이라는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의견⑩).

1안은 대학이 지역의 마지막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의견⑤). 그러나 학생의 선택을 정원으로 막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며(의견②), 지역 대학의 정원을 늘려도 졸업 후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은 결국 떠난다. 3안은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의견⑧). 하지만 현금 지원은 지급이 끝나면 효과도 끝나고, 수당만 받고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생긴다(의견④). 의료와 교육 기반이 없는 곳에 돈만 준다고 정착하지는 않는다(의견⑦).

물론 2안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 같은 능력을 갖춘 다른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의견③). 둘째, 할당제로 채용된 사람이 몇 년 뒤 수도권으로 이직하면 효과가 사라진다(의견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역차별 문제는 할당 비율을 성적 하한과 함께 운영하고,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도내 대학을 졸업했다면 똑같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할당의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지역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다. 다음으로 이직 문제는 채용 이후의 경력 경로를 지역 안에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도내 기관 사이의 전보와 파견, 직무 교육을 제도화하면, 이직하지 않고도 경력을 쌓을 수 있다.

결국 청년을 붙잡는 것은 대학의 간판이나 일시적 수당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안은 그 전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든다.

활용 의견: ①~⑩ 전부 · 보완 방안은 2안의 원리 안에서 · 1안은 ①②, 3안은 ④⑦로 평가

3회 1번 공익 제보와 비밀 유지

조건의 핵심 — 유사점·차이점을 쓰고, 그것과 관점 3개 이상으로 甲과 乙의 행위를 각각 평가한다.

의미 있는 차이 — 공익의 급박성(유아 건강/조업 구역), 다른 수단의 시도 여부(내부 보고 3회/시도 없음), 공개 범위(불필요한 배합 비율/협약 전문), 수신자(당국+언론/언론).

관점의 쓰임 — ①은 두 사람 모두에 불리하고, ④는 두 사람 모두에 유리하다(정보가 진실하고 공익적). 두 사례를 가르는 것은 ②(다른 수단이 없을 때)와 ③(권한 있는 기관 먼저, 필요 최소한)이다.

정밀한 평가 — 甲의 행위를 “공개 자체는 정당, 범위는 과도”로 나누면, 단순한 찬반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예시답안 — 甲 대체로 정당, 乙 부당

1022 자 (공백 포함)

두 사례는 조직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익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했고, 그 결과 공익적 변화와 조직의 손해가 함께 발생했으며, 공개한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은 세 가지다. 첫째, 〈사례 1〉의 공익은 유아의 건강이라는 급박한 안전이고, 〈사례 2〉의 공익은 어민의 생계와 절차적 정당성이다. 둘째, 甲은 내부 보고를 세 차례 거친 뒤 당국에 신고했지만, 乙은 내부 보고나 국회 제보 없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셋째, 甲은 공익과 무관한 배합 비율까지 넘겼고, 乙은 협약 전문을 넘겼다.

甲의 행위는 공개 자체는 정당하지만 범위에 문제가 있다. 유해 물질이 든 이유식이 계속 팔리면 유아의 건강이 침해되고, 甲은 내부 보고라는 다른 수단을 이미 시도했다. 따라서 공개는 관점②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甲은 권한 있는 식품 안전 당국에 신고해 관점③의 원칙도 따랐다. 그러나 배합 비율은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공익과 관련이 없었고, 결국 경쟁사에 이용되었다. 공개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관점③). 甲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불필요한 영업 비밀을 넘긴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

乙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개된 정보는 진실했고 어민에게 중요한 정보였다(관점④). 그러나 정보가 진실하고 유익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공개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乙에게는 내부 보고나 국회라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 협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판단하고 바로잡을 권한은 바로 국회에 있다(관점③). 또한 어민의 조업 구역 축소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생명이 걸린 〈사례 1〉만큼 급박하지는 않았다(관점②). 결국 乙은 다른 수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외교 협상 전체를 중단시켰다. 구성원 각자가 공익을 판단해 곧바로 비밀을 공개하면 국가의 대외 신뢰가 무너지는 관점①의 우려가 이 사례에서 현실이 되었다.

결국 비밀 공개의 정당성은 공익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공익을 지킬 다른 길을 먼저 찾았는지, 공개를 필요한 만큼에 그쳤는지에 달려 있다. 甲은 대체로 이 기준을 지켰고, 乙은 지키지 못했다.

활용 관점: ①②③④ · 차이점(다른 수단의 시도, 공개 범위)을 관점②③의 요건으로 연결

3회 2번 플랫폼 배달원의 법적 지위

조건의 핵심 — 하나를 골라 지지하고 나머지 둘을 모두 반박한다. 의견 5개 이상.

태깅 — 갑 지지: ①⑧. 을 지지: ②⑤. 병 지지: ②④⑦⑧. 갑 반박: ②⑤⑦. 을 반박: ①⑥⑧. 병 반박: ③.

풀이의 열쇠 — 의견④(“형식이 아니라 위험과 의존”)가 병의 원리를 가장 잘 요약한다. 갑을 택하면 ②(유연성)를, 을을 택하면 ⑥(세금 전가)을, 병을 택하면 ③(악용)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병의 예시답안은 ③을 한계로 인정하고 요건의 엄격화로 대응한다.

예시답안 — 병(제3의 지위)

1000 자 (공백 포함)

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새로운 지위를 만들자는 병의 견해를 지지한다. 보호의 수준은 일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위험과 의존의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의견④). 배달원은 근로자처럼 위험과 의존을 안고 있지만, 자영업자처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 병의 견해는 이 두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첫째, 배달원에게는 보호가 필요하다. 배달원 대부분에게 이 일은 생계의 주된 수단이며 한 플랫폼의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의견⑧). 또 배정을 거절하면 평점이 떨어지므로 사실상 지시를 받고 있다(의견①). 배달 중 사고로 다쳐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이 의존과 위험에 비해 보호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보호의 방식은 배달원의 일하는 방식에 맞아야 한다. 많은 배달원은 다른 일과 병행하며 원하는 시간에만 일한다(의견②). 병의 견해는 산재 보상과 최소 보수를 보장하면서도 근로시간 규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유연성을 해치지 않는다.

갑은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모든 보호 제도를 적용하자고 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규제와 해고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배달원이 원하는 유연한 일의 방식이 사라진다. 또한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 소송으로 다투어지기 쉬워,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지는 동안 사고를 당한 배달원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의견⑦). 법으로 새 지위를 정하면 이런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을은 독립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가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지휘를 하며 이익을 얻는 플랫폼이 져야 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내는 셈이다(의견⑥). 게다가 최소 보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지위가 기존 근로자를 그 지위로 바꾸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의견③). 따라서 새 지위의 요건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 근로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 비용이 배달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견⑤)도 있지만, 사고의 비용을 다친 배달원 혼자 떠안은 지금의 구조보다는 공정하다.

활용 의견: ①~⑧ 전부 · 갑은 유연성과 소송 공백, 을은 비용 전가와 최소 보수로 반박

최종회 1번 2027학년도 1번 — 점포세 과세 방식

조건의 핵심 — 과세 방식 선택, 의견 4개 이상,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에서 추정되는**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 장단점을 사례 본문의 계산법에서만 끌어오면 조건 (2)를 채우지 못한다.

추론의 방법 — 2장 2-4 참조. 선호 집단의 처지(점포 크기, 매출, 권한)를 계산법과 대조한다.

태깅 — 매출추산법 지지: ②④⑤⑦. 경기전망법 지지: ⑥⑧⑩. 매출추산법 반박: ①⑥. 여론의 역할: ③ ↔ ⑨(대립쌍).

주의 — 대다수 시민은 두 방식을 비슷하게 선호했다. 그러므로 의견⑨(여론 반영)는 이 선택을 결정하지 못한다.

예시답안 — 매출추산법

1045 자 (공백 포함)

여론 조사에서 각 과세 방식을 선호한 집단을 보면 두 방식의 장단점이 드러난다. 매출추산법은 대형 점포와 신축 점포 임대인, 지방 점포 임차인이 선호했다. 비싸고 넓은 점포나 매출이 적은 점포는 가격·면적 기준보다 매출 기준에서 세금이 적다. 즉 매출추산법의 장점은 실제 수익에 가깝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장직 공무원이 이 방식을 선호한 것은 조사 권한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재량과 부정의 위험이라는 단점을 뜻한다. 경기전망법은 관리직 공무원, 소형·낙후 점포 임대인, 수도권 점포 임차인이 선호했다. 관리직 공무원의 선호는 행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매출이 높은 수도권 임차인의 선호는 수익이 많아도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여 준다.

나는 T국의 시민으로서 매출추산법을 지지한다. 첫째, 세금은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례해야 공평하다(의견⑦). 경기전망법은 점포의 가격과 면적에 세율을 곱하므로, 같은 크기의 점포라면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같은 세금을 낸다. 특히 운영자와 소유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에서 매출이 적은 임차인은 수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수익을 얻은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일치해야 한다(의견④). 둘째, 비용이 들더라도 과세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공정하다(의견②). 행정 비용이 편익보다 과다하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의견⑥), 부정확한 과세가 낳는 불공평과 조세 저항의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물론 매출추산법에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약점이 있다(의견①). 조사일을 공무원이 임의로 정하고 하루 매출로 한 달을 추산하면 결과가 공무원의 선택에 좌우된다. 따라서 조사일은 무작위로 정하고, 카드 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추산을 보정하며, 점포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장을 반영한다는 장점(의견⑤)은 살리고 재량의 위험은 줄일 수 있다.

한편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 시민이 두 방식을 비슷하게 선호했으므로, 여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의견⑨)은 이 선택을 결정하지 못한다. 과세 방식은 인기가 아니라 공평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한다(의견③).

활용 의견: ①~⑦, ⑨ (8개) · 선호 집단 6개에서 장단점을 추론 · 약점(①)은 재량 통제 장치로 보완

최종회 2번 2027학년도 2번 — 국가평의회 구성

조건의 핵심 — 하나를 지지하고 두 견해를 반박, 의견 4개 이상, 지지한 견해의 한계와 극복 방안(반박한 견해 활용 금지). 5장의 보완·절충 판별표를 참고한다.

태깅 — 2장 드릴 1의 정답 참조. 의견⑩은 사례의 전제(왕정 폐지 공감)를 벗어나는 함정이다.

견해별 한계와 허용되는 보완 — A(선거): 단기주의·인기 영합 → 임기 조정, 정책 공약의 공개 검증. B(검증 선발): 기준의 편향·책임성 → 기준 공개, 결정 이유 공개. C(추첨): 책임성·숙련도 → 학습 기간, 기록 공개, 순환 교체.

예시답안 — 견해C(비례 추첨)

979 자 (공백 포함)

나는 국가평의회 구성원을 사회의 구성 비율을 반영해 무작위로 선정하자는 견해C를 지지한다. 왕정을 폐지하는 이유는 통치가 소수의 운이나 특권에 좌우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통치 기구도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야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이 나온다(의견②). 견해C는 성별·연령·직업·지역·소득·학력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므로 사회의 축소판이 통치를 맡게 된다. 둘째, 통치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치자와 피치자의 경계가 허물어진다(의견⑤).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시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만든다.

견해A는 피치자의 동의를 위해 선거를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기려는 통치자는 시민의 눈치만 살피며 눈앞의 문제에 골몰하기 쉽다(의견①). 또한 선거는 말을 잘하고 자원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해 결국 특정 계층이 평의회를 채울 수 있다. 견해B는 객관적 검증으로 식견 있는 사람을 뽑자고 한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의견④)은 옳다. 하지만 통치 능력은 타고나거나 시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덕성이다(의견⑥). 검증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평의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만의 기구가 된다.

물론 견해C에도 한계가 있다. 선택받으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책임감이 약할 수 있고(의견⑧), 무작위로 뽑힌 시민은 복잡한 국정을 다룰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선정된 구성원에게 임기 초에 충분한 학습 기간을 주고, 안전마다 찬반 양측의 정보를 공개 청문으로 제공한다. 둘째, 구성원의 발언과 표결을 모두 기록해 공개하고, 임기 종료 후 활동 보고서를 시민에게 제출하게 한다. 셋째, 임기를 짧게 하고 일부씩 교체해 경험이 쌓인 구성원과 새 구성원이 함께 일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통치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책임성과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활용 의견: ①②④⑤⑥⑧ (6개) · 한계는 의견⑧로 인정 · 극복 방안 3개 모두 선거·검증 원리를 쓰지 않음

부록

참조 자료

A 문항 일람 · B 조건 체크리스트 · C 평가 기준 · D 원고지 · E 자주 하는 실수 20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부록 A 2018~2027학년도 문항 일람	177
부록 B 문항별 조건 체크리스트	178
부록 C 답안 평가 기준	180
부록 D 원고지 양식	181
부록 E 자주 하는 실수 20	184

부록 A 2018~2027학년도 문항 일람

문항	소재	유형	자료	최소 활용	조건의 특징	수록
2027-2	국가평의회 구성	C	의견 10	4	한계·극복(반박 견해 활용 금지)	16장
2027-1	점포세 과세 방식	A	의견 10	4	여론 조사에서 장단점 추론	16장
2026-2	청소년 생성형 AI	A	의견 8	—	결정 지지·반박, 정책A·B 비교	7장
2026-1	성형수술 입법안	A	의견 10	—	3안 중 택1, 절충론·시기상조론 배제	7장
2025-2	출생 보조금	C	의견 7	—	의견 또는 새로운 논거	9장
2025-1	비영리법인 설립	A	논거 5	—	사례별 문제점 요약	7장
2024-2	봉쇄와 사이버 보안	B	의견 8	4	두 사례 논평 + 견해	8장
2024-1	벽화 철거	C	주장 2	—	요약 먼저, 새로운 논거	9장
2023-2	가스기차·중계탑	B	관점 4	—	공통 논점 제시	8장
2023-1	가상화폐 ‘리오’	A	여론 10	5	—	7장
2022-2	수문장과 배심원	B	관점 3	—	(1)의 유사점·차이점 활용	8장
2022-1	데이터 독점 정책	A	자료 8	3	—	7장
2021-2	타인사칭 재판	C	관점 3 + 의견 6	전부	다른 관점 모두 반박	9장
2021-1	과거청산 입법안	A	관점 3	—	의견서, 수정안, 소급입법 배제	7장
2020-2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A	지침 7	—	두 사례 일관 적용	7장
2020-1	형법 해석	C	관점 3	—	다른 관점 모두 반박	9장
2019-2	(자료 미확보)	—	—	—	—	—
2019-1	구조 의무	B	관점 2	—	〈질문〉 순서, 실정법 판단 제외	8장
2018-2	세대 간 갈등	A	제시문 3	전부	1300~1600자, 제시문 평가	7장
2018-1	의료 빅데이터	A	자료 6	전부	선택하지 않은 입장 반박	7장

부록 B 문항별 조건 체크리스트

답안을 쓴 뒤 해당 문항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다. 항목은 조건을 동사 단위로 쪼갬 것이다(1장).

2027-2 국가평의회

- | | |
|--|---|
| ☐ 견해 하나 선택·지지 | ☐ 나머지 두 견해 각각 반박 |
| ☐ 의견 4개 이상 | ☐ 의견을 지지와 반박 양쪽에 |
| ☐ 지지한 견해의 한계 | ☐ 한계의 극복 방안 |
| ☐ 극복 방안에 반박한 견해 미사용 | ☐ 견해A·의견① 표기 |

2027-1 점포세

- | | |
|--|--|
| ☐ 과세 방식 하나 선택 | ☐ 의견 4개 이상으로 이유 제시 |
| ☐ 여론 조사에서 추정한 매출추산법 장단점 | ☐ 여론 조사에서 추정한 경기전망법 장단점 |
| ☐ 의견① 표기 | ☐ 900~1200자 |

2026-2 청소년 AI

- | | |
|---|---|
| ☐ K국의 결정 지지 또는 반박 | ☐ 의견 활용 |
| ☐ 정책A 장단점 | ☐ 정책B 장단점, A와 비교 |
| ☐ 결정 과정(여론·자문)도 평가 | ☐ 의견① 표기 |

2026-1 성형수술

- | | |
|---------------------------------------|--|
| ☐ 1안 선택(우선 제정) | ☐ 시급성·우선순위 기준 제시 |
| ☐ 의견 활용 | ☐ 시기상조론 없음 |
| ☐ 절충론 없음 | ☐ 다른 2개 안 평가(장점 인정 후) |
| ☐ 1안·의견① 표기 | |

2025-2 출생 보조금

- | | |
|---|--|
| ☐ 갑·을 중 선택 | ☐ 선택 이유 기술 |
| ☐ 의견 또는 새 논거로 강화 | ☐ 지지하지 않는 견해 반박 |
| ☐ 의견① 표기 | |

2025-1 비영리법인

- | | |
|--|--|
| ☐ <사례 1> 문제점 요약 | ☐ <사례 2> 문제점 요약 |
| ☐ 선택 정책 지지 이유 | ☐ 다른 정책 반박 |
| ☐ 논거 활용 | ☐ 논거① 표기 |

2024-2 봉쇄와 사이버 보안

- | | |
|------------------------------------|--|
| ☐ 유사점 | ☐ 차이점(재정 지원 포함) |
| ☐ <사례 1> 논평 | ☐ <사례 2> 논평 |
| ☐ 자신의 견해 | ☐ 의견 4개 이상 |
| ☐ 의견① 표기 | |

2024-1 벽화 철거

- | | |
|---|---|
| ☐ 병 또는 정 선택 | ☐ 선택한 주장 먼저 요약 |
| ☐ 상대 입장(을 또는 갑) 반박 | ☐ 자기 입장(갑 또는 을) 강화 |
| ☐ 새로운 논거(사례의 사실에서) | |

2023-2 가스기차·중계탑

- | | |
|---------------------------------------|---------------------------------------|
| ☐ 유사점 | ☐ 차이점 |
| ☐ 공통 논점 | ☐ B의 주장에 대한 견해 |
| ☐ C의 주장에 대한 견해 | ☐ 관점① 표기 |

2023-1 리오 규제

- | | |
|------------------------------------|---|
| ☐ 규제에 대한 견해 | ☐ 여론 5개 이상 지지·반박 |
| ☐ 여론① 표기 | ☐ 900~1200자 |

2022-2 수문장과 배심원

- ☐ 유사점
- ☐ 수문장 판단 평가
- ☐ 평가에 (1)과 관점을 함께 활용

- ☐ 차이점
- ☐ 배심원 판단 평가
- ☐ ㉠ 표기

2022-1 데이터 정책

- ☐ A국·B국 중 타당한 쪽 주장
- ☐ 자료 3개 이상
- ☐ ① 표기

- ☐ 이유 제시
- ☐ 지지·반박 근거로 자료 활용

2021-2 타인사칭 재판

- ☐ 관점 하나 선택
- ☐ 의견 6개 모두 활용

- ☐ 다른 관점 모두 반박
- ☐ X·Y·Z / ① 표기

2021-1 과거청산 입법안

- ☐ 의견서 형식
- ☐ 수정안 제시
- ☐ 소급입법 판단 없음

- ☐ 입법안 평가
- ☐ 가①·나② 표기

2020-2 규제 형식

- ☐ 두 사례의 문제점 분석
- ☐ 두 사례에 일관 적용
- ☐ 규제 지침 활용

- ☐ 규제 형식 하나 선택
- ☐ 선택하지 않은 형식 반박
- ☐ 가·나 표기

2020-1 형법 해석

- ☐ 관점 하나 선택
- ☐ 각 사례의 쟁점 발견
- ☐ ㉠ 표기

- ☐ 다른 관점 모두 반박
- ☐ 각 사례의 법적 판단 평가

2019-1 구조 의무

- ☐ (1) 유사점과 차이점
- ☐ (3) 판단이 달라야 할 근거
- ☐ 관점 반영

- ☐ (2) 판단이 같아야 할 근거
- ☐ (4) 본인의 견해와 근거
- ☐ 실정법 판단 없음

2018-2 세대 간 갈등

- ☐ 갈등 최소화 방안 제시
- ☐ (나) 평가
- ☐ 제시문으로 주장 강화

- ☐ (가) 평가
- ☐ (다) 평가
- ☐ 1300~1600자

2018-1 의료 빅데이터

- ☐ 두 입장 중 선택
- ☐ 자료 6개 모두 논거로

- ☐ 선택하지 않은 입장 반박
- ☐ 자료 ① 표기

부록 C 답안 평가 기준

이 기준은 이 책의 자가 채점용이다. 실제 채점 기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며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지가 요구하는 요소(조건, 자료 활용, 분량)를 영역으로 나누어 두면 자기 답안의 약점을 찾기 쉽다.

영역	배점	상 (90% 이상)	중 (60~80%)	하 (50% 이하)
조건 충족	30	조건 요구를 모두 충족, 순서·표기·배제 조건 준수	요구 1~2개 누락 또는 표기 불완전	선택·반박 등 핵심 요구 누락, 배제 조건 위반
논증의 타당성	25	판단 기준이 명시되고 모든 단락이 그 기준에 따라 정렬됨	기준은 있으나 일부 단락이 기준과 무관	기준 없이 근거 나열, 결론과 근거 불일치
자료 활용	20	자료를 주장 문장 안에서 사용, 불리한 자료를 재해석해 흡수	활용 개수는 충족하나 요약형 인용이 많음	개수 미달 또는 자료 요약이 논증을 대신함
반박·평가·보완	15	반박마다 전제·결과·모순·수단 중 하나를 겨냥, 보완이 선택한 원리 안에 있음	반박은 있으나 평가어 위주	반박 누락 또는 절충으로 입장이 흐려짐
구성·표현·분량	10	첫 단락에 입장과 기준, 문장 명료, 900~1200자	구성은 무난하나 문장이 길고 반복	서론 과다, 분량 미달·초과

■ 채점 기록표

날짜	문항	조건 30	논증 25	자료 20	반박 15	구성 10	합계

부록 E 자주 하는 실수 20

번호	실수	고치는 법	관련 장
1	조건을 문장째 읽고 요구 하나를 놓친다	동사 단위로 쪼개 번호를 붙인다	1장
2	‘평가’를 ‘반박’으로 쓴다	장점을 인정한 뒤 한계·우선순위를 말한다	1장
3	‘각’, ‘모두’를 놓친다	조건의 핵심어에 표시한다	1장
4	순서 조건(요약 먼저, 질문 순서)을 어긴다	개요 단계에서 단락 순서를 조건에 맞춘다	1·9장
5	자료를 요약만 하고 주장과 잊지 않는다	자료 번호를 주장 문장 끝 괄호에 둔다	2·6장
6	활용 개수를 딱 하한만큼 쓴다	하한 + 1~2개를 목표로 한다	2장
7	불리한 자료를 무시한다	인정-한정-반박으로 흡수한다	2·4장
8	함정 자료를 억지로 쓴다	연결 논리가 없으면 쓰지 않는다	2장
9	유사점·차이점이 사례 요약이 된다	네 축으로 비교하고 판단에 영향을 주는 차이만 쓴다	3장
10	첫 단락의 차이점을 뒤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	평가 단락에서 차이점을 근거로 재사용한다	3·8장
11	반박이 평가어로 끝난다(“비현실적이다”)	전제·결과·모순·수단 가운데 하나를 겨룬다	4장
12	반박 대상 둘 중 하나를 한 줄로 끝낸다	반박마다 비슷한 분량(200자 안팎)을 준다	4·9장
13	결론에서 절충으로 물러선다	보완은 선택한 원리 안에서만 한다	5장
14	극복 방안에 반박한 견해를 끌어온다	“이 방안이 반박한 견해의 원리를 빌려 오는가”를 묻는다	5장
15	서론이나 배경 설명으로 시작한다	첫 문장에 입장, 둘째 문장에 판단 기준	6장
16	한 문장에 주장 셋을 담는다	한 문장 한 주장, 70자 이내	6장
17	실정법 조문·판례를 인용한다	원리(예측 가능성, 비례성 등)를 일상어로 설명한다	6장, 3부
18	분량 초과를 막판에 발견한다	개요에 단락별 줄 수를 적고 단락마다 확인한다	6장
19	관점을 소개만 하고 사례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관점으로 보면 사례의 결론은”을 쓴다	9장
20	새로운 논거로 제시문의 문장을 바꿔 쓴다	사례의 사실에서 논거를 만든다	9장

■ 나의 실수 목록

모의고사와 연습 문항을 다시 쓸 때마다 반복되는 실수를 적는다.

AI 논술 첨삭 서비스

써봄

writegrow.net

이 책으로 쓴 답안, 이제 바로 첨삭받으세요.

Google Gemini 3.1 Pro를 활용한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고칠 곳을 짚어 줍니다

논리구조

단락의 배치와 흐름이 판단 기준을 따르는가

근거타당성

자료와 근거가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가

주장명확성

입장과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가

언어표현

문장이 정확하고 간결한가

영역별 점수와 함께 **강점·개선점·구체적 제안**을 담은 상세 피드백을 제공하고, 첨삭 결과는 PDF 리포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DOCX·TXT 파일을 올릴 수 있고, 여러 편을 한 번에 올리는 일괄 첨삭(최대 10편)도 지원합니다.

이 책과 함께 쓰는 법

1

책의 연습 문항·모의고사를 55분 안에 씁니다

워크시트로 설계하고, 작성란이나 부록 D의 원고지에 답안을 씁니다.

2

답안을 써봄에 올려 첨삭을 받습니다

손글씨 답안은 옮겨 적어 TXT·DOCX로 올리면 됩니다. 영역별 점수와 고칠 곳이 바로 나옵니다.

3

책의 해설·점검표와 함께 다시 씁니다

첨삭 결과를 부록 C의 평가 기준, 각 장의 점검표와 대조하고 약한 영역의 1부 드릴로 돌아갑니다.

회원가입하면 3회 무료 분석

요금제	월 이용료
개인 — 논술 수험생	9,900원
교사 — 논술 교사·학원	29,900원

요금과 제공 내용은 2026년 9월 writegrow.net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writegrow.net

QR 코드로 바로 접속